

본 책자는 『남북대화유경험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11차~17차)에서의 발표와 토론내용을 수록한 것입니다.

본 회의록 내용은 당원의 공식입장이나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밝혀둡니다.

남북대화유경험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록(96-II) (제11차~제17차)

1996. 12



통 일 원
남 북 회 담 사 무 국

목 차

1. 제11차 회의	3
* 주제 :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변형된 북경회담을 제의할 경우 예상되는 회담 제의 내용 및 우리의 대응방향(남북대화 시나리오)	
2. 제12차 회의	25
* 주제 : 8·15 대통령 경축사 관련 북측 예상태도 및 향후 대처방향	
3. 제13차 회의	57
* 주제 : 북한의 출소 공산주의자 김인서 송환 요구 공세에 대한 대처방향	
4. 제14차 회의	79
* 주제 :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향후 북한의 예상태도 및 대처방향 검토	
5. 제15차 회의	105
* 주제 : 향후 1년간 남북관계 예측 및 남북대화 전망	
6. 제16차 회의	135
* 주제 :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미·북관계 전망	
7. 제17차 회의	151
* 주제 : '96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97년도 남북대화 추진방향	

1. 제 11 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변형된 북경회담
을 제의할 경우 예상되는 회담 제의 내용 및
우리의 대응방향(남북대화 시나리오)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6. 7. 18(목) 16:00~18:05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변형된 북경회담을 제의할 경우
예상되는 회담 제의 내용 및 우리의 대응방향(남북대화 시나
리오)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4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송한호, 최문현,
곽희정, 유완식, 이영호, 차상필, 신봉식,
조덕송, 김동환,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연락부장, 유인택 협력관, 분석과장, 연락과장,
관계관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제11차 남북대화유경험 비상임자문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께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국장 : 지난 7월 15일 「조평통」이 남북대화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측의 성명을 접해온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지 않고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입장에서는 북한이 남북대화에 대해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중앙일보와 문화일보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고, 미국무성에서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 북한이 10대 강령에서 얘기한 것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는데, 7월 15일이라는 시점에서 다시 남북대화에 문호를 열어 놓고 남조선 당국자도 예외가 없다고 한 것이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담사무국의 입장에서는 대화가 된다는 가정,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일이 없고 긍정적인 상황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생기는데 만약 긍정적으로 보고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온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호응해 나온다면 소요가 있어야 할텐데, 북한측이 북경 회담을 제의하면서 남북당국간 회담인 것처럼 표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급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변형된 북경 회담을 제의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 주어진 주제가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변형된 북경 회담을 제의할 경우 예상되는 회담제의 내용 및 우리의 대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때마침 뉴욕에서 조만간 미국과 한국이 공동으로 북한에 대해서 공동설명회를 한다고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보도내용이지 공식적으로 발표

된 것은 없는데, 만약 북한이 다급한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일부 공동설 명회에 임한다든지, 자기 식으로 남북대화를 제의해 온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형태일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회답사무국에서는 우선순위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남북대화에 있어서 1%의 가능성에도 100%의 대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하실 위원이 세 분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그러한 점을 참고로 하시고 발표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유완식 위원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유완식 위원 : 주어진 제목은 변형된 북경회담인데 폭을 넓혀서 살펴 보았습니다.

북한의 예상되는 회담제의 내용은 먼저 북한의 기본 입장을 본다면 북한의 당면 2대 해결과제는 첫째, 북한체제의 안전보장이고 둘째, 북한경제난 해결이라고 보아집니다. 북한체제의 안전은 미국의 보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보고 대미관계 개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 경제난 해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남북경제협력·교류가 북한 체제의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북한체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이전에는 남북 당국차원의 경제협력·교류를 거부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입장의 가변성이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 본다면 북한의 식량난, 경제난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북한 당국이 판단할 경우에는 선 경제난 해결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북한이 최근 시위 폭동 진압용 장비 도입설은 주목할만한 사실입니다.

가변성의 두번째는 미국이 남북관계 개선이 없는한 미·북관계 개선을 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확실하게 밝히고, 북한이 그렇게 인식할 경우에는 북한 입장이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태도로 보아서는 가능성이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북한입장의 가변성을 우리는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미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미·북관계 개선 즉,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북한을 미국의 영향권 안에 넣어서 북한을 변화시킨다는 정책은 불변이라고 북한이 인식하고 있을 것으로 보아서 북한입장의 가변성은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올해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에는 미국의 대북한정책이 보수적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있어서 북한이 입장을 변화하여 북·미관계 개선과 남북관계 개선의 병행을 수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선 경제난 해결로 입장을 전환할 가능성은 북·미관계 개선과 함수관계에 있다고 보입니다. 즉 북한의 대미관계 개선이 지지부진한 경우에는 입장전환의 가능성이 있고, 반대로 대미관계 개선이 진전될 경우에는 그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한편 중국의 대북 식량 및 경제지원도 종속변수로서 주목해야 한다고 봅니다.

북한의 예상되는 회담제의 내용을 4~5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한반도 내에서의 남북당국간 경제회담입니다. 어떤 경우에 남북경제회담을 제의하냐면 남북관계 개선이 없으면 미·북관계 개선도 거부한다는 미국의 확고한 의지 표명이 있고, 한편 북한의 경제난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자인할 경우에는 좋든 싫든 한반도 내에서 남북당국간의 경제회담에 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4자회담에 대한 역제의로 북·미간의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과 남북경제회담 병행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의 남북경제회담 제의 목적은 남북직교역 확대와 한국기업의 대북 투자 유치에 있습니다.

두번째 시나리오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가동입니다.

북한의 경제난이 북한체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한편 북·미관계

개선의 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남북경제회담 대신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제의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베이징 또는 제3국에서 남북차관급 접촉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95년 여름 베이징 쌀회담은 태도가 애매했지만 당국회담으로 공식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북경에서 남북차관급 회의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제의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노리는 것일 것이라고 봅니다.

첫째는 한국의 대북 식량 추가지원이고 둘째는 남북당국간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북·미 쌍무협상 개최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네번째 가상은 남북 농업회담 제의할 가능성입니다. 95년 베이징 쌀회담에서 북측은 우리측에게 농업기술, 비료 등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회담 제의의 참 목적은 역시 북·미관계 개선의 촉진에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나 남북경제회담 제의의 서곡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응책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본방침은 남북당국간 회담을 한반도에서 개최해야 하고 북한의 대남비난을 중지해야 한다는 세가지 원칙(조건)을 유연성있게 적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즉,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당국간 회담이어야 한다는 원칙만 지키고 나머지 두가지 원칙은 유보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가지를 관철시킨다는 것은 너무 경직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본방침의 두번째는 북한이 4자회담과 남북당국간 대화에 응하면 한국이 북한에 식량·경제지원을 할 것이라는 공약을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 대책을 생각해 보면 북한이 한반도 내에서 남북당국간 경제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할 경우에는 4자회담과 관계없이 환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이 남북회담을 대미관계 개선용으로 이용하는 것을 견제해야 됩니다. 또 투자보장 협정을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의 제도적 장치안과 남북직교역안 등을 마련하여 회담에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담 개최와 동시에 대북 식량추가지원을 적당한 수준에서 약속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의 가동을 제의할 경우에는 남북경제 협력에 적극적임을 감안해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마스터 플랜, 즉 남북교역과 합영합작의 청사진을 마련하여 회담에 임해야 합니다.

북경 또는 제3국에서의 남북차관급 접촉을 제의할 경우에는 한반도내가 아니더라도 북한이 남북당국간 회담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수용해야 합니다. 또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위한 경제회담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됩니다.

회담에서 북측이 식량의 추가지원을 얻으려는데 주목적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우리측은 대북식량지원을 약속하지 않고, 남북경제협력을 실시하면 북한의 식량난은 해결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농업회담을 제의할 경우에는 남북당국간 회담이 분명할 경우에는 개최장소가 국외라고 하더라도 수용해야 합니다. 북·미협상의 분위기 조성에 이용하려는 북한의 정치적 기도는 견제해야 됩니다.

회담장소가 한반도내일 경우에는 소규모 대북식량 추가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안하고 싶은 것은 8.15 경축사에서 4자회담 제의에 대한 동의를 촉구하는 동시에 남북 양자회담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밝히고 남북경제회담을 희망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4자회담이 아니면 남북간에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잘못된 생각입니다. 역시 최선의 것은 남북 직접대화이고 4자회담은 차선책이라는 인식을 국내외에 줄 필요가 있습니다. 4자회담과는 관계없이 남북 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상필 위원 : 남북간의 경제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두가지 시나리오로 요약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지난번 북경회담 때 우리측 제의가 한반도내 개최, 남북당국간 회

담, 대남비방중지의 조건을 달았는데 그것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전제가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북한이 경제난 해결을 위해 어떤 제의가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현재의 북한 입장을 생각해 보면 먼저 지금은 김일성 유훈통치이고 김정일은 국가주석에 오르지 않아 리더십이 미확립되었기 때문에 새롭게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부강경파가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외적으로 조건이 좋아진 것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감안해서 북한은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4자회담과 관련해서 북한이 경제적인 실익을 요청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교류를 통해서 쌀 등 물자지원을 해달라는 것을 우리에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KEDO방식으로 쌀 등 기타 물자를 구호요청할 수가 있고, 우리 정부를 배제하고 민간과의 협상을 해서 지원해 달라는 제의가 있을 수있으며, 북·미회담, 북·일회담 등이 모두 경제와 관련된 회담이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것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미국을 통한 간접 제의가 우리와 관련은 있지만 직접적인 대화창구는 미국입니다. 직접 한국에게 남북회담이나 교류 제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4자회담 수락과 관련시켜서 쌀지원을 요청하고 또 4자회담 공동설명회의 조건으로 쌀지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한·미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외에 일본에게 쌀을 지원해 달라.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나진·선봉 등 자유무역지대에 한국기업이 참여하게 하고 합영·합작하는 방식을 하기 위해서 9월 13일부터 나진·선봉지역에서 투자설명회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의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일본에 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 첫번째는 우리와 직접 대화하지 않고 제3국이나 미국을 통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시나리오 두번째는 15일자 조평통 성명과 관련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는 두가지 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견해와 무엇을 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설이 있는데, 최근에 북한정세로 봐서 심각한 경제난이 사회불안과 정치안정에 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더욱이 금년도 작황으로봐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것이 지속되면 정권의 붕괴까지 가지 않겠느냐 하고 우려한 나머지 새로운 제의가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또 일관되게 우리가 대북정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북경에서 제시한 3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제의를 일부 수용하는 것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북·미회담이 잘 진전되지 않아서 필요한 쌀 추가지원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에 조평통 성명같은 것이 나왔고 그리고 우리와 하자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의할 수 있는 내용이 쌀 100만톤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 외 에너지 등 의료용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번에 나온 것은 정부당국자간의 회담이 아니겠느냐 하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소는 북경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반도 내에서의 회담은 어떻게 되느냐. 휴전협정 파기로 인해서 판문점의 경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 외의 회담 장소는 서울과 평양인데 그것은 북한측이 어렵울 것 같기 때문에 장소는 북경으로 하는데 정부당국자 회담으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번 제의와는 다른 변형된 제의가 아닌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북간의 관계에서 우리의 입장은 교류협력을 해서 평화적인 통일을 하자는 것이고 또 남북간에 긴장완화를 할 길은 그길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 종전의 우리 입장인데 비해서 지금은 남북간의 평화적인 통일은 사실상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리고 북한은 붕괴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보는 것일 일반적입니다. 그것은 김일성 사후 북한체제가 흔들리지 않겠느냐. 리더쉽의 빈곤과 경제난 등으로 체제유지가 더 이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종전의 우리 입장과 앞으로의 우리입장은 어떻게 되어야 되겠느냐?

북한이 붕괴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것이 예상되느냐. 하나는 남침가능성입니다. 두번째는 자체붕괴가 될 경우는 쿠데타로 다른 정부가 탄생할 수가 있

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대응은 우리의 국방력, 행정력, 경제력을 제고해야 할 것입니다. 난민대책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볼 때 북한의 붕괴는 기정사실로 보고 다만 시기와 방법만이 문제가 된다고 전제하고 급격한 북한의 붕괴는 방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 행정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지 않느냐. 또 난민대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할 경우에 우리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 경제는 파탄되어서 재건하는데 30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의 월남과 같은 상태가 될 것입니다. 또 자체붕괴의 경우도 대단한 비용부담 때문에 앞으로 정부간 대화와 협력은 계속해야 됩니다. 또 민간의 대북접촉이나 협력도 허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안별 문제에 대한 대처는 두가지 기준에서 생각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방안은 북한이 급격한 붕괴와 연계되는 것인가의 여부, 두번째는 그것이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계되는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해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원칙하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 우 위원 : 북한에서 변형된 북경회담을 제의할 것이냐 하는 가능성을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가급적이면 직접적인 제의는 회피할 것이고 간접·우회적 방법으로 우리측이 제의토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의내용에 있어서는 1단계에서는 북한이, 예를 들면 나진·선봉 국제투자포럼과 관련해서 남북 당국간 협의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단계는 수재물자 수송문제 관련 실무회담이라든지 투자보호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을 하자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들을 모두 우리측에서는 먼저 발휘하도록 유도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한 근거는 북한의 경제사정이 어렵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사자

발생, 인민군 1일 죽 한끼먹기 운동 시작이라든가, 공장의 부속품을 중국에 팔아 먹어서 공장 등 산업 마비가 확산되고, 북·미, 북·일관계에 있어서 빨리 개선되지 않고 또 남북대화라는 문제가 항상 걸려 있다는 점 등을 환경적인 여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거의 두번째는 7월 15일 조평통 성명입니다. 조평통 성명이 나와야 할 상황의 발전이나 상황의 변화가 없는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슈가 없는 상태에서의 성명을 냈다고 보여집니다. 성명내용은 남북대화 중단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남측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전쟁준비, 외세의존을 하지 말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북한에서 늘 얘기하던 것이고 이 시점에서 그러한 성명을 할 필요성이 과연 있었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봤습니다. 또 그러면서도 당국간 대화를 포함한 남북회담의 문호는 열려 있다는 소리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평통 성명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네들의 입장과 체면이 그다지 손상되지 않는 조건이라면 남북당국간 회담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신호를 보낸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우리의 대응방안으로는 4자회담과 분리해서 남북당국간 회담으로 끌어 나가야 되는데 우선 북한이 대화를 제의하도록 관망내지 유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북한이 4자회담을 수락하고 별도의 남북대화 수용 가능성 확인될 경우에는 우리가 선제의를 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담형식은 경제공동위원회 소집 형식이어도 괜찮다고 봅니다. 회담장소는 가급적 판문점으로 유도하고 아니면 서울, 평양으로 해야 됩니다.

제의하는 방법은 우선 8.15 경축사에 민족공동번영 정도로 예시해 놓고 북측의 반응을 보아 가면서 제의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세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먼저 송한호 위원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송한호 위원 : 북한이 남북당국간의 대화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겠는가 하는 것과 관련해서 15일자 조평통 성명을 볼 때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군사연습, 무기도입을 혈뜰고 국제공조체제를 굴욕적인 행동으로 모독하고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망언을 하고 있을 것을 볼 때 현정부와는 대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은 나타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이 대화에 대한 북한의 새로운 변화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도 있습니다만 그것은 북한이 사용하는 용어를 잘못 이해한데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도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평화와 통일, 민족의 번영을 위한 사람이라든가, 또는 민족 자주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다고 한 것이 바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군 주둔에 찬동한다든가, 공조체제를 위해서 힘쓴다든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무기도입을 한다든가,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993년 1월 신년사에서 김일성이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는 사람들과는 과거를 묻지 않고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신문에서는 해설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새로운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 당국간 대화를 진지하게 진전시킬 용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잘못 해석한 것입니다. 민족자주의 입장은 것은 미군철수 주장 등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그 후에 해설적으로는 최득신같은 사람이 민족자주의 입장에 서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현정부와 대화한다는 것을 북한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당국에서 언론에서 잘못 해석해서 국민들이 혼선을 일으킨다든가 오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물론 당국 차원에서는 1%의 가능성이 있더라도 100%의 대비한다는 것은 좋지만 언론에서 잘못해서 국민을 오도하하고 마치 북한은 대화할 용의를 가지고 있는데 한국이 반통일적이고 반대화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해를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국에서는 북한이 이러한 성명이 어떠한 내용이다, 대화를 하자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지는 조치가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명내용을 볼 때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 남북당국간 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열렸던 변칙적인 쌍회담 형식의 회담

을 하자고 제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도 우리 정부당국이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고 제의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내에서 진보주의자라든가 단체에서 민족주의를 내세워서 북한에 대해서 쌀지원을 해야 된다, 기아선상에 있으니까 도와주어야 된다는 여론을 일으켜서 우리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려는 통일전선전술적인 차원에서는 할 수는 있지만, 남한당국이 북한에 대해서 쌀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해서 북경에서 변칙적인 회담을 하자고 제안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7월 15일 시점을 선택해서 이러한 성명을 냈느냐 하는 것은 그들이 예전에 들고 나왔던 8.15 범민족대회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와 통일문제, 민족자주의 입장에서 서로 사람하고는 대화를 하는데 현 정부 당국자도 예외는 아니다 라고 된 것은 결국 현정부 당국자를 반통일, 반민족 세력으로 매도하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정당·사회단체연합회의이라든가 혹은 다른 정치협상회의의 타당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범민족대회를 그들의 의도로 끌어 나가 보려고 하고 또 우리 내부에서 범민족대회를 추진하려는 세력들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고 우리 정부를 반민족집단으로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제가 볼 때는 우리가 4자회담을 제의해 놓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를 북한이 수락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방법의에는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시점에서 4자회담을 회색시킬 우려가 있는 북한의 제안은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우선은 4자회담 내에서 대화가 성립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제회담을 북한이 제의한다는 것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입각해서 남북경제협력공동위를 개최하도록 북한이 호응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추진할 수는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이상에는 우선 4자회담 테두리 내에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남북당국간 대화를 8.15를 기해서 대통령이 제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봉식 위원 : 최근 북한이 태도변화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약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김정우 등이 국제무대에 나와서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여러 가지 투자를 받아들일겠다는 것 중에서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남한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보장도 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과거와는 다른 유회된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북한이 대화를 어떠한 입장에서 제의해 올 것이냐. 또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 보다도 원칙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에 대한 경제적인 침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우리의 전략적인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사회가 폐쇄되어서 정보유통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동구처럼 밑으로부터의 혁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외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가치판단의 기준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굶어 죽으면서도 어떠한 행동을 하려는 뜻조차 못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그 사회가 얼마나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다는 하나의 징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제분야에서는 진전이 되네, 안되네 하면서도 조금씩 진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포에 대우공단이 들어가는 등 규모도 커지고 있고 특히 나진·선봉지구에 한국의 기업들이 많이 와달라고 SOS를 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이 식량난이나 경제난을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단순한 무상지원이라는 것은 그 규모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북한도 이러한 어려움을 경제를 통해서 해결할 것 같으면 경제협력이 되었던 합영, 합작이 되었던간에 경제적으로 해결해야만 원천적인 해결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아무리 북·미관계가 개선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수십억달러를 지원한다고는 생각치 않을 것입니다. 북한도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생계수단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절실히 느낄 것입니다. 국제적십자사와 남한 종교단체에서 보내봐야 그것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한도 여기에 대한 기대도 크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도 살길은 이제부터는 어차피 자국 내에서의 인력을 활용한 부가가치의 생산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뚜렷히 느껴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화가 어떻게 진행되건 간에 현실적으로 우리 민간기업의 대북진출은 어떤 형태든지 적어도 억제는 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각적으로 오히려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위협이 따르고 투자에 대한 보장도 없지만 그것은 민간기업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서방기업과의 합작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제3국에 설립된 법인을 통해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많은 우리 기업들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과 공동생산을 하면서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갖게 하는 것이 밑으로부터의 혁명역량을 길러주는 장기적인 포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봤을 때 무조건 북한이 미우니까 어떠한 형태의 상호협력도 할 필요가 없다고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상호이익이 있을 때는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것이 회담을 통해서건 회담을 통하지 않건간에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기업들도 굉장히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력을 끌어들이어서 국내외적인 문제를 야기하는 것보다도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의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우리 기업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북한의 경제발전의 저력을 심어주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한가지 우리가 염려해야 할 것은 북한의 식량난이 주민의 식량난으로 그치는 한은 계속 그러한 체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군사식량난까지 확대되어서 군까지도 식량난에 허덕일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서 어떠한 불장난을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조금씩 열어주되, 무상원조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합영, 합작의 형태를 통해서 또는 노동력을 활용해서 임금만 주는 협력방안을 통해서도 그들의 숨통을 틔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부가가치가 식량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시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가 장기적

인 전략으로서 추진해야 할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북한이 이번에 어떠한 형태로 회담을 제의할 것이냐 하는 것은 북한의 경제가 취약한 상태에서 체제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북한은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대화를 통한 공식적인 지원요청은 당분간 없으리라고 보고 극단에 간다고 하더라도 불장난을 할 가능성이 많지 패배자 입장에서 구걸하는 식의 협력은 절대로 요청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환 위원 :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북한에서 회담을 제의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경제문제에 관련한 회담을 하자고 변형된 모습으로 제의해 올 때 그 때 우리가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제안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말씀을 종합해 보고 국내에서 논의된 것을 종합해 보면 우선 북한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회담을 제의했다고 보면 무엇 때문에 했겠느냐,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는 회담을 자신들이 원하고 있는데 남한에서 기피한다는 전략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한 것, 두번째는 4자회담과 관련해서 입장이 어려워진 것을 모면하기 위한 것, 세번째는 진실로 경제문제를 논의해서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생각이 있는 것 등 이렇게 몇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하는 2가지는 지금까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가 되었고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있으리라고 보는데, 북한이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만나자 라고 제의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나? 지금 말씀들이 계셨듯이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 쉽게 나누어보면 무엇을 달라 하는 것과 앞으로 경제문제는 민간들이 투자를 하는데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보장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정부로서의 기능을 하자는 2가지 안입니다. 후자의 경우는 종전에 우리측에서 민간경제협력의 전제를 당국자간에 보장협정이 있어야 한다

는 것을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가령 그러한 것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고 나온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달라는 얘기를 내놓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숨겨진 뜻은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을 배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본적인 입장에서 우리는 급할 것이 있느냐?

지금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북한이 경제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긴박한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변형된 형태로 회담을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합의서에 명백히 서명해서 발효된 것이 있으니까 이 절차에 따라서 하자,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장소도 문제될 것도 없고 격도 문제가 될 것이 없고 지금까지 전금철이 어떤 자격이나 하는 것도 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남북기본합의서 원칙에 입각해서 얘기를 하자고 나서면 우리가 회담을 기피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을 것이고 따라온다면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그만이라는 이러한 입장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가지 큰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경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서 결국에는 예측할 수 없는 사단이 벌어질 것이 우려된다는 것입니다. 차위원회에서는 30년 회복기간이 필요한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과연 그렇겠느냐. 어떠한 도발이 있을 때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 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피해망상에 걸려 있지 않느냐. 어째서 그렇게 되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짐작할 수가 없고 그 근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미국은 미국의 입장에서 남북을 다루어 나가는데 어떠한 방향을 잡아놓고 그러한 방향으로 끌어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이러한 얘기도 있는 것이 아니냐.

가령 소프트 랜딩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북한의 소프트 랜딩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우리와 협의를 해서 남북간에 평화적으로 통일이 언제 될 것이냐. 이러한 것도 우리는 조금더 면밀하게 실상과 허상을 구분해 나가

면서 따져봐야 될 것입니다.

제가 기독교방송을 듣다가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운 놀부전이 전국에 공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놀부가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다고 해서 북한이 어렵게 고생스러운데 모른체 해서야 되겠느냐 하는 쪽으로 연극을 만들어서 원하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지 가서 공연을 하겠다고 방송되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인도적이라는 이름을 쓰고서 근거없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가령 쌀 관계 얘기를 인도적인 문제로 얘기를 한다면 그보다 더 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남한에 있습니다. 이산가족문제입니다. 왜 함께 논의를 못하느냐. 남북간에 인도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만나자. 쌀 문제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그 문제 중의 하나다. 이렇게 우리의 입장을 정리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가령 북한에서 변형된 모습으로 경제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하자는 경우에는 우리가 고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해가면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이러한 입장에서 우리의 태도를 정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최문현 위원 : 변형된 남북대화 제의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비는 해야 됩니다. 변형된 대화제의를 내용은 쌀을 달라든지 할 것입니다. 식량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대화는 원치 않지만 남한이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기기 위해 장난을 칠 가능성은 있는데 거기에 대비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 묘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정당당하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묘안을 찾으려고 하면 이상하게 꼬일 것입니다. 북경에서 회담하자고 팩스를 보낸다든지 미국,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는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차드슨이나 팩스를 통해서 장난치는 것을 받으면 안되겠고, 상설 전화나 방송을 통해서 북경에서 회담을 하자면 거부하지 말고 일단은 서울이나 평양, 판문점에서 하자고 메시지를 띄어놓고 그 사이에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여론도 측정해 보고 신중하게 협의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슨 제의를 하건 우리는 공식적으로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차관을 보낸다든지 북경에서 만난다든지 하지 말고 미국과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 북한이 굳이 북경에서 하자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보는 것입니다. 회담 의제는 북한에 대한 쌀지원으로 국한하지 말고 식량 지원 등 남북간에 경제문제 등으로 한다면 북경회담도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해서 4자회담을 전제조건화 한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을 비중있게 다룰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남북당사자 우선을 앞세워야 되기 때문에 4자회담은 언제든지 차선책으로 해야 됩니다. 북한에서 무엇을 한다고 해서 4자회담을 조건화한다든가 성급하게 나간다든지 하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경회담에 응했다고 해도 절대로 차관급 이상의 대표는 보내면 안되고 성급하게 쌀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안되겠고 주더라도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연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무조건 무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철광석을 받는다든지 대여한다든지 하는 대가를 받고 주는 것으로 기본 상식선에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조평통 성명을 보고 느낀 것은 이 논리 그대로 보면 김영삼 대통령이 통일대화를 방해하는 사람이니까 제거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타도대상이고 북한의 적이 아니라 민족의 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왜 이러한 것을 방설했느냐 하면 북한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현 남한정부라는 것입니다. 인민들에게 쌀을 주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미국이 하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외국이 쌀을 주려고 해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북한을 괴롭히는 것이 남한이고 북한을 괴롭히는 한은 김영삼 대통령의 임기 중에는 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을 가지고 장난치지 말아라. 그리고 8.15 기념사에서 남북대화를 가지고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남한의 주사파들이 현혹되지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고, 4자회담에 대해서 남한에서는 입을 다물어라 하는 것이고, 국회에서 야당이 연합

해서 김영삼 정부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도 합심해서 싸워라 하는 통일전선전략의 선동의 메시지가 들어 있는 것을 볼 때, 조문사과하고 한미공조를 중지하고 무조건 식량원조를 하는데 방해하지 말라는 조건이라면 회담한다는 메시지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까지는 깨끗한 태도, 정정당당한 태도의 회담은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2. 제 12 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8.15 대통령 경축사 관련 북측 예상태도
및 향후 대처방향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6. 8. 20 (화) 16:00~18:1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8. 15 대통령 경축사 관련 북측 예상태도 및 향후 대처방향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6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송한호, 최문현,
유완식, 차영구, 이영호, 이서항, 김기환,
차상필, 신봉식, 조덕송, 이경숙,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유인택 협력관, 관계관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남북대화유경협 비상임자문위원회 제12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국장 : 그동안 판문점 남북직통전화가 막혀있었으나 북한에서 홍수로 떠내려온 시신을 주고 받음으로 해서 남북적십자간에 전화통지문을 주고 받았고 연락관들이 만나는 등 그동안 중단되었던 일들이 판문점에서 잠시 진행되었습니다.

배경과 동기가 어떻든간에 북한에서 소설가 김하기씨가 넘어간데 대해서 신속히 돌려 보내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북한이 유연하게 대남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에 대해서 견해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예컨대 대남유화 태도의 일환이 아니라 김하기는 친북인물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것보다는 남한에 부식시켜서 활동하도록 하는 것이 북한의 이익에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돌려 보낸 것이라는 판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기 때문에 국경에서의 외교적 절차나 공안당국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다니는 것이 안승운 목사 때문에 말썽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것도 골치 아프게 생각해서 신속히 돌려보낸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김하기씨를 판문점으로 돌려 보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으로 추방하는 형태를 취했습니다.

경수로 지원사업이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한적이 국제적십사를 통해서 북한에 수재물자를 간접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한적에서 여러차례에 걸쳐서 상당한 액수의 지원물자를 보낸 여세를 몰아서 국제적십자사에 한가지 요청을 했습니다.

국제적십사를 통해서 지원할 것이 아니라 남북적십자간에는 84년도에 남한에서 수재가 일어났을 때 주고 받은 선례도 있고 지금도 남한에서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 더구나 남북이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보면 재난이 있을 때 적십자사를 통해서 서로 지원하도록 합의해 놓은 만큼 남북적십자사가 직접 만나서 수재물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규모있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서 국제적십자사에 매

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전달해 달라고 했더니 북한에 들어가 있는 요원이 자기가 하는 일이 그것으로 인해서 중단될까봐 그러는지 전달을 하지 않고 9월에 자기가 임무를 마치고 새로운 요원이 오면 그 사람에게 부탁해라 하고 전달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는 일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새로이 갈 사람이 정해져 있고 그 사람은 자기가 들어가면 전달하겠다고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배경에서 지난 8.12 남북적십자회담 제의 25주년을 기념해서 다시 적십자회담을 제의하는 총재성명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명에서 남북적십자인들이 직접 협력을 한다면 더 일을 훌륭히 해나갈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하고 총재, 부총재 회담을 다시 한번 촉구하면서 어떤 형태로든지 어떤 장소에서든지 조건없이 남북적십자사가 만나서 협력사업을 하자고 제의를 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으로서는 남한으로부터 할 수 없이 받아 먹을 태도로 나오게 될 때는 만만한 것이 적십자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오늘 토론은 8.15에 대통령 이름으로 경축사가 나갔고 그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고 그동안 말이 많았던 대북정책을 정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도 인도적 차원의 지원, 경협차원의 지원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북한의 일차적인 반응은 공교롭게도 한총련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북한은 한총련 사건과 경축사를 결부시켜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서는 북한이 소련, 중국도 아닌 미국에 의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미국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끊임없는 설명을 그동안 들어왔지만 결론은 북한이 원하는 것은 남한으로부터 얻을 방법밖에 없다는 것이고 북한에서도 그것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우리 스스로도 북한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12 대북제의나 8.15 경축사에 대해서 당장은 긍정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어떠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견해도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께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대북지원문제를 중심으로 발표를 해주시겠고, 유완식 위원께서는 남북대화측면과 북한의 예상태도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부내에서 8.15 경축사 후속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1월 대통령선거 때까지는 북한을 달래서 말썽을 일으키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는 추세에 맞추어서 미국의 요구가 간곡하니까 우리도 미국에 대한 성의표시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인도적인 차원에서의 대북지원으로 성의표시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8.15 후속조치 차원에서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북한에서 남북적십자회담에 긍정적으로 호응해 온다든지 또는 남북당국간 대화에 호응해 온다든지 또는 4자회담에 지금보다는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서 4자회담에 호응하는 방향으로 태도를 바꾼다든지 했을 때 그만큼의 상응하는 유인책을 강구하고 있고 또는 더 적극적으로 나오면 나오는데 대한 대북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등 단계적인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먼저 유완식 위원께서 말씀해 주시고 김기환 위원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유완식 위원 : 8.15 경축사에 대해서 북한이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대목을 간추려 보았습니다.

첫째, 4자회담의 주의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라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둘째, 4자회담의 주당사자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4.16 4자회담 제의 한·미공동발표문에서는 양국 대통령은 새로운 항구적 평화체제를 추구하는 것은 남북이 주도해야 하며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미국과 북한간의 별도 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4자회담의 주당사자 문제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점을 북한이 주목하고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셋째, 4자회담의 주의제와 부속의제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미국에 요구하는 4자회담 설명을 한국 대통령이 설명하는 형식이 되어 버렸습니다.

넷째,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주로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당국간의 협의과제는 인적·물적교류의 안전보장이라고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은 남북경제교류협력을 흡수통일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

니다. 상식적인 얘기지만 남북경제교류협력의 틀을 밝혔다는 점에서 북한이 주목하리라 생각됩니다.

북한의 8. 15 경축사에 대한 예상태도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첫째, 북한은 4자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한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를 본다면 7. 24 노동신문 기사를 비롯해서 거듭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당사자는 북·미이고 한국은 법적 대표성과 자격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단언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북한의 주장이 바뀔 조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두번째 근거는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두 당사자가 남북이라고 강조하지 않았지만 북한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한국의 기본입장은 변하지 않고 있다고 본다고 생각됩니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4자회담의 목적과 주제를 설명해 달라고 하는데 북한이 바라고 있는 것은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을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느냐 하는 것을 미국에게 대답해 달라고 하는 것이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아집니다. 이러한 북한의 입장은 북·미간에 의해서만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되고 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앞으로도 바꿀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세번째 근거로는 북한이 남북의 군사적 대치상태의 현실을 외면하면서 한국이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전략적 의도는 한국이 흡수통일을 추구하고 있는 만큼 북한체제의 안전은 미국에 의해서만 보장될 수 있다고 보고 북·미관계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자회담에서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을 얻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둘째, 북한은 4자회담 대신 3자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첫째로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 평화체제보장의 개념은 '북미평화협정+남북불가침 합의+ α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그리고 북한과 한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3자회담이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어울릴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의 2자회담을 최선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3자회담은 차선책이라고 볼 수 있지만 4자회담은 받기 어려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특히 북한은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참여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3자회담은 88년 11월에 북한이 포괄적 평화방안에서 제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 최고인민회의 외교위원장 황장엽이 8. 15 일 본방문시 중국을 제외한 남북 및 미국이 참여하는 3자회담이라면 가을에 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말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4자회담 또는 3자회담 등 다자회담과는 별도로 경제협력을 위한 남북경제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경축사에서는 4자회담의 틀 안에서 남북간의 경제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북한의 입장에서는 3자회담이나 4자회담을 받아들일 경우라도 이 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 논의에 집중하기 위해서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협의는 회피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경축사에서 남북경제교류는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힌 것이 남북경제회담에 북한이 전향적 자세로 전환하는데 하나의 유인이 될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북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위원장 김정우는 남북간에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최근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당국간의 경제회담은 언제 열리느냐의 시기문제만 남았고 반드시 열리리라고 예상합니다. 다만 4자회담 틀 안에서가 아니나 틀 밖에서 열릴 것입니다. 북한이 제의해서 열릴 수도 있고 우리가 제의해서 열릴 수도 있는데 우리는 경제회담을 제의할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제의하고 우리가 받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북한이 3자회담을 제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4자회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3자회담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남북경제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제회담 전략과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해 놓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희박한 4자회담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연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고사시키는 전략이 아니라면 민간경제협력을 활성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제회담이 열릴 분위기가 조성되고 또 남북관계 개선의 지름길은 남북경제회담입니다. 현재 당국간의 대화는 중단되었지만 민간경제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 경축사 내용의 뜻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4자회담을 받아들인다면 쌀을 포함한 여러가지 경제협조를 남한이 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 제안

의 요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북한이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4자회담을 전제로 한 경제협력 제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유는 3가지로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 경축사를 보면 정치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것을 남한에서 주는 것이 있다고 봅니다. 예컨대 북한의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 고립을 원치 않는다, 일방적인 통일을 하지 않는다 하는 것들은 북한이 바라는 것이지만 북한이 우리가 얘기하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한 정부가 흡수통일을 원한다는 것을 북한이 의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 경제협력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관광을 허용할 것을 고려하겠다. 또 수해복구와 장기적으로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장비를 대여해 주겠다. 또 나진·선봉에 투자할 용의가 있다고 이야기한 내용의 대부분이 북한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적으로 어떠한 사정에 놓여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리기를 싫어하는 북한 당국으로서는 외화를 조금 벌기 위해서 남한 사람들을 북한에 관광을 오게 한다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독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대여해 주겠다는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나진·선봉 이야기도 했지만 남북 당국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대전제가 되어 왔는데 하필 북한이 지금에 와서 당국간의 협조를 하겠다고 나올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자면 다른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만 남북당사자 협의를 하지, 원조가 보인다고 해서 지금에 와서 당사자 협의를 하겠다고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세번째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라고 생각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94년 핵협상 때부터 북한이 노리는 것이 미국과의 단독협상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북한 정권의 안전을 보장받는 것을 노리고 있었는데, 4자회담 제의가 있고도 북한 판단으로는 그 단독협상 노선이 자기들이 살기에는 적절하다는 꿈을 못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4자회담이 있고 나서도 미국이 평화구축을 위한 것을 이야기 하지 않는다 하지만 계속 북한과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볼 때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가고 있다고 판단을 할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만 하더라도 이번주에 흘 하원의원이 국무성의 리차드슨을 대동해서 평양에 간다는 것을 자기네가 알고

있는데 미국과 이야기하지 남한과 이야기 하느냐 하는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볼 때 4자회담 제안을 왜 했느냐. 우리가 제안한 것은 한마디로 국내정치 또는 국제정치와 관련되지 않느냐 하고 보았는데, 어쨌든 8.15가 되면 대통령이 남북관계에 대해서 한마디는 하고 지나가야 되고, 4자회담을 받아들여라 하는 촉구가 있는 것은 당연하고 경제적으로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내놓음으로써 국민들에게도 남북과의 경제협력이라는 것이 공허한 것이 아니다, 또 관광을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언젠가는 북한을 볼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해주고, 또 국제기구를 통해서 하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정부가 그동안 미국으로부터 받아온 북한에 대한 원조를 하라는 압력에 대해서 비켜가는 역할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번의 경축사를 이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하면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후속조치를 구체적으로 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의 진심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에 사람을 계속 보내는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정말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은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중시해서 거기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추측인데, 홀 하원의원이 평양을 간다든지 해서 미국과 북한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경제분야에서는 민간차원으로 협조를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권유가 있지 않을까. 유완식 위원이 얘기한 경제회담 제의 가능성과 맥을 같이 하는 일이 벌어질지 않을까 하는 감을 가져 봅니다.

정홍진 위원장 : 이경숙 위원께서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이경숙 위원 : 두 분께서 구체적으로 분석하신 것과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우선 북한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경축사를 보면서 받기 힘든 몇가지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축사를 우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이 이 시점에서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한총련 사건으로 대학가가 시끄럽지만 저희는 7월달부터 이 정보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대학총장협의회에서 성명문도 나왔지만 언론에서 취급을 별로 하지 않았고, 폭력사건은 예정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상황하에서는 정부에

서 아무리 북한에게 좋은 제의를 한다고 해도 북한에서는 받을리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정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내실정 때문에 안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는 시각이 과장된 것이기는 하지만 한국 정부가 너무 불안하고 결국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공권력이 얼마나 무능하고 준비도 안되어 있고 정보망이 뚫려 있고 무시해도 괜찮은 정도까지 인식을 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망할지도 모른다고 -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과 똑같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을 하더라도 우습다는 식으로 반응이 나올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우리의 국내상황이 정리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안을 구상해서 해도 힘들겠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합니다.

대책방향으로는 북한에 대한 대북정책 방향이나 원칙을 다시 정립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제안한 내용을 보면 과연 북한 정권을 강화시키고 연장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세운 것이냐 하는 우려와 회의가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관광을 허용한다든지 수해복구 장비를 대여한다든지 나진·선봉에 투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지 모르겠지만 김정일 정권을 살려주는 내용이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어떠한 것이 우리나라의 대북정책의 원칙이나 방향이나 하는 것이 허심탄회하게 의논이 되어야 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정책도 그 방향으로 일관성있게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국제적십자사에서 투명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직접 가서 배급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4자회담만 하면 모든 것을 해주겠다는 인상을 풍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이 금과옥조도 아니고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이 별로 없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에서 못받아들이는 것이 다행이지 우리가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고 해야 할만큼 우리에게 도움이 될 대북정책인지도 검토하면서 다른 대안도 함께 검토해서 생각해야지 우리의 손발을 4자회담에 묶어버리는 것은 피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 제일 중요한 것은 방향의 문제인데,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근본적인 방향으로 잡는다면 대미, 대일정책도 다시 정립을 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미국을 통해서도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야 하고 외교력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대미, 대일외교도 가야지, 국민들이 볼 때는 일본,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게 하다가 어떤 때는 막는 것 같은 인상을 더 이상 주면 안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원칙은 북한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고 재검토를 하면서 북한 당국이나 정권을 강화시키고 연장시키는 것은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구중서 위원 : 4자회담에 대해서 북한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북한은 그동안 대답을 회피한채 여러가지 제스처를 많이 써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응할 명분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응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는데 과연 응하겠느냐, 응하지 않겠느냐를 가늠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의 태도입니다.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국을 통하지 않으면 어렵다. 받을 수 있는 것도 한국으로부터 받을 것밖에 없다. 북한이 요구하는 것이 미·북직접교류나 대화에서 얻을 수 없도록 한·미간의 공조체제가 확고하게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사정도 제가 보기에 2중적인 모순구조가 있다고 봅니다. 명분으로 보면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만 상대하는 것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잘 안되고 있고 남한에서는 요구만 어느정도 들어주면 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명분은 배제하고 싶는데 현실적으로는 남한을 배제하기가 어려운 상호모순된 이중인식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실리쪽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이 하부구조이지 명분은 상부구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고 미국이 일관성있게 우리의 요구만 들어줘서 북한에 직접 자기들이 주체가 되어서 제공하지 않는 한 우리의 요구를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당면한 경제난, 국제적 고립 등 여러가지 위기상황이 있는데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고 오로지 외부의 원조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데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는 것이 확고하게 북한에 의해서 인식이 되면 북한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의 필요에 의해서 남북관계는 개선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3자회담이나, 4자회담이나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논리와 태도가 분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자회담은 안되고 4자회담은 되느냐. 또 북한의 3자회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논리와 명분을 가지고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재에 대해서는 아무 조건이 필요없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선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재물자이기 때문에 북한 동포들에게 돌아갈 것이고 우리가 목표하는 바가 달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4자회담을 제안하고 추진해 왔는데 북한이 3자회담을 제안하면 우리가 또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 중국과 외교적인 사전조율이나 합의가 있어서 우리가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북한에 끌려가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하는 것이 외교적인 안전과 위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차영구 위원 : 크게 나누어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 미국의 인사가 북한에 한달동안 갔다와서 북한의 변화상을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하나는 4자회담에 대한 저의 시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붕괴시기를 평균적으로 미국은 2~3년, 일본은 4~5년, 중국은 6~7년, 한국은 10년이 지배적입니다. 거기에 각 나라가 생각하는 북한에 대한 희망도 섞여있지만 분석하기는 어렵고 대체로 이러한 시각을 가지고 북한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와 미국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한·미간의 정책조율에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북한에 관해서는 미국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계속 가고 있고 접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무성의 모 인사가 북한에 7월 한달 동안 갔다와서 북한의 현재 상황을 소상하게 얘기를 해 주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평양의 유동인구가 최근에 2~3배로 늘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모두다 평양으로 가야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서 전부가 평양으로 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금년 3월말 이후에 북한내 자유시장이 평양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는데 이 시장은 평양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자생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것은 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돈이 외국인들에게 바꾸어 주는 인민폐, 외국인에게 사용되는 돈만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와서 팔고 사고 하는 형태의 시장입니다.

세번째는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부분적인 기근현상까지 보이고 있는데 1인당 성인 250g, 소인 150g정도의 쌀이 지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류사정은 2개월정도 전에 미국에서 요청해서 특정량의 유류를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사람들이 자기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의 이유를 3가지로 얘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작년, 금년의 자연재해 때문이고 두번째는 미국의 경제제재 때문이고 세번째는 한국의 방해공작 때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재해 문제는 인도적 원조를 받고 미국의 경제제재를 푸는 것이 핵심이고 그것만 풀면 다 풀린다. 한국은 어차피 방해공작을 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자회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 군부의 핵심세력이 하는 이야기가 자기들은 이미 3자회담으로 굳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제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군부가 북한내에서 엄청나게 부각되고 있는데 군부 자신이 자기의 세를 미국 사람들에게 과시할 정도로 강해 졌는데, 북한내에 들어가는 모든 돈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과 군부에게 배분되어서 그들이 최고의 생활을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검이 필요한 부분인데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체결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고, 어차피 평화협정은 남한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다만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평화의 보장을 어떤 형태로든지 받는 것을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 공식적으로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여러 사람을 통해서 비슷하게 흘러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시 과거와는 엄격하게 다른 형태의 자유여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요구할 필요성 때문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과거보다는 지역 지역을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모든 정책은 달러를 얻는데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과의 대화는 제반 여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화를 거

부할 수밖에 없고, 북한은 한·미·일·중으로부터 완전히 포위되었다는 인식을 북한의 리더들이 깊게 가지고 있다, 그러한 인식하에 모든 정책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4자회담 부분에 관해서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형된 형태든 4자회담이든 결국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지난 5월 재미 친북학자 한호석이 쓴 4자회담에 관한 글을 분석해 보면, 그 사람은 북한의 입장을 어느 정도 대변한다고 봐야 합니다. 그 내용 속에는 4자회담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4자회담은 한·미가 제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제의라는 것이고, 둘째는 미국이 대만문제 때문에 중국을 끌어들였다는 것이고, 세번째는 4자회담은 조·미 양자간의 주도하에 변형된 3자회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11월 선거전까지는 미국이 북한을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은 최대한 미국의 양보를 얻어내는 작전을 쓰고 선거가 끝나면 클린턴 행정부도 과감한 대북정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은 그때에 어떤 형태든지 불가피한 수용으로 갈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현재는 4자회담을 수용할 수 있는 명분축적을 하고 있고 미국으로부터 평화를 보장받을 수 있는 여러가지 조건 그리고 경제적 지원, 경제적 제재의 해제에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최근에 일본의 모인사가 북한의 과학아카데미의 인사들을 만나고 왔는데 4자회담에 대해서 이야기 하기를 감정적으로 받을 수 없다. 4자회담은 조·미 회담을 포기한 것처럼 인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문제는 4자회담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을 때 한국, 미국, 중국 모두를 적으로 만들고 잃게 되는 부담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당분간 NCND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금년에 들어서 세번 정도 분명하게 입장을 북한에게 전달했습니다. 5월 북한 부주석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6월 최우진이 방문했을 때, 7월 중국 군사방문단이 남포에 갔을 때 세번에 걸쳐서 했는데, 그 때 중국의 입장은 북한이 찬성하면 중국은 참여할 의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중국은 참여해야 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절대로 소외될 수가 없고, 특히 미국의 주도하에 한반도 문제를 놔둘 수가 없다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은 분명히 희망한다는 것입니다. 다

만 북한에게 공개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따라서 북한이 처해있는 4자회담에 대한 상황은 거부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북한이 4자회담과 관련해서 3자회담을 제의할지, 4자회담을 그대로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형태든지 제가 말씀드린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고, 남북대화 문제는 4자회담을 어떤 형태로든 수용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남북이 만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된다고 봅니다.

최문현 위원 : 북한의 반응은 두가지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7. 15 조평통 성명을 보면 김영삼 대통령은 자기들과 한번도 마주앉아 보지도 못하고 물러나게 되어 있다고 해서 한달전에 이미 앞으로 김영삼 대통령이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가면’ 이라고 선수를 쳐서 묵살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15 경축사에 대해서 미리 선수를 쳐서 막았고 8. 19 논평을 봐도 똑같습니다.

원칙적인 입장은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행동적으로 보면 8.15 범청학련 통일대축전에서 그들이 판문점에서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들 기환상을 가질 필요가 없고, 북한이 혹시 대화에 나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은 환상이고 내년말까지 북한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회담을 하겠다는 생각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후속조치문제는 2가지인데, 하나는 미국조차도 4자회담을 전제로 해서 식량지원을 하겠다는 태도를 안 보이는데 우리가 4자회담을 전제조건으로 북한에게 경제협력을 왜 제안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인도적으로 수재구호를 하려면 깨끗하게 일방적으로 선언해서 안받으면 그만이지 왜 4자회담에 경협을 걸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됩니다.

또 하나는 4자회담에서 남북경제협력문제를 토의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4자회담의 본질문제를 잘못 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차라리 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열면 할 수 있다고 하고 이것이 어렵다면 4자회담에라도 나온다면 검토할 용의가 있다고 해서 항상 남북대화가 우선이고 4자회담은 부차적인 것으로 돌려야 하는데 본질적인 우리의 입장이 안 나왔다는 것이 불만입니다.

그 다음에 남북경협은 항상 인적왕래와 결부시켜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산가족 상봉 등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현재의 정책기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적왕래를 카드로 하고 그 대가로 북한에게 경제원조를 한다는 것은 동서독 분단상태에서 서독의 정책대응과 같습니다. 동독은 서독의 원자재와 마르크화를 원했고 서독은 그것을 주는 대신에 인적왕래의 통제를 풀어라 하는 것이 동서독간의 정책대응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유리한 경제카드를 활용하려면 인적왕래입니다.

통일문제의 국론통일을 위해서는 경축사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좋고 철학적이고 체계적이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이후에 통일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문제의 국론통일을 위해서 이번의 이번의 경축사가 많이 기여되도록 연구를 해서 국내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통일교육에도 발전적으로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서할 위원 : 8.15 경축사의 구체적인 제안은 북한의 식량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용의가 있고, 또 나진·선봉투자와 관련해서 남북교역을 확대할 용의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한국 관광객의 북한방문 허용이 구체적인 제의입니다. 이러한 제의들은 북한 정권의 본격적인 개혁, 개방추진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 정권이 본격적인 개방, 개혁추진의 의사가 있으면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현재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지역의 외국인 투자와 같은 것은 그 나름대로는 개혁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만 본격적인 정책변화의 신호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의 경축사 제의는 북한에서 쉽사리 받아들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정책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기본적인 방향은 참여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지원을 포함하는 것들을 아무런 원칙과 조건없이 무조건 줄 것이냐는 수재지원문제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참여정책을 유지하되 원칙과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칙과 조건은 실질적인 남북교류라든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투자보장문제 등 실질적인 조건을 설정해서 참여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들

이 기본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7. 20 히로시마에서 유엔군축국, 히로시마시, 일본 외무성이 공동으로 군축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에 북·미회담에 관여했던 실무자인 정성일이 참석했는데 특이한 점이 한두가지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최근에 태평양지역과 동북아시아 다자안보 대화가 핫이슈로 나왔습니다. 다자안보 대화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신뢰구축조치들입니다. 신뢰구축조치의 한 예로서 국방백서의 교환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일본 발표자가 “국가재해시 국방관계자들의 협력”이 신뢰구축조치로서 넣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성일이 질문하기를 국가재해시 국방관계자들의 협력을 얘기했는데 특정국가를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냐 하더니 마지막으로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 발표자는 북한을 염두에 두지도 않았고, 국가재해라는 것이 방글라데시의 홍수라든지, 일본 고베의 지진이든지, 필리핀의 화살폭발이 일어났을 때 국방관계자의 협력이지 절대로 북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은 아니라고 했는데, 오히려 참석자들이 북한 대표가 앞질러서 한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졌습니다. 북한의 엘리트 외교관들도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비난, 분석을 먼저 짐작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 생각했습니다.

두번째는 남북관계에 대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북관계는 당사자간에는 접촉이 없고 민간차원에서 경제교류가 소규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거의 차단된 형편이다. 그러나 긍정적인 것이 하나 있다면 KEDO와 북한이 최근에 여러 가지 의정서를 채택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 이러한 것들이 잘 되어서 남북한간의 교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정성일이 말하기를 한국이 KEDO와 북한이 하는 사업에 절대로 설 땅이 없고 자신이 북·미 회담에 참여했지만 절대로 한국이 들어설 자리가 없다고 강변했습니다. 휴식시간에 참석자들이 돈 내는 것이 한국인데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두가지 헤프닝에서 보면 북한이 계속 외부세계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만들려고 하는 성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정성일이라는 실무외교관이 KEDO와 북한간의 협상에서 한국의 배제라고 당장은 비난했습니다만 분위기가 결국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병호 위원 : 북한이 결국 3자회담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 대비

해야 합니다. 통일 문제에 대해 대도(大道)로 가고 민간경협분야는 유연성을 가져야 합니다.

8. 15 경축사에 대하여 북한은 어떠한 긍정적 태도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정부의 집권증에는 어떠한 대화도 거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 여론과 대북원조 및 미·일과의 접근을 위하여 4자회담은 정면 거부하지 않은 채 4자회담 설명회에는 응할 듯 하면서 시간을 끌어나갈 것입니다(최소한 미국 대통령 선거까지). 여기서 주목할 것은 최근 '3자회담'에 대한 황장엽의 언급입니다. 물론 외신이 전하는 황장엽의 언급이 어느정도 정확한 것인지는 모르나 3자회담에 대하여는 이미 카터 행정부때 논의됐던 사항이고, 3자회담을 통하여 남북간의 대화라는 형식은 빌린 채 실질적으로는 북·미간 대화로서 한국을 소외시키려는 북한 기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이해가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측의 대응방안으로서는 이미 밝힌 8. 15 경축사의 평화와 협력을 골자로 하는 기본방향을 유지하면서 대화 자체에 급급하지 않은 채, 경제협력, 인도적차원의 대북원조 등에 있어서는 동족의 차원에서 유연성을 가지나 기본노선에 있어서는 확고한 입장에서 '대도(大道)'를 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이 혼선을 가져왔던 정부의 통일정책 내지는 대북 기본자세가 8. 15경축사로 정리되고 한총련의 8.15 행사를 계기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향후의 정부입지를 호전시켰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각론적으로는 북한의 4자회담에 대한 수정제의의 형태로 3자회담이 등장할 것에 대비하여 한·미간의 공조관계가 수립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만약 3자회담이 논의되더라도 반드시 남북대화가 선행되고 남북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구축된 이후에 미국이 참여하는 형식이 되도록 유도되어야 합니다.

강인덕 위원 : 연설문을 듣고 잘 되었다는 생각을 하다가 문제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3가지 문제입니다. 첫째, 우리는 북한의 안정을 원한다. 불안정하게 비화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돈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대북접촉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타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경제부문에 주로 되어 있습니다. 고립을 원치 않는다는 것에 대한 후속조치로 무엇을 내놓을 것이냐. 물론 미국에게 4자회담

제의시 남북간의 평화문제만 논의하지 않으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앞으로 미국이 취하는 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타협할 수 있겠는가.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이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해제한다면 일본도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여러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에게 잘 납득이 되고 미국에게도 좋고 북한도 받아들일만하게 의미를 제공했는데 따지고 보면 후속조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후속조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못했지만 이러한 문제가 하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번째는 삶의 질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정책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두는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게 받아내기 위한 것이냐.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안정시키는데 두는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정책이 달라질 것입니다.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둔다면 이유없이 계속 쥐야 합니다. 어느 정책인지를 결정을 해야 정책방향이 나오는데 이것이 애매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3가지로 어디에 중점을 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져보면 3가지 원칙을 제시한 것을 후속조치와 연계시켜 보면 상당히 고민스러운 과제를 안겨준 것입니다.

신봉식 위원 : 경축사를 보고서 느낀 감은 과거보다는 유연해졌다는 것입니다. 유연하게 접근하면서 침투로를 개설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경제협력에 대해서 억제하는 정책으로 일관했는데 경제협력만큼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다고 봅니다.

저는 항상 걱정스러운 것이 북한이 발작하지 않을 정도로는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는 제스처로서 고립을 원치 않는다 라든가, 불안정을 원치 않는다 라든가 하는 식으로 대통령이 우리의 입장표명을 한 것이 아니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경제협력이 되었건 지원이 되었건간에 북한주민들의 인식이 못사는 이유를 한국의 방해공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인식을 바꿀 수는 없겠느냐 하는 점에서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무상으로 준다기 보다는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스스로의 생계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급료를 지불하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

건 간에 이것이 주민 개개인에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북한기관에 흡수되어 버리는 것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경제협력문제를 얘기하지만 본격적으로 경제협력과 합작으로 나간다면 정부간의 보장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투자자금의 환불, 사업경영방침에 대한 안정성 확보 등은 제거되어야 하는데, 당국간의 협정이 정식으로 맺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경제협력에 대한 길을 열어 놓았으니까 북한에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수용태세는 과거에 합의한 바 있는 경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에다가 그때 제기되었던 절차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매듭지어가는, 언젠가는 당국자 협의가 있어야만 북한을 돕겠다는 우리의 실질적인 의도가 시행될 수 있다는 것을 북한에게 계속 강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미·북관계에서 한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미국에게 평화보장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군사력 증강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그 자체를 의제로 삼아서 군축문제 까지도 북·미간의 협의에 의해서만이라도 논의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불안한 것은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면서 어느 시점에 가서 불안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에 대한 보장은 오히려 미국이 북한에게 받아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북한이 남한의 무력에 대해서 안전보장을 요구한다고 할 것 같으면 미국이 그것을 보장함과 동시에 한국에 대해서도 북한의 불안정이 없도록 제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화학 생물무기,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미국으로서는 북한에 대한 적절한 억제조치를 대화의 내용으로 삼아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영호 위원 : 8. 15 경축사에서 북한의 안정희망, 고립불원, 일방적 통일 불추구 등 선언적 정책 표방은 대북 봉쇄정책의 포기 및 대북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에 대한 포괄적 선언이 없는 한 단순한 Lip Service로 여겨질 것입니다. 그것은 첫째, 남북 당국간 대화에 대한 북한의 불신이 깊고, 직접적인 대화를 통한 교류확대 및 긴장완화는 오히려 북한체제를 불안정하게 하고 흡수통일을 촉진할 것으로 북한이 여길 것이라는 점, 둘째, 과거 한국 정부의 선언적 대북정책노선(7.7선언 등)은 상당 부분 실질적인 대북정책노선(봉쇄정책)과 상반되어 왔다는 점을 북한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남북간 합의에 입각한 현실적 방법의 해결과 기본합의서 이행의 촉구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은데다가, 이에 대한 입장을 오히려 흐려놓고 있으며, 기본합의서에 합의한 것들조차도 남북당사자간 협의, 추진하기보다는 4자회담으로 가져감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인의식’보다는 ‘사대발상’이 짙게 나타나며, 기본합의의 합의내용들을 남북간 이행체제로 가져가기 보다는 4자회담으로 가져감으로써 기합의된 내용중 북한에게 불리한 것들을 북한이 전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고, 새로운 국제협상에서 제3국과 북한의 입지만을 강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지난 핵협상에서 미국과 북한의 입지만을 강화시켰으며, 북경회담에서는 남북출입 선박의 국적 기에 대해 기본합의서의 합의내용을 무시한 새로운 합의로 인해 시행단계에서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군사적 신뢰문제는 기본합의서 불가침분야의 핵심사항중 하나로서 군사공동위에서 논의할 사항인데 4자회담에서 이를 논의하자고 함으로써 기본합의서 체제를 전면 부인할 우려가 있습니다. 식량난 해결을 위한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과 수해복구를 위한 장비대여, 교역확대, 투자확대 등 경험문제도 기본합의서 체제하에서 경제공동위가 논의할 사항입니다. 특히 농업생산성 향상 지원은 아무리 개량된 기술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북한이 구조적 모순이 심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를(사유재산권 부인, 중앙집권식 계획 통제경제 체제, 중공업 중심의 심각한 불균형 산업구조, 군·당·정 및 지방의 독립채산식 기업활동 체제 등) 유지하는 한 그 효과가 없을 것입니다. 자본주의식 농업생산체제로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 관광객의 북한 방문 허용은 먼저 북한이 조치해야할 사안으로써 북한의 의사표명이 있는 다음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북한은 먼저 보안법을 철폐하면 한국의 관광객이 북한 방문하는데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라고 할른지도 모릅니다.

위의 점들을 고려할 경우, 이번 경축사 내용은 북한을 4자회담으로 이끌어 낸다는 명분하에 우리 스스로 지켜야할 기본원칙들을 철저히 파기하였고, 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새로운 국제협상체제로 끌고 가는 매우 부담스러운 제안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또한 4자회담의 본래의 취지는 ‘휴전체제’를 미·북간의 평화협정체제(이를 위한 잠정협정 포함)로 대체할 것을 요구하는 북한의 미·북간 접근, 한국 기피전략을 봉쇄하고,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참전당사자인 4자간에 협의할 것을 주제로 한 것이었으나, 군사적 신뢰

문제와 남북간 제반 경협문제 논의로 확대함으로써 4자회담은 본래의 취지가 퇴색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8.15 제의에 대한 북한의 입장 및 예상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은 기본합의서 채택이후 대미 평화협정체결을 대남혁명노선 또는 연방제 통일전략 수순에 있어서 우선적인 과제로 여겨왔으며, 김일성 사후 김정일 체제의 안정과 국가안보에 있어서 미국의 보장 획득에 역점을 두고 대외정책을 집중하고, 남한과의 직접적인 당국자간의 대화는 기피함으로써 남한과의 적절한 긴장유지를 내부결속력 강화에 이용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기본입장은 당분간 크게 변경시킬 만큼 상황이 개선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으나, 김정일 체제 2년을 넘기면서 대외정책 수행 및 대내통제에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을 것으로 판단되어 LOW KEY상태의 남북간 직접대화를 굳이 기피할 만큼 체제가 허약하지는 않다고 스스로 생각할 것입니다.

이번 제안은 기본합의서에서 북한이 합의한 불리한 내용들은 4자회담을 통해 우회적으로 새로이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고 있다는 점과 언제든지 봉쇄정책 노선으로 전환하여 믿기 어려웠던 남북 당사자간의 합의내용 실천보다는 남한의 경협 합의내용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북한에게는 매우 유리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제안의 이면에 흐르고 있는 한국 정부의 주인의식 결여는 북한으로 하여금 좀더 버티면 남한이 더 많은 것을 내 놓을 것이라는 점과, 남한이 좀더 많은 양보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국을 공략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굳혀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선 이번 제안을 비난, 일축하면서 부정적 태도를 견지함으로써 관련 사태의 추이를 관망할 시간을 가지려 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 제안이 갖는 독소적 요소(긴장완화로 인한 체제 와해 내지는 불안정 요인)에 대한 체제의 면역력을 평가하면서, 최대한의 이득을 얻기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미국과의 접촉(설명회 포함)을 통해 4자회담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은 계속 유보할 가능성이 높으며, 미·북관계 진전에 따라 4자회담의 수락여부를 결심 할지도 모릅니다. 만일 북한이 4자회담에서 평화체제 구축문제는 휴전협정체제를 미·북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고, 군사적 신뢰문제와 남한의 경협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여긴다면, 4자회담을 굳이 기피해야할 이유가 없습니다. 4자회담의 성사로 인한 남한에 대한 경제개방은 통제된 개방으로 북한이 개방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4자회담에 대한 전제조건부 호응(휴전체제의 미·북협정 대체 논의 및 연방제 통일 지지, 남북경협 보장 등)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습니다. 북한이 4자회담에 적극 호응 않는다면, 이의 실익이 적어서가 아니라, 너무 큰 실익을 제시한 것에 대해 모종의 함정이 있을 것이라는 불신 때문일 가능성이 오히려 큼니다. 북한의 견지에서는 아마도 4자회담이 북한의 대미 접근과 대일 관계정상화를 지연시키고, 휴전체제를 지속시키려는 의도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국제적으로 보장받으려는 남한측의 불순한 기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북한은 4자회담에 대해 미국측의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면서 유보적 입장을 지속할 것으로 여겨지며, 만일 북한측이 한국측의 불순한 기도가 내재되어 있다고 여길 경우 4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게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추가적 설명을 미측에 요구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한·미간 입장을 조율하고 휴전협정 대체문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합니다. 기본합의서체제의 군사적 신뢰문제와 4자회담에서의 군사적 신뢰문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설정, 오해를 방지하고 경협에 대한 논의의 한계를 설정하여(남북간 문제 대 4자문제) 4자회담과 미·북, 북·일관계는 별도 사안이라는 입장을 취해야 합니다.

북한이 조건부로 4자회담을 수락할 경우 북한의 4자회담 수락은 기본합의서 체제를 와해 내지 무력화시키고 우리에게 제3국과 북한의 입지만 강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북한의 전제조건을 이유로 이를 일축, 거부하여 시한부로 무조건적인 수락을 촉구하고 시한경과후엔 4자회담 문호를 폐쇄함이 바람직합니다.

북한이 이번 제안을 전제조건으로 4자회담을 수락할 경우에는 기본합의서체제와 4자회담 체제의 기능과 역할 분담에 대한 정책 검토 및 협상대책 수립이 중요합니다. 범정부차원의 종합 전략 대책팀을 구성, 조정·통제하고 4자회담에서의 토의주제(휴전종료 및 평화체제, 군사적 CBM과 남북경협에서의 미·중의 역할 정립) 선정에 따라 기본합의서 수정 보완사항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담운영과 관련 4자회담 방식은 실무위원회→대표단 본회의→필요시 정상회담을 하고 4자회담내에서 의견조정을 위한 개별접촉을 허용하며(한·중,

한·미, 남·북, 북·중, 북·미접촉), 회담 실무진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를 사용하고 본회담, 실무회담시는 통역을 사용하며, 개별접촉시는 해당국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대규모의 전문가팀이 필요할 것입니다. 참고로 휴전협정 협상시 500명이 활용된 바 있습니다. 외교적 조치의 병행이 필요합니다. 대중 및 대미조치는 의제, 회담운영방식, 대표단구성 및 규모, 사용언어, 회담장소 및 시기 등 사전 조율, 의제관련 입장조율, 기타 의전문제등 협조이고 대일 및 대리 조치는 4자회담에 대한 양국의 지지획득입니다. 대북조치는 북한의 4자회담 참가결정을 환영하는 것입니다. 회담개최를 위한 4개국 실무자 예비접촉을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소는 UN본부, 제네바, 북경, 서울, 평양, 판문점 또는 워싱턴, 시기는 북한 수락후 1개월 이내, 토의의제는 회담장소, 주기, 회의방식, 주제, 대표단 구성 등 4자회담 운영방식의 결정 등입니다.

4자회담 성사시엔 남북경협, 군사적 CBM등 기본합의서 체제의 핵심분야가 4자회담 체제로 빠져나오게 됨으로써 기본합의서 체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미·중의 입지가 강화되어 한국의 입지가 매우 어려워질 것에 대한 충분한 사전준비가 요망됩니다.

회담사무국에 몇가지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경축사의 내용을 보면 기본틀에 있어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다루도록 합의가 되어 있는 경협문제나 군사적 신뢰문제를 국제적인 회담으로 확대해서 이끌어 나가려는 우리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기본합의서 틀을 깨자는 것인지. 아니면 기본합의서의 틀과 별도로 국제적인 문제로서 다루겠다는 것인지. 우리 정책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의문이 있습니다.

국장 : 이번 경축사에서는 기본합의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기본합의서 방향으로 남북관계가 가야 된다는 암시를 하고 있는 쪽으로 생각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4자회담은 북한이 한반도 평화보장문제를 미·북간에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해 오고 우리로 하여금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정도로 북한이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우리의 대응책으로 나온 것이 4자회담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4자회담 제의가 나온 뒤로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제의가 약화되었다고 판단해도 좋습니다. 4자회담은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또는 한반도 평화보장체계문제를 미국과만 하겠다는 일관된 주장에 썩기를 박는 용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4자회담을 제의했다고 해서 남

북당국간의 회담이 실종된 것은 아니고 또 북·미 제네바합의속에서만 북한이 있지만 남북간에 합의한 기본합의서를 북한도 부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시간이 흐르면 남북기본합의서 틀속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북·미 제네바협정과 남북기본합의서가 병행하는 시간이 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조덕송 위원 : 8. 15경축사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안정을 원한다. 둘째, 북한의 고립을 원치 않는다. 셋째, 일방적인 통일을 추구하지 않는다 등 3개항을 표방함으로써 이른바 흡수통일론을 강도 높게 지양, 또는 부인하고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남북간 협력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의 농업생산성 제고와 장비 대여를 통한 수해농지 복구에 도움을 주고 나진·선봉 투자와 교역확대 및 물자공급, 관광객 방문을 허용할 것 등의 지원내용을 적시하고, 남북 당국간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남북간 협력은 4자회담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여섯차례나 4자회담을 거론하면서 북한은 4자회담이 성사되면 정치적 안정, 군사적, 경제적 실리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자회담에서 논의된 남북간 경협문제는 남북 당국간 합의, 남북당국간 대화 진전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임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상되는 북한측 태도는 남북기본합의서 이행, 4자회담, 남북당국간 대화는 모두가 북한이 기피하고 있는 사안으로 북한이 경축사 내용을 전반적으로 또한 직접적으로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북한은 그동안 이룩된 민간차원의 경제협력 모델을 활용하면서 이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는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나 9월 13일부터의 투자설명회에의 남한측 참가와 이를 계기로 한 투자확대가 실현될 경우 투자보장협정 등, 남북당국간 실무접촉은 불가피해질 것입니다.

향후 대책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협실적을 확대 심화시키면서 시기를 기다리는 안내가 필요합니다. 경축사에도 있지만 지난번 쌀제공도 장기적 안목으로 보면 통일비용의 일부 투자가 되며 경제논리가 따로 있지만 남북간의 문제는 모두가 정치(당국간)문제로 귀결토록 돼 있습니다. 대북경협은 되도록 조용히 추진함이 좋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북경 등에 비공개 남북 접촉 창구를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KOTRA가 그 역할을 맡아왔

으나 북경주재 남북대사관간 접촉으로 정착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9.13부터 나진·선봉 투자포럼에 참관단을 공식 파견하는 기회를 북경주재 남북 대사관간 접촉 탐색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금강산 관광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적극적인 참여를 시도해야 합니다. 남한의 관광객, 남한을 통과하는 관광객들의 관광소비가 북한에 대한 간접적인 경제지원을 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윤우 위원 : 8. 15경축사에 대해서 북한은 일단 부정적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의 태도는 4자회담에 대한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고 특히 서울에서의 범청학련 사태가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 제의에 대해 긍정적 태도는 표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북한의 부정적 태도는 동시에 한국정부 배제원칙을 견지하고 있는 중임을 의미합니다.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경험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증거이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비공개, 비공식 협의 여건은 남겨놓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측 제의에 대한 구체적 반론은 생략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응방향은 인내심 갖고 4자회담 수락을 기다리고 한적의 8.12 제의(이산가족, 자연재해 협의 위한 총재 또는 부총재 회동)에 대한 반응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자회담 수락 지연, 거부 또는 3자회담으로 변형제의시 일단 유보하고 대신 10월 하순경 남북경제공동위원회 소집 제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업관련 학술회의 형식도 무방할 것입니다. 3자회담 수정변형 제의시엔 거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북-미 주도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으며 적어도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문제에는 현실적 필요성 뿐 아니라 역사성까지 고려해서 중국이 포함돼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장 :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몇가지 건에 대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회의를 마칠까 합니다.

차영구 위원께서 미국무성 인사가 북한에 한달동안 체류하면서 보고 느낀 것을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자유시장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고 하는데 주로 지방도시에서 있었던 것인데 지금은 평양 시내에도 장마당이 선다는 것입니다. 주로 학교마당에 서고 군인들이나 안전원들이

집총을 하고 보초를 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평양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일치하게 본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군인들이 총을 들고 서 있는 이유는 도둑이 많고 싸움과 폭력행위가 많기 때문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3자회담 문제가 나왔는데, 미국의 실무자를 만나는 북한의 외교관, 관료들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공식적인 의견인지 엇비슷하게 얘기하면서 4자회담 보다는 3자회담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식화된 바는 없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북한이 3자회담을 선호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영구 위원도 얘기했지만 적어도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서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자격으로 참여하는데서 조금이라도 잘못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중국의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비공식적으로 3자회담을 운운하는데 대해서 간접적으로 얘기하기를 국제사회에서 그나마 북한을 효과적으로 지지해 주는 유일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 쪽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중국 때문에 3자회담을 공식화하지 못합니다.

경축사에서 주로 남북간의 경제지원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는데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또는 나진·선봉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남북 당국간에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래전부터 제기가 되었고 오늘 회의에서도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핵문제를 제네바협정으로 해결했듯이 나진·선봉은 UNDP 틀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UNDP에 남한과 북한 당국이 참여해서 나진·선봉에 투자하는 한국기업들의 투자를 보장하는 협정을 해주는 형태로 가는데 그것이 KEDO방식이라고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나진·선봉지역에 투자를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한 보장은 UNDP 틀내에서 다자간에 체결하는 보장협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관광문제가 나오는데, 관광문제는 금강산관광으로 생각하는데 금강산 관광으로 가기전에 북한이 관광을 허용하기까지는 단계적인 발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조차도 나진·선봉개발과 연계시켜서 시작되는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진으로 들어가서 칠보산, 백두산으로 나오는 관광코스가 있는데 하루코스입니다. 길어야 1박 2일이라서 북한 주민들에게 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선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단 열리면 칠보산, 백두산을 보고 나오겠다는 사람이 줄을 설 것입니다. 이것이 확대되어서 북한이 안심할 수 있으면 금강산까지 가는 것으로 단계적으로 하는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 대북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방해하고 있다고 북한은 책임전가 차원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전 심야토론에 경실련 전사무총장이 나와서 미국과 일본이 지원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지원도 안할 뿐만 아니라 지원하려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석했던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틀림없이 여러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쌀 15만톤을 지원한 바가 있고 적십자에서 계속 지원하고 있고 국제기구를 통해서도 계속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지원도 안할 뿐만 아니라 지원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고 심야토론에 나와서 이름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청중들에게는 우리가 그렇다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달전에 제주도에서 3국 고위정책실무협의회가 있는 후에 어떤 일인지 거기에서도 한국은 미국, 일본에 대해서 대북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처럼 의신을 통해서 흘러 나왔습니다. 미국은 국회에서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받겠다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바라는 것은 경제제재 해제입니다. 다만 은근히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한국이 북한을 지원하도록 하는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한국에 직접 지원해 달라는 소리는 체면상 하지 않고 미국이 압력을 넣어서 해주기를 바라는 것이지 미국에게 식량지원을 직접 요구하지 않습니다. 물론 일본에 대해서도 간접적으로는 식량지원을 얘기하지만 공식적으로는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한국이 미국, 일본의 대북지원을 못하게 막는다는 얘기는 있지도 않는 얘기인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 우리 여론지도층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조체제 문제에서도 각각의 입장의 차이에 대해서 미국은 틀림없이 북한이 붕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북한을 마음놓고 지원해도 결국은 다 남한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우리는 북한이 쉽게 붕괴한다고 생

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칫하면 북한 정권을 지원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공조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차상필 위원 :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15 경축사가 대국민용으로는 잘된 것으로 봅니다. 국민들이 대북정책에 대해서 말이 많았는데 여론조사도 보면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는 두가지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국내용으로는 잘 되었다고 봅니다.

두번째 북한에 대한 제의라고 볼 때는 기본정신이 무엇이나 하면 북한의 안정을 원한다는 것은 북한이 안정치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정을 원한다는 뜻이 되고, 고립도 원치 않는다는 것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이고, 통일할 수 있지만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월적인 입장에서 말했기 때문에 북한의 체면이나 명분으로 볼 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입니다. 국내적으로는 성공이지만 북한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내용과 대북한용으로 본다면 대북한용으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을 지원할 때는 체제를 논하지 아니하고 수재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도와준다고 했으면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고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국장 : 그 문제에 대해서 어느 위원께서 약간의 설명을 했다고 생각되는데 한반도 문제가 남북한 문제로 국한되지 않고 국제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제화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대북지원 입장이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 한국의 대북정책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의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깊이 개입함으로써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국제사회의 여론이라는 것이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북한도 한국에 대해서는 영향을 안 받지만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의 여론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여론은 한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소련, 중국과 수교하면서 북한이 미국, 일본과 수교하려는 것은 왜 방해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국

제사회에 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려한 것입니다. 북한에서 일차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했지만 미국, 중국, 소련 등 북한에 관련된 나라들이 우리들에게 충고하기를 북한은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제일 걱정하기 때문에 남한으로부터의 위협이 없다는 것을 북한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을 권유를 해 왔습니다.

이번의 8.15 선언은 감각적으로는 북한이 그렇게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크게 보면 그동안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또는 북한이 위협을 느꼈던 것들을 종합해서 우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로 천명했다고 인식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오늘 북한이 경제회담을 제의할 경우에 대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고, 4자회담에 대한 준비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우리가 북한을 인식하고 않고 우리의 대북정책을 얼마나 성실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냐도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의 말씀처럼 서경석씨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그러한 오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제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고립시키려 한다는 오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정책을 천명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쌀지원문제만 하더라도 일본보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다, 대북관계 개선이 우리보다 앞서 가서는 안된다는 정책들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방해한다고 생각하고 미국이나 일본도 대북지원이 한국보다 앞서 가지 말라는 말 때문에 방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처럼 일반 국민들이 내막을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은 무리일 것입니다.

이번 선언의 정신이 평화와 협력이라고 해서 온유하고 진취적인 것으로 일반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을 실무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언이 나올 때는 후속조치들이 연구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예를 들면 적십자 25주년 성명도 우리 위원들의 공론이 당국간의 대화는 어렵지만 협력을 해 나가는 길은 민간차원밖에 없다는 것이 공유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선언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국민들도 북한과의 관계에서 정부가 실무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춰지려면 구체적인 조치들이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십자 25주년 성명만 하더라도 왜 만나는지 이야기도 없이 총재, 부총재

급이 만나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에 구호물자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면 북한의 수재구호를 위해서 적십자의 실무자가 나가서 만나자는 것입니다. 총재, 부총재로만 제의를 해서는 정치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실무자간의 회담을 장소와 일자는 북한이 정하라고 하면서 제안을 했더라면 좋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관광문제도 제안이 되었다면 관광공사를 통해서 관광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하자고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강인덕 위원 : 9. 13~15 사이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에 들어가는데, 그것은 지금 안과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제협력을 해 주겠다고 했으면 들어가는 사람은 제한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인데,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절반 이상이 관료와 신문기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바꾸어야 합니다.

국장 : 기업인이 30명 이내이고 나머지가 당국과 기자들입니다.

강인덕 위원 : 숙소문제도 이번에 일본에 주선하는 방식을 봤더니 환일콘 연구소가 배를 빌려 놓았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무엇을 물어느냐면 우리가 배를 빌려 놓았는데 북한에는 호텔이 안되니 우리만 가면 자리가 남으니 한국사람과 함께 배에서 잘 수 없느냐고 4월경에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르겠다고 KOTRA에게 물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안들에 대해서 우리가 후속조치를 취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후속조치가 지금 하는 것이 그런 부분이 맞지가 않습니다.

송한호 위원 : 남북관계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조덕송위원 : 숙식문제도 어느 나라 선박이라고 지적은 하지 않았지만 나진항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에 숙식을 할 것이라고 보도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못하신 이야기는 만찬에서 하시도록 하시고 회의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3. 제 13 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북한의 출소 공산주의자 김인서 송환 요구
공세에 대한 대처방향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6. 9. 10(화) 16:00~18:0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북한의 출소 공산주의자 김인서 송환 요구 공세에 대한 대처
방향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5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송한호, 최문현,
곽희정, 유완식, 차영구, 이영호, 신봉식,
조덕송, 김동환, 이경숙,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유인택 협력관, 관계관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남북대화유경협 비상임자문위원회 제1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주간북한동향 TV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북한의 출소 공산주의자 김인서 송환요구 공세에 대한 대처방향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현재 김인서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국장 : 직접 확인해 본 것은 아니지만 관계기관에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따르면 7월 29일 가벼운 증풍끼가 있어서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세가 있었는데 즉시 침을 맞고 해서 지금은 산책도 하고 술도 가끔 마시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고 본인이 이인모처럼 북한에 돌아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잘 모르시는 위원께서는 질문을 해 주시고 토론을 했으면 합니다.

유완식 위원 : 김인서가 아프다는 것을 북한에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국장 : 그것은 북한으로 FAX로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각 연락이 됩니다. 미전향출소자들은 사실상 관리하는 것은 재야운동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동향파악만 하고 뒤를 봐주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해서 한 달에 20만원과 쌀 20Kg을 주는 것밖에 없어서 재야운동권에서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북한에 즉각 보고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그러면 김동환 위원께서 주제발표를 해 주십시오.

김동환 위원 : 지금 김인서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호칭을 미전향장기수라고

하고 오늘 인적사항에서도 미전향장기수라고 했고 기획부장이 설명할 때는 출소공산주의자라고 설명했습니다. 평소에 저는 그러한 호칭부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서는 자기 마음대로 이름을 지었지만 김국홍입니다. 김국홍이라는 사람에 대한 얘기이지 장기수라는 것은 지금도 감옥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감되어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장기수라는 용어가 북한에서 쓰는 용어를 그대로 받아 쓰면서 말리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인서를 적십자를 통해서 보내라고 요청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몇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전쟁포로라는 것입니다. 전쟁포로이기 때문에 정전협정이나 제네바협약에 의하거나 바로 보내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제네바 협약 4조 포로에 관한 내용은 전쟁포로가 되기 위한 자격으로 정규 군대의 구성원 그리고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김인서가 정규 군대의 구성원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정규군인이 아닌 민병대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병대원이 포로로 대우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책임있는 자에 의해서 지휘를 받을 것, 멀리서 인식할 수 있는 고정된 식별표지를 가질 것, 공공연하게 무기를 휴대할 것, 그리고 전쟁에 관한 법규 및 관행에 따라 작전을 할 것 등 몇가지 정규군에 유사한 조직을 가지고 공공연하게 활동하는 경우에 민병대원을 포로로 대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김인서의 경우는 정규군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군대의 일부를 구성하는 민병대원이 아닙니다. 특별히 몇가지 구체적인 사실을 기초로 말씀드리면 정전협정을 맺은 후에도 남한에 있는 빨치산들은 계속 전투행위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규군대에 의한 지휘를 받고 있지 않다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빨치산에 속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전쟁에 관한 법규와 관행을 무시하고 작전을 했습니다. 헤이그 조약을 가지고 북한이 말하지만 휴전협정에 위반되는 행위, 사권침해 행위, 약탈자의 행위를 했는데 이것은 헤이그 조약 36조, 46조, 47조에 금지된 행위들을 했고 그 조약에 따라서 전투행위를 하

지 않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법률적으로만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제네바협약에 따른 포로로 보기는 어렵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정전협정 3조 51항에는 정전협정 발효 당시에 각 당사자가 수용하고 있는 전쟁포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포로가 무엇이다 하는 개념의 정의는 없습니다. 때문에 제네바협약을 원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김인서의 경우는 정전협정 발효 당시에는 우리가 전쟁포로로 수용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후에 검거되었습니다.

검거 당시에 노동당 전남 당학교의 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조직상으로 빨치산의 산하기구인지 아닌지가 분명치가 않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이 비상조치령 위반으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의 신분을 군소속원이라든가 군포로로서 대우를 받아야 할만한 상황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노동당 전남 지구당의 강사다 하는 식으로 신분을 밝혔습니다. 그러한 것으로 봐서 김인서를 전쟁포로다 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입장에서 광범위하게 김인서의 신분, 체포경위, 범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일반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인서가 처벌받은 최초의 범죄가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임시조치법입니다. 대통령 긴급명령 1호로 나와서 6.25가 일어나면서 나온 긴급조치입니다만 그 처벌대상이 전투행위, 군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고 비상사태에 승하여 다음과 같은 범죄를 한 자입니다. 살인, 방화, 강간, 군사, 교통, 전기, 통신, 수도, 가스, 관공서, 기타 주요시설 및 그에 속한 주요문서 또는 도서의 파괴, 훼손, 다량의 군수물자 및 기타 주요물자의 강취, 갈취, 절취 등 약탈과 불법처분, 형무소 유치장의 수감자를 탈출케 하는 행위 등이 비상사태하에서 처벌하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가벼운 것이 비상사태에 승해서 타인의 재물을 탈취, 강취, 절취, 건조물의 파괴, 훼손, 이적의 목적으로 체포, 감금, 상해, 폭행, 관권을 모욕하거나 적에게 정보제공, 안내하는 행위들입니다.

김인서가 체포되어서 처벌받은 제목이 무엇이라는 것이 기록에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제대로 나타난다면 전쟁포로다 라는 인식을 혹시 일반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다면 불식시킬 수 있을텐데 그러한 것에 대한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전향장기수라는 호칭에 대해서 불만을 말씀드렸습시다만 수식하는 호칭이 필요하다면 비상조치령에 의해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비상조치령 위반자 김인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인서가 포로가 아니라면 어떠한 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느냐. 김인서는 북한 철도원으로 남한지역에 배치되었다가 귀환하지 못하고 잔류해서 범법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기를 마치고 대한민국의 주민등록을 만들어서 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정전협정 30조 59항에 50년 6월 24일을 기준으로 해서 실향민의 귀향을 상호 허용하도록 하고 그 실향민간인 귀향협조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원회는 군사정전위원회가 감독을 하고 임무가 종료되면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전협정이 실향민간인에 대한 송환, 귀환조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어서 본래는 이 조항에 의해서 논의가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결국 북한에서 말하는 정전협정이나 제네바협약을 근거로 해서 보내달라는 것은 근거가 잘못된 것입니다. 김인서는 분단으로 인한 수많은 이산가족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남북기본합의서 18조에 부속합의서 3장 15조 내지 18조에 의해서 처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척의 면회소 설치문제, 재결합 문제 등은 쌍방 적십자단체들이 한다는 취지가 부속합의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입장에서 정리를 한다면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라서 김인서 문제를 포함한 모든 이산가족들의 재결합, 상봉, 면회하는 문제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적십자간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가령 모든 이산가족 문제를 거론해서 적십자회담 형태를 부활해서 계속 하자고 할 때에 상당한 거부감이 있을지 모른다고 할 때, 우리도 김인서에 대해서 북한의 취하는 선전공세에 맞부딪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어려운 입장에 있는 가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고상문 교사가 돌아오지 못한 상

태에서 부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북한이 하는 스타일을 따라 갔다면 장례절차에 고상문씨를 충분히 초청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밖에 수많은 6.25의 납북자, 자진월북자들에 대해서 남한 가족들이 만나도록 해 달라고 하는 요청이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들도 하나 하나 논의하자면 한이 없이 거론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문제를 제기해서 시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적십자들이 활동하면서 동시에 김인서 문제도 논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우리 적십자에서 회답을 하는 것을 보면 당국자가 해결할 문제다 하는 식으로 발뺌하는 수준으로서는 국제적인 안목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이 어렵지 않느냐. 그 보다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내세우고 그 문제와 함께 논의해서 해결하자, 모든 이산가족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안되더라도 시범적으로라도 몇몇이 가족을 만나게 하고 어려운 신병이 있으면 치료를 하게 하고 사망하면 조문을 하게 하는 길을 열어줄 수 있지 않느냐고 적극적으로 우리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이 문제는 사회분야 위원들과 민감한 정치문제도 개입되니까 양 분의 위원들께서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조덕송 위원 : 김인서를 모델로 해서 남북간에 시범적으로라도 좋으니까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들이 만난다든지 아니면 면회라도 한다든지 아니면 서신이라도 교환한다든지 하는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국제적으로도 남한의 제의라는 것이 인도주의적이다 라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을 취해서 김인서 문제에 대응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인모를 보낸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부에서조차 귀찮은 존재를 보내달라는데 보내 버리지, 붙들어 두어서 무슨 이득이 있느냐 라는 식으로 깊은 것은 잘 모르고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십자회담을 우리측에서 항상 총재, 부총재 식으로 내놓고 있는데 회담의 대표의 격을 정하지 말고 일반 적십자회담이라는 범주의 이름으로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해결하자고 하는데,

우리 내부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문제성이 복잡하고 이러한 내용이 진실이다, 제2의 이인모가 아니고 이인모를 또 만들 수도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국내를 설득하지 못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의 설득력이 약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생각됩니다.

이인모의 경우는 「말」지, 한겨레신문 등 특수한 잡지, 신문에서 보도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해서 북한에서 알게 되어서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전향출소자에 대한 정보차단을 철저히 할 수 없는지. 어떻게 해서 재야운동권이 뒷바라지를 하고 팩스로 직접 정보를 제공하는 상황에 대해서 당국부터가 제대로 인식되어 있느냐 하는 의구심마저도 듭니다.

고향이 북한인 미전향출소자가 70여명이라고 하는데 이들을 우리가 안고 있다는 자체가 재야운동권이 알아갈수록 팩스가 되었던 연락을 하는 일이 반복이 될 것이고 이인모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커다란 부담을 안고 있는 판국입니다. 이들은 출소되어서 포섭공작까지 하고 또 수감되면 탈출모의도 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사회적, 정치적 부담을 안고 붙들고 있어야 하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차리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시범적으로 북한으로 보낸다면 국내 일부에서는 거센 반대여론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국제적으로는 우리가 보다 큰 이해를 획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이경숙 위원 : 보도를 통해서 김인서 문제를 접하면서 공산주의자쪽에서 보면 지조있는 있는 사람으로 또 하나 미화시키면서 선전대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지상과 대학의 대자보에서 나타나는 것은 공산주의자 중에서 지조있는 공산주의자로 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법자, 학살자 등 구체적으로 이 사람의 행적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인식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납북자들이 440여명이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국제사면위원회, 인권위원회 등에 대해서 북한처럼 한 전례가 있는지? 우리 국민을 챙기는데 얼마나 정성을 보였는지? 지금이라도 자료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세번째는 유엔에서 북한의 청원서를 받고 나서 우리 정부에 어떠한 요구가 왔는지 궁금하고, 만약 온다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자료를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북한의 제의에 대해서 공을 더 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최선의 방어는 공격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위에 설 수 있고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이산가족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산가족이라는 장점을 우리가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해서 북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 보낼테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사람을 다 보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적십자회담 몇 개 조항중에 거주선택의 자유가 있으니 각자 원하는 체제와 이념을 선택할 수 있는 식으로 자신 있게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잘알다시피 한총련 사태 이후에 학생운동 방향이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재야단체들이 전부 연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최근에 한총련 학생회를 지지하는 학교신문들이 뒷받침하면서 지금 굉장한 진통을 대학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전향 출소자 70여명은 결국은 공개된, 고정된, 인정받은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면에서 힘없는 노인이나 아무 것도 아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왜 대학가가 전부 빨간색으로 물들어가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곳곳에 너무 인정받는 공산주의자들을 방치한 것에서도 기인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출소공산주의자 몇명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상황과 대학가의 동태와 결부시켜서 자신있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준비하면서 처리를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종서 위원 : 김동환 위원께서 호칭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에서 어떻게 주장하든 남들이 쉽게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북한출신

이라는 것과 미전향자라는 것, 북역자가 아니라 출소자라는 것은 명백히 들어야 혼동이 없다고 봅니다. 그로 인해서 누가 득을 보고 누가 득을 못본다는 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거기에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지는 않지만 붙이면 더욱 명백해 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법적으로만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든간에 이 사람은 죄를 짓고 그 대가를 치른 사람인데 잡아두는 명분과 실리는 무엇이나? 저는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이인모 때부터 듭니다. 북역이 끝난 북한 사람들을 왜 우리가 잡아 두어야 하는가? 만일 제3국인이라면 죄가 끝나기 전에 추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도 이산가족인데 우리가 이산가족을 하나라도 줄이자는 입장에서 북한에 가족들이 있는데 잡아두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명분이 있는가? 그리고 붙들고 있으면서 쓸데없는 혹 하나를 더 달고 있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붙들고 있느냐?

또 송환을 해서 우리가 잃을 것이 과연 무엇인가? 북한이 정치선전을 한다면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한은 언제나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흔들린다거나 여론이 어쩐다 하지만 그 여론은 힘이 없는 여론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명분과 실리없는 행위를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전원을 송환하는 것이 어떤가? 그리고 북역이 끝나지 않는 숫자도 발표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희망여부를 조사해서 희망자를 다 보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기를 희망하지 않으면 설득해서 가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미전향자들을 붙잡아 둘 이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덕적, 인도적으로 내외에서 우월적인 입장을 확립한 다음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북한의 인권을 규탄해야 됩니다. 북한이 제일 아픈 것이 인권문제입니다. 인권을 규탄하면서 납북자의 송환을 요구하고 이산가족의 상봉과 면회를 촉구하는 대범한 정책이 인도주의라든지 명분에도 맞고 우리의 국가적 우월성도 입증해 주고 실리에도 맞고 국민설득이라든지 북한동포에 대해서도 우리의 입장을 강화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북한이 붕괴가 되었을 때 북한사람들이 남한을 채택하는데 일조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크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윤 우 위원 : 공산군들은 전투에서 철수할 때 반드시 자기 편을 심어놓고 철수를 합니다. 이인모나 이들의 경우가 그러한 경우인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되었습니다만 결과는 마찬가지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어느 시기에는 사회를 혼란시키고 팽창전술에 동원됩니다. 그러한 각도에서 본다면 그들을 데리고 있으면 화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문제가 지구상에서 가장 흑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심해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탈출자들이 책을 써서 그 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게 되니까 그 반응이 상당합니다.

가령 미전향자들을 보냈을 때에 보낸 자체가 인도주의다 하는 것과 그들이 가서 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온통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것이 비인도적이었다 하는 것과 값을 따져 봐야 할 문제가 생기지 않겠는가? 다만 상쇄될 수 있는 것은 이인모가 떠들었으니까 똑같은 소리밖에 더 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이 문제는 몽땅 보내주는 것까지를 전제로 하고 단 공짜로 보내줄 수는 없다. 충격요법으로 보다 더 큰 요구나 보다 더 큰 충격으로 줌으로써 북한의 입을 막는 방법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방법으로는 6.25에 납북된 사람들, 국군포로, 휴전이후의 납북자, 이산가족문제가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아파하는 것이 이산가족문제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북한에서 김인서문제를 떠드는 저의가 이산가족문제, 포로문제를 상쇄시키고자 하는 속셈에서 기록을 쌓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에 이러한 문제를 널리 알림으로써 남한이 비인도적이다 하는 것을 알리고 자기들의 약점인 인도주의 문제에 대한 남한의 공세를 모면 내지는 상쇄시켜 보려는 의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강한 요구나 충격으로 가하므로써 북한을 봉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영호 위원 : 미전향출소자를 우리가 안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보내는 것도 북한의 대남혁명투사들을 고무시킨다는 점에서 우리가 신중히 고려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인모를 보고 나서는 대남혁명에 가담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남한에 가서 활동하고 전향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다시 돌아온다고 사기가 양양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보내자 하는 것 보다는 남북간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인모를 보낸 것이 인도적인 차원에서는 좋지만 북한이 우리에게 대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 취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저들의 혁명투쟁만 강화시키는 것이 되어서 우리에게 더큰 피해가 온다면 조그만 인도적인 차원의 조치가 나중에는 우리에게 큰 불행을 초래하므로써 비인도적인 조치가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심사숙고를 해서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봅니다.

유완식 위원 : 우선 북한이 김인서를 이 시점에서 요구한 정치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모를 보낸 다음에도 함세환, 김인서, 김영태를 기회있을 때마다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인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행동을 취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요구한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여기에 새로운 정치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한 요식행위로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의도가 부차적으로 있었다면 8.12 한적총재 성명에 대한 역공세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권에 대해서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인권문제가 더 심하다는 인상도 심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인서를 보내 줄 것이냐, 안 보내 줄 것이냐는 이인모를 보낸데 대해서 처음에는 잘한 일이다 라고 본 사람들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인모를 보낸 다음에 이인모를 북한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많이 이용했습니

까? 그 후에는 이인모를 보낸데 대해서 북한이 그러한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 언론에서도 이인모를 보낸 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김인서를 인도적으로는 보내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정부도 원칙을 가지고 해야 하기 때문에 보내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인서를 보내달라는 제의를 북적에서 다시 요구를 한다면 이산가족 해결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비공개, 막후로 김인서를 보내주면 동진호 선원을 보내준다는 제의를 해 온다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김인서의 송환문제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김인서를 가지고 정치공세를 취하게 된다면 법적인 문제, 김인서의 경력, 범죄행위 등을 밝혀서 보낼 수 없는 이유를 납득시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안 보내는 것은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곽희정 위원 : 우리가 대응하는 것이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알릴 것은 알려야 합니다. 김인서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의아하게 생각하고 또 언론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의 말씀처럼 상세한 내용이 알려지면 이것이 북한의 장난 비슷한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응을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상하지만 어느 정도 알려주는 것은 필요합니다. 또 국제인권위 등에도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 보내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남북간의 상황은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로서도 여러 가지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전술이 있어야 되고, 또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이 없다면 국내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포괄적으로 해결한

다든지 하는 정부의 정책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저는 전체를 다 보내자는 것이 전제조건이 없이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이산가족을 포함해서 패키지로 하자는 것입니다. 큰 차이는 없는데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드렸습니다.

조덕송 위원 :저는 우리가 보낸 만큼의 인원수를 송환해라 라는 조건을 붙여서 행동을 취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최문현 위원 :이 문제의 성격이 명확히 해야 합니다. 김인서 문제가 무엇이나? 우리는 이산가족문제로 대응하고 있고 북한은 인권문제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인권문제입니다. 인권문제 하나로 박살날 운명에 처해 있고 미북관계가 개선되려면 인권문제가 개선되지 않곳는 절대로 개선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인데 함부로 북한과 수교하고 관계개선을 하겠습니까? 미국이 북한을 지원하고 테러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는 것은 절대로 쉽게 안됩니다. 핵문제 다음은 인권문제입니다.

구중서 위원께서 다 보내면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산가족문제를 가지고 대응하려고 하고 북한은 인권문제로 대응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혀 사이클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인서를 보내느냐 아니냐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서 보낼 수도 있고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보내도 이용하고 안 보내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김인서 개인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은 국가보안법 때문에 무수한 통일애국인들이 죽어가고 있다. 과거에도 죽었고 앞으로도 죽는다. 그리고 김정일의 품에 들어오면 혁명투사들은 다 사랑을 받는다 하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십자회담을 제기해서 이산가족 차원에서 해결하자고 해서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은 이것을 억압정치로 이용하려고 논리의 투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내도 욱하고 안 보내도 계속 욱합니

다. 남한은 통일애국인사를 죽이고 억압하지만 자기들은 인도주의적인 배려를 한다는 것으로 끝까지 나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대응할 때 통일후에 잘 했느냐 못 했느냐를 돌아보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대가없이 보냈다고 한다면 김정일의 억압 정치에 얼마나 이용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통일된 다음에 얼마나 우리정부의 정치에 근시안적이고 억압통치에 이용 당했느냐? 우리가 보내는 것이 엄청나게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정치에 이용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비인도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천천히 처리하자는 것입니다. 전쟁포로가 아닌 이산가족 문제로 묶어서 서로 만나게 하고 거주지 선택도 하도록 하자고 해서 이산가족 문제 해결 차원에서 적십자회담 재개로 대응하되, 북한이 인권문제로 나오니까 적십자회담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천천히 하되, 전통문을 교환해 보면서 국민과 국제여론을 듣고 북한의 반응을 보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송한호 위원 : 이 문제가 93년도에 나왔을 때 적십자사에서 북한에게 당국 간에 협의할 사항이라고 한 편지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분명하게 우리의 입장을 밝혔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70여명을 다 보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김인서에 대해서 가족과 의사를 보낸다고 할 때 일단 한 번 접어두고 보내는 방법을 고려해 보자는 것입니다. 김동환위원장께서 이산가족, 남북자 문제와 서로 교환하는 문제를 가지고 적십자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해서 이산가족문제와 남북자 문제를 부각시켜서 관심을 돌리도록 하고 나중에 북한에 대해서 이산가족문제를 가지고 더욱 압박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놓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0여명까지도 고려해서 일방적으로 다 보내겠다는 조치를 강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다만 이인모를 보낼 때와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인모를 보낼 때는 이인모를 아무 조건없이 일방적으로 보내면 북한에서 상응하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냈습니다. 이번에 보내는 것은 일단 보내면 우리 나름대로는 인도적인 면에 있어서 상당한 강점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보낸 다음에는 계기로 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라든가 이산가족문제를 들고 나와서 대북공세를 전개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병호 위원 : 김인서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호재입니다. 우리가 보내주면 정치공세로 이용할 것이고 안 보내주면 인도적인 문제로 이용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보내도 안 보내도 부담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생활능력이 없는 노인, 가족은 다 북한에 있는 노인을 붙들어서 돌 필요가 있느냐 하는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북한의 논리는 반박을 해야 합니다. 전쟁포로가 아니라는 것을 국제적십자사나 국내에 알려야 됩니다.

두번째로 조치해야 할 사항은 안 보낸다는 소리는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오히려 김인서뿐 아니라 나머지도 보낼 용의가 있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우리의 이산가족문제를 제안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강인덕 위원 : 이 문제는 가지고 있어도, 보내도 동시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1단계로 우리가 요구할 것을 논리적으로 만들어서 북한에게 제의하고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게 해 놓은 다음에, 북한도 투쟁의 한 방법이니깐 우리도 투쟁하는 식으로 대응하는 길외에는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국민이 얼마나 설득되느냐 보아 가면서 우리의 대응태도를 취하면 됩니다.

3명밖에 명단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3명을 보내주면 다음에 3명을 요구할지, 4명을 요구할지 모르고 단계적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명정도가 있다는 것도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대담하게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문

제는 이인모를 보낼 때 원칙이 결정되었어야 합니다. 개인문제를 대남전략에 이용하는 것은 북한이고, 우리는 우리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문제입니다. 국민에게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이인모를 보낼 때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도 이 차원에서 보낸다는 원칙이 결정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야기될 문제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이 원칙을 결정하지 않고 했습니다.

그리고 70여명의 미전향 출소자에 대해서도 사전조사를 해 봐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인데, 이들이 전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서류상으로 전향의 각서를 썼느냐 아니냐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70이 되면 내가 공산주의에 내 청춘을 바쳤는데 이제와서 내 한평생을 반성하는 것 같은 것을 쓸 필요가 있느냐 하는 사람들이 미전향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 전부 조사를 해서 하나의 원칙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칙을 선불리 발표할 필요는 없고 어떤 형태든 적십자회담을 통해서 남북자와 어떻게 흥정할 것이냐? 이산이라는 범위 속에서 논리를 개발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둘러보냈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 하더라도 노력을 했다는 흔적은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동환 위원 : 어떤 필요에 의해서 보낼 사람 숫자를 김인서로 국한하지 않고 희석을 시킨다는 뜻에서라도 많은 사람들을 보낼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면 사상적으로 전향하지 않은 70여명이라는 것은 모양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 많은 이산가족 중 자진해서 월남한 사람들 중에서는 고향에 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이들을 포함해서 가족과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 받아라 하는 입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미전향 70여명이라는 것은 모양이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문현 위원께서 이산가족문제와 인권문제가 대칭되는 것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평소에 이산가족문제를 인권문제로 얘기하는 것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인권개념은 가족이 서로 흩어져서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는 것은 인권의 침해입니다. 가고 싶은데 가지 못

하는 것도 인권의 침해입니다. 북한에서 김인서에 관한 인권 얘기를 하는 것은 포로에 대한 대우가 국제법규에 반한다는 것과 가족과 못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픈데 치료를 못받게 하고 고향에도 못 가게 하는 것이 인권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산가족 문제와 아무것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산가족 문제를 인권적인 문제로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전에 외무부장관이 금년 유엔총회에서는 인권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방침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북한은 김인서문제 등을 극렬하게 거론하는 것이 유엔총회를 앞두고입니다. 93년도에도 유엔총회와 국제적십자총회를 앞둔 때였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선제공격을 하는 것인데 우리는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면서 정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덕송 위원 :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미전향자가 600여명 되는데 전향자가 300명, 미전향자가 300명이라고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미전향자, 전향자 합해서 모두 출소는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국장 : 김동환 위원이 말씀하신 비상조치법에 의한 복역은 다 마친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사회안전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도 다 받았고, 지금은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으로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 이들을 보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 사회안전교양감호소에서 형벌을 마치고 감호처분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숫자가 말미에는 몇십명 단위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호관찰대상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동향을 파악하는 수준의 관찰대상이고 특별히 규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전향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통계로 보면 미전향이지만 그 중에는 본래 공산주의자가 아니었던 미전향도 있고 사상을 버릴 수가 없다는 미전향도 있고, 그러나 이러한 미전향이면서도 북한에 동조하는 것은 아니고

순수한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사람이다 하는 미전향도 있습니다.

70여명은 북한 출신이고 처벌을 받으면서 전향을 하지 않고 동조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봉식 위원 : 항상 여기에 오면 북한문제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모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북관계의 문제가 국내의 내부여론 통일이 안 되어서 대처하기 힘들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모르면 깨우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 언론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나왔을 때 기자들에게 단편적인 현실을 간단히 얘기할 것이 아니라 신문의 논설주간들과 장관이 점심을 하면서 깊은 정보를 주어서 신문의 논지로서 깨우치면 국민들이 방향 감각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출입기자들을 상대로 해서 정보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야별로 논설위원들과 오찬을 하면서 설명해 준다면 언론마다 논설을 쓰면 방향 감각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서 이 점을 제의하고 싶습니다.

윤 우 위원 : 북한이 지난 9월 2일에 미전향장기수 구원대책위원회를 만들 때 김인서라는 말이 들어갔습니까?

국장 : 안 들어 갔습니다.

윤 우 위원 : 그렇다면 북한에서 미전향장기수 구원대책위원회를 만들어서 김인서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공세를 취하려고 할 것이고 적십자와 분리하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국장 : 최근에 김인서 문제를 가지고 국내에서 KNCC가 WCC에 김인서 송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재를 해 달라고 서한을 보냈고 김인서가 유엔고등판무관에서 북한에 돌아가게 해 달라고 한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문제가 잠깐 거론되었는데 포로문제는 국방부 설명에 의하면 당시 포로송환을 할 때 2만7천여명을 반공포로로 일방적으로 석방했고 2만

천8백명을 중립국감독위원회에 인수해서 자유의사에 따라서 하게 해서 5만 명 가량을 북한에서 돌려 보내라고 했는데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상응하게 그런 숫자의 포로를 돌려보내지 않은 것 같은 것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포로를 다 돌려 보내지 않은 이유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송환문제를 제기하면 북한은 아직도 5만명을 돌려보내지 않은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부장 :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8일 오후 15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 14 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향후 북한의 예상
태도 및 대처방향 검토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6. 10. 8(화) 15:00~17:25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정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향후 북한의 예상태도 및 대처방향
검토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6명) : 정홍진, 강인덕, 송한호, 최문현, 곽회정,
유완식, 차영구, 이영호, 이서향, 김기환,
차상필, 신봉식, 조덕송, 김동환,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관계관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제14차 남북대화유경험 비상임자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북한동향 TV를 시청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향후 북한의 예상태도 및 대처방향을 검토하고자 합니다. 특히 북한이 10월 2일 판문점 비서장급 접촉을 요청한 의미, 그리고 이번 접촉에서 종전과는 달리 미국은 비난하지 않고 한국만 비난하는 등 한·미를 차별하는 의미, 또한 종래 북한은 한반도문제는 뉴욕에서의 미·북협의를 추구해 왔으나 이번에는 판문점에서 갖자고 한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지 등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관련한 세부적인 문제를 집중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발표하기로 되어 있는 세 분의 위원중에서 최문현 위원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최문현 위원 : 잠수함 침투사건의 종합적인 평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군부의 실책으로서 체제불안을 더욱 가중시킨 사건입니다. 또 대남·대외정책의 일대 혼선과 내부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무엇보다도 이번 사건이 김정일의 통치권위에 큰 손상을 주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물론 궁지탈출이나 실책만회의 묘책은 없지만 몸부림치기 위한 장난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미, 대일관계, 나진선봉 투자유치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북한의 유일한 선택방법은 대남 보복발언으로 긴장을 조성하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봅니다.

대남보복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기 때문에 북한은 또 어렵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남보복의 선택의 폭이 상당히 좁습니다. 보복해도 외교고립을 자초하고 경제난을 심화시키기 때문에 이익이 없고 보복을 하지 않아도 신뢰성과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북한은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실패했는데

보복하겠다는 말을 함으로써 두번째의 실책을 범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문민정부 수립 이후 모두가 걱정해온 많은 국가위기가 풀려 나가는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대북정책에서 우리가 실패를 많이 했지만 이번 일만 잘 극복하면 과거의 일이 상쇄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이점은 우리 내부의 안보의 허점을 세밀하게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문제에서 찾아야 한다고 봅니다. 50년동안 남북간에 전쟁상태가 계속되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을 보고 우리의 안보를 원점에서 점검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예상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 정부, 국제적인 관심은 과연 북한이 어떠한 보복을 할 것인가. 그들이 말한 보복위협이 어떠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보복위협 발언의 요지는 세가지입니다. 첫째는 백배 천배 보복하겠다. 둘째는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셋째는 가까운 장래에 보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백배 천배로 보복하겠다는 것은 과거부터 해 온 것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둘째 보복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말도 자신이 피해자이고 남한이 가해자라는 논리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판문점 접촉이 이루어졌는데 이 접촉에서 가까운 장래에 보복할테니 미국은 관여하지 말라 하는 것이 조금 구체적이고 마음에 걸리는 의지가 강한 위협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판문점 비서장급접촉을 통해서 UNC측에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것이기 때문에 남한에 대한 위협이라기 보다는 미국에 대한 메시지이고 미국에 대한 공갈로 인한 반사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화가 나 있는 북한 인민군들의 내부 자위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보복카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전혀 가능성이 없더라도 9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째 서울에 미사일 공격을 한다는 전제로는 전면전입니다. 둘째 국지전은 서해 5도를 가정한 것이고, 세번째는 군함·군용기 납치, 네번째는 동·서해안에서 민간어선 납치, 다섯번째는 해외 공관원 살해 납치, 여섯번째는 해외 여행객, 민간인, 상사원을 살해 납치, 일곱번째 국내 주요산

업시설 파괴, 여덟번째 고위공무원, 여당 정치인, 재벌총수의 살해, 아홉번째는 군사분계선 남쪽에 생화학무기 사용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제가 김정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보복카드는 거의 없습니다. 첫째 전면전, 국지전을 각오해야 하는 서울 미사일 공격이나 서해 5도 공격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고 미친 사람이 아닌 다음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둘째 통일전선전략 차원과 남한정부의 고립전략 차원, 정치적으로도 북한이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테러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군인, 군함, 군용기, 해외 공관원의 납치, 국내 주요산업시설 파괴, 국내 주요 정치인, 재벌의 살해, 군사분계선 이남의 하천 등을 이용해서 생화학무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만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성공해도 북한에게 엄청난 피해보복이 돌아가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실제적 보복은 보복하겠다는 위협언동이 가져오는 결과보다도 오히려 북한에게 마이너스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보복하겠다는 자체가 심리적으로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고 실제로 우리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냉철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북한의 1차적인 목표는 이러한 심리전에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의도는 국민의 불안, 정부에 대한 불신, 사생활 위축, 적접지역에 대한 긴장고조와 생활불편, 경제유통질서에 대한 혼란, 대외경제 위축, 관광투자유치의 경색, 한·미공조의 혼란, 대북정책 마찰 등 여러 가지 나쁜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러한 것이 북한이 노리는 목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책방향은 설사 북한의 위협발언이 태산명동 서일필 격이 되더라도 우리는 남북관계의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고 둘째로는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점은 우리 내부의 안보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보완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위협언동에 대한 정부 및 언론의 과민반응이 컨트롤 되어야 하고, 국민의 불안과 동요를 자극하는 정부와 언론의 무질서한 언동도 컨트롤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안보대책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하고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을 정부가 제시해 주고 북한의 동태를 냉정하게 국민에게 알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서 대북 가용카드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카드는 외교공세와 경험입니다. 대유엔 외교공세는 집요하게 해서 결과가 나오도록 끌고 가야 합니다. 여기에는 물론 한미공조가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발실상을 홍보해서 기록을 남겨야 하고, 대북 간접교역, 식량원조, 경제협력은 당분간 동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KEDO사업도 타이밍을 늦추어서 우리의 불쾌한 감정과 국민적으로 합의된 대북 감정을 감안, 미국에 메시지를 주는 동시에 북한에게도 주는 의미에서 경수로사업도 냉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왜 북한이 판문점 접촉을 활용하려고 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첫째는 이 사건에 대한 북한의 최초 대응이 큰 실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와 무관한 사건이라든지 안보리 의장의 설명요구를 거부했다든지 하는 것은 매우 소극적이고 기록상으로도 대단히 바꾸지 않으면 안될 실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같은 공식입장을 정정, 취소하는 방법은 자기들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북한이 판문점 접촉을 개시한 것은 정전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변명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판문점 접촉을 해 놓은 다음에 여기의 기록을 가지고 유엔에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판문점 접촉과 유엔창구 두 가지를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등 우리의 강경한 외교공세에 대응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공식적인 입장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유엔에 대한 그들의 외교적인 입지를 정돈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판문점 접촉에 나온 것 같습니다.

판문점 접촉의 내용은 미·북간의 군사당국 접촉이지만 형식적으로는 어디까지나 군사정전위 창구입니다. 이 양면성을 북한이 이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대남 및 대미 등 대외선전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은 판문점과 유엔입니다. 노동신문, 중앙통신, 인민무력부 성명 등은 진부하게 되었고 앞으로 싸우는 무대는 판문점과 유엔이기 때문에 판문점 접촉과 유엔에 대

한 새로운 대응은 북한의 태도변화라고 보는 것입니다.

유원식 위원 :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의 성격을 올바르게 보아야만 북한의 예상태도를 전망해 볼 수 있고 우리의 대책도 강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의 성격은 북한의 대남공작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다만 그 형태가 잠수함을 통해서 복수 무장인원을 침투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대남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무장공비 침투를 전쟁도발의 징후라든가, 전쟁준비가 완전한 것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데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대남공작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하나의 큰 사건입니다. 북한의 군사전략은 미국의 참전없이 남북간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휴전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북한이 전쟁을 승산을 가지고 도발할 수 있겠느냐, 미국이 참전하지 않는 전쟁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만 가지고 무력남침의 징후다 라고 보기는 너무 성급한 것이라고 봅니다.

이번 사건을 68년의 1. 12사태와 울진·삼척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68년 무장특공대 사건은 대남 게릴라전의 시도라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월남전쟁에서 공산측이 게릴라전에 의해서 승세가 확실해 지고 있는 마당에 김일성이 한국에서 게릴라전을 해서 성공할 수 없느냐 하는 비밀지시도 있었다고 하는 정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1명 규모의 청와대 무장공비 침투사건으로 한국에 혼란을 일으켜서 게릴라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보겠다. 또 울진·삼척의 무장특공대는 130명이 침투했는데 이것은 쿠바 게릴라전의 명장 체 게바라의 전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게릴라전이라는 것은 게릴라를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있어야만 게릴라전이 성공할 수 있는데 남한에 그러한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침투해서 근거지를 만드는 것이 체 게바라의 전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 두 사건은 미국의 참전없는 게릴라전을 해볼 수 없겠느냐 해서 시도한 것이 틀림없습니다. 따라서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은 위의 두 사건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무장공비 침투의 임무는 무엇인가. 어디까지나 가정인데 한총련을 배후에서 조종한 인물을 북한으로 호송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그 자가 체포되면 한총련이 치명상을 입기 때문에 체포를 방지하기 위해서 북한으로 데려가기 위한 것이라고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1968년 8월 남한 지하당인 통혁당 책임자 김종태를 데려가기 위해서 서귀포에 무장선박이 침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상기해 볼 때 그러한 종류의 임무를 띤 침투가 아닌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성격의 것이지 전쟁을 하기 위한 징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보복협박 발언은 김정일의 저돌성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김일성 시대는 보복협박 발언은 없었습니다. 1.21사태에 대해서도 남한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인민항쟁이라는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북한이 왜 6일간이나 침묵을 하다가 훈련중 좌초한 것이다, 피해자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니라고 주장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의 양비론, 모든 당사자는 자제해야 한다는 발언에서 힌트를 얻은 것이 아닌지 생각해 봤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보복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보복을 하려면 두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북한이 전면전을 일으킬 형편이 못되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두번째는 북·미관계 개선에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깔고 보복을 한다면 하지 않겠느냐 봅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빠른 시일내에 보복을 하겠다고 하다가 10월 26일 조선중앙통신에서는 기회가 오면 천배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해서 상당히 약화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6년 3월 9일에 미국이 잠정협정 제의에 호응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이고 주동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4일에는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선언했고 4월 5일부터 7일에 판문점 북측지역에 1백여명의 중무장병력을 투입해서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이러한 전례로 봐서 쇼킹한 사건을 도발할 가능성은 있

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도발은 무모하게 할 수는 없고 두가지 전제하에서 하는데 어떤 형태인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해외에서 정부요인 테러, 외교관 납치, 휴전선에서 총격사건을 일으킨다는 것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남북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남북관계와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경화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장공비 침투가 북한의 대남정책의 본질적인 변화라고는 볼 수 없는 만큼 한국측의 대응에 따라서는 남북관계가 빨리 무장공비 침투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은 나진·선봉 개발에 북한경제의 사활을 걸고 있는데 이 지역의 개발이 한국 정부의 도움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지난 5년간의 경험에 비추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남북관계 긴장의 장기화를 원치 않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 북한은 대북제재문제에 있어서 한·미간의 불협화음을 최대한 이용해서 한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를 가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경수로 건설의 지연, 민간경제협력의 보류 등을 견제하려고 할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무장공비 침투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종전대로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의 대처방향은 북한에 강력히 권고하고 군사도발이 재발될 경우에는 상응한 응징을 할 것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번 무장공비 침투사건을 무력남침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너무 과도한 대비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대로 남북 동반자관계로 나가도록 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이같은 대북정책 노선을 변경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이번 사건이 일단 수습된 후에는 남북대화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무장공비 침

투사건이후 한·미간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예상되는데 갈등이 깊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과의 관계개선 정책은 불변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비서장급 접촉을 요구한 의미는 군사정전위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보기는 속단이고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미관계개선 정책은 불변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비약인지 몰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 한국이 북한에 보복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생각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비서장급 접촉에서 미국은 비난하지 않고 한국만 비난하는 등 한·미를 차별화한 의미도 미국과의 관계개선 정책은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판문점에서 접촉을 갖자고 제의한 의미는 국제여론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판문점이 가장 적절한 장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이서할 위원 : 이번 잠수함 침투사건은 2단계 사태라고 봅니다. 우선 잠수함을 통한 공비침투는 북한이 과거에 해 왔던 혁명전선전략과 일상 정찰활동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나오고 있는 북한의 언동은 말로서는 상당히 공세적입니다만 수세적인 측면이 있고 또 자신들의 실책을 만회하기 위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도 발언동부터 나오는 것은 수세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6일후에 발표했다는 것은 상당히 수세적인 측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비침투사건 이후에 수세적인 측면이 있으나 왜 강경한 태도로 나오고 있느냐? 몇가지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북한이 남한사회도 여러 가지 위기요소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욱 한국사회의 교란을 극대화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두번째는 강경태도로 나옴으로써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긴장이 고조됨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미국, 일본과의 공조가 의견차이로 어렵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될수록 한미, 한일공조가 어렵게 되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세번째는 북한의 대내결속 강화입니다. 북한이 처한 경제위기,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계속 강경발언을 해서 한국과의 대결을 통해서 북한사회의 대내결속 강화를 노리지 않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적인 강경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북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결국 군대밖에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러면 북한의 수세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한국사회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섯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살펴 보았습니다. 다섯가지에는 긍정적인 요소도 있고 부정적인 요소도 있습니다.

첫째 안보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강경한 도발언동으로 인해서 국민의 대북 경각심이 고조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남북간의 우발충돌 가능성이 고조된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외교적인 측면에서는 긴장이 고조될수록 한·미·일 공조체제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여지가 많습니다. 북한도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한·미·일 공조체제가 부드럽게 진행되지 않도록 긴장을 고조하는 측면이 있고 또 실제로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우리가 OECD 가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의 자본투자가 위축되어서 한국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번째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정치계가 보수화로 나가기 때문에 한총련 등 좌익단체에 대한 통제가 용이하고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단합된 태도, 반공의식을 유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섯번째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와 불안요소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요소로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고조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의 한국 진출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경제적인 문제입니다만 우리의 과소비 풍조가 억제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이해진 기강도 확립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도 한반도 긴장고조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서 앞으로 자신들의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의 북한 대책이 북한 스스로 필요성에 의해서 결정하는 측면도 있지만 남한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향후 태도를 취하리라는 측면도 있습니다.

향후 북한의 전략은 극단적으로는 두가지의 양극적인 정책노선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가 강경정책 지속입니다. 그동안 냉전종식, 김일성 사망, 가중되는 경제난 등 대내외적인 도전에 직면한 김정일로서는 체제위기 극복을 위해서 군사력을 활용하는 대남강경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또 이것만이 체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와 상반된 극단적인 정책은 유화정책의 채택입니다. 강경정책만 고집할 경우 국제사회로부터 외교적인 고립을 초래하고 외부로부터의 경제적인 원조 및 투자감소, 또 미국과의 관계개선 노력이 무산되는 것을 우려해서 대미, 대일관계 개선을 향한 유화정책의 채택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경정책과 유화정책의 중간에서 2중정책을 취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중정책은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은 치중하되 남한과는 계속 연미봉남정책을 취할 옵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3가지 가능성 중에서 북한이 취할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계속적인 강경정책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중간단계인 미국, 일본과의 관계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남한에 대한 배제정책을 쓰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우리의 대응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안보위협에 대해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북한의 도발이 과거에 그렇지 않았는데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벌어진 것처럼 과민반응을 보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북한의 도발가능성을 상수로 전제해서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정권수립이후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통일문제 또는 한반도의 장래를 위해서 경계노선만을 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지속적인 대북정책 또는 포용정책을 통해서 남북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 말씀드린 것과 두번째 말씀드린 것은 서로 모순됩니다만 그러한 의미에서 한반도 상황이 2중적인 상황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경계하면서 북한의 도발가능성, 혁명전략이 변하지 않은 것을 상수로 전제로 하고 지속적인 포용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노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북한문제가 국제화, 다자화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핵문제, 식량지원문제만 보더라도 남북관계 문제만이 아닌 국제사회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군사적인 대응만이 아니라 국제적인 공조와 경제적인 공조도 강조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측면이 포함된 포괄적인 대북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비서장급접촉을 요청한 이유는 북한이 그동안 판문점 정전위를 무력화시키고 판문점에 인민군대표부를 설치했는데 이번에 비서장급접촉을 요청한 것은 자신들의 협박의 강도와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한 단순한 변동이지 지속적으로 이러한 정책을 유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특별히 수세적인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협박의 강도라든지 선전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비서장급접촉을 요청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9월 9일부터 10일 사이에 동북아 협력대화라고 해서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한국이 참가한 5개국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이 회의는 민간학자들만이 아니라 정부관료들이 과반수 이상 참가했습니다.

미국대표로 척 카트만 부차관보가 왔는데, 정부관료들만의 회합을 별도로 갖자고 해서 회의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카트만이 미국은 북한의 붕괴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간 차원에서 다자간 대책 또는 북한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회의는 내년 3월에 미국에서 열리는데, 민간인들과 함께 모이지만 정부관료들만 다자간 대책을 논의하자. 그리고 주의제는 앞으로 어떻게 북한문제를 논의해야 되느냐 하는 것

을 제기했습니다. 지난 1월에 북경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이 문제는 군사분야 위원들께서 먼저 토론해 주십시오.

이영호 위원 : 세 분 위원님께서 발표하신 대로 이번 침투사건의 성격은 지속적인 대남공작활동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인다 하더라도 과거의 양태와는 다르게 잠수함이 노출되어서 우리에게 잡혔다는 것이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과거에 지상으로 침투한 병력들에 대해서 남한에서 자체적으로 들고 일어났다고 해서 남한에게 덮어 씌울 수도 있었지만 잠수함 자체는 북한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6일후에 혼란중에 좌초했다고 변명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북한이 보복하겠다고 하는 행태는 이서항 위원이 여러 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 남한사회를 교란시키고 긴장을 고조시켜서 한·미간을 이간시킨다는 등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북한에 과연 천재들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전부 평가해서 얘기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북한이 과거에 일상적으로 행해 오던 행태들의 연속선상에서 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할 것은 과거에 북한이 보복하겠다고 했을 때는 반드시 사건이 1년이고 2년후에는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감안했을 때 북한이 보복을 해 온다면 어떠한 보복을 해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하지 않지만 우리 군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우리 군함을 북한 쾌속정이 공격해 올 수도 있고, 항공기에 대해서 유도탄을 발사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도발가능성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해외에서의 테러는 이번 사건과는 성격이 근본적으로 틀리기 때문에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항상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남북간에 자유왕래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북한은 어떠한 형태로든 무장간첩을 계속 보낼 것입니다. 동서독간의 통일이 이루어지기 직전까지도 독일은 무력으로 통일할 것을 꿈꾸고 있었고 간첩들을 서독에 침투시켰듯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행태는 북한

이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가정할 때 이번 사건을 우리가 너무 크게 확대해서 북한이 남북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잠수함이 잡혀서 들킨 것 뿐이고 그렇지 않았다면 강릉에 몇번이고 들어가서 활동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자신의 경각심을 한쪽으로는 갖고 한쪽으로는 남북대화를 하는 2중정책을 써야 하는 자세를 가졌어야 하는데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경계심이 무너지는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 스스로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냐. 다행히 이러한 사건이 생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안보의식이나 국방태세를 재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이번 기회에 미·북간의 직접적인 군사대화에 이용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남북대화를 적극적으로 끌고 나갈 수도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훈련중에 좌초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정부에서 발표한 어떠한 문구에도 이것이 훈련중에 된 것이라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절차들에 따라서 행동했어야 하고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했어야 하고, 유엔에서 외무장관이 얘기할 때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만 언급했지 남북기본합의서는 일체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와같이 정부 스스로도 남북대화나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서 이미 잊어버렸거나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상태에서 어떻게 남북관계를 스스로 풀어 나가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접촉할 때마다 우리 정부는 남북대화를 정상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고위급에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국방부 대변인을 시켜도 좋고 작전부대의 대변인을 시켜도 좋으니까 남북기본합의서 절차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제지할 권리가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잠수함과 승무원을 돌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목살만 할 것이 아니라 정책적으로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동서독간에 기본합의서가 채택된 이후에 동독의 간첩들을 서독이 많이 잡았는데 이들을 기회있을 때마다 동독과 협의해서 풀어주면서 대신 대가를 많이 받아냈습니다. 우리도 무조건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 로 유도해서 고향방문단에 이용한다든가 이산가족면회소를 만드는데 이용하는 방법들을 생각해 놓는 것도 좋다는 생각들을 해 봤습니다.

차영구 위원 : 결론적으로 우리 민족에게 천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연의 사건이 일어나서 국민들을 뭉치게 하고 대가도 치렀지만 치를만한 가치가 있는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기 전에 국민과 지성인 들도 북한에 대해서 기대섞인 꿈이 많이 잠재되어 있었고 안보를 최후로 담당하는 군대마저도 그러한 경향이 있었고, 우리 사회에서 군의 위상이나 안보의 중요성이 거의 실종되다시피 할 정도로까지 가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군대도 사회의 일부라고 보아야 합니다. 사회가 강하고 국민이 뭉쳐있고 안보의식이 강하면 군도 강하고 기강도 강하게 되지만 사회가 강하지 못하면 강한 군대가 나올 수 없습니다. 군도 사회의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의 영향을 엄청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안보의식이 해이한 상태에서 군만이 뭉쳐서 강한 군대를 만든다는 것은 무리한 요구입니다.

이번에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군대를 질타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무기도 현대화 하라는 등 군대를 살리자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을 얻게 되었고 안보에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미공조부분에서 이상이 있는 것처럼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미공조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한미간에는 임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도발, 간첩 등의 사건이 벌어질 때 미국은 여기에 들어올 법적인 책임은 없고 책임은 한국에게 있습니다. 테프콘 II로 올라가서 전면전적인 성격에 가까워지면 미국이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히 미국은 제3의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미국은 멀리 있어야 하는데 안 들어온 것처럼 국민들이 느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내면적으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대선 때문에 확대되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에 있고 다만 미국이 직접적으로 관여할 여건과 상황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와 내면적으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공조에 큰 문제가 있을 것처럼 인식하는 것은 우려가 보다 많은 측면이 있고 내부적으로 갈등적 요인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T/S훈련도 미국과 사전협정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도 기본적으로 T/S훈련이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T/S훈련 프로그램은 있지만 매년 상의해서 실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T/S훈련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하고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안을 안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필요하면 언제나 제기해서 논의할 수 있습니다. T/S훈련을 한다는 것은 북한에게 상당한 압력이 되기 때문에 대북정책에 있어서 압력으로 동원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진짜로 실시하느냐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입니다. 예산, 방법, 시기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도발문제는 한국에 전면전적인 위협이 오면 작전권이 미국에 넘어 갑니다. 그래서 미국의 개입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많은 정책들을 북한이 생각할 것입니다.

11월초가 미국 대선입니다. 그래서 북한도 지금부터 11월초까지는 미국이 강력한 개입을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을 계산할 것입니다. 선거기간을 활용해서 계속 강경발언, 도발 등을 계속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제공조, 한·미공조 등 우리의 대응이 완벽하면 북한이 국면전환을 위한 극적인 탈출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강인덕 위원 : 비서장회의를 요청한 것은 현지 사령관으로 하여금 군사적인 문제로 부각시켜서 미국과 잠정협정을 위한 장성급회담 방향으로 몰고

가기 위한 것이 명백한 것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북한이 보복하겠다고 했는데 보복의 형태가 무엇이냐. 전면전으로 유발될 수 있는 행위는 위협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원암살, 파괴보다는 3인조, 4인조 게릴라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보았듯이 3인조 게릴라 몇 개조가 나뉘어서 침투하면 대응하는데 어렵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어떻게 확보하고 군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고 안보의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통령도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 노력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안보수단으로서의 군사력 증강을 정책으로 보여주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암살에 대비해서 80명을 선정해서 호위를 시키겠다고 한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호위를 시키는지, 그 중에 핵물리학자가 제일 많다고 하는 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냉정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너무 소란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장공비들이 북한으로 넘어갔다고 봅니다. 여기에 있어도 잡기 어렵고 나중에 시체로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작전이 종료되었다고 봅니다. 이제는 조용하게 구체적인 대책을 세웠으면 합니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어야 하겠습니다.

송한호 위원 : 북한이 전면전까지는 나오기 힘듭니다. 전면전은 북한의 종말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서는 체제위기에 몰린 북한이 동반자살식의 모험을 할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북한지도자들이 그렇게 우둔하지도 않고, 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반정부세력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정권이 위협받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동반자살식의 전쟁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서해 5도 등 국지적인 공격에 대해서 대비책을 강구하는 것은 좋지만 이것도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주력하는

북한이 미국의 대선을 앞둔 시기에 도발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은 보복위협을 통해서 나름대로의 심리적인 성과는 거두고 있다고 봅니다.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조성된 대북규탄 분위기에서 북한이 도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관심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초점이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는 북한의 보복위협이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대처방향을 2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령 서해 5도를 북한이 공격한다면 우리도 북한지역에 대해서 제한적인 공격을 한다는 응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말로써 끝나게 되면 앞으로 걸잡을 수 없는 곤경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한미공조 문제는 무장공비 사건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 입장에 서서 북한을 규탄하는 것이 우리의 기대에 못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협조가 절실히 요구되는데, 만약 북한이 재도발하는 경우에는 북한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제한목표를 공격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단호한 의지를 미국에게 알려줘서 미국으로 하여금 우리의 요구에 접근해 올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구종서 위원 : 북한에서 판문점 비서장 접촉을 요구한 것은 우선 시간적으로 다급했던 점이 있고 또 하나는 군인과 군인이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닌가 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부정적인 견해가 나왔습니다만 그동안 정전위를 소외시키지만 소외시킨 효과가 별로 없어서 북한이 정전위 재개를 검토하기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전제를 두고 주시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나온 것은 행태의 변화라고 봅니다. 북한도 세대교체가 있었을 것이고 유엔에 가입했고, 서방측의 외교관계가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수법은 안 통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라는 측면으로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도발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백배, 천배로 보복

하겠다는 말은 선전용이지 사실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북한의 국가목표와 외교전략으로 보아도 도발은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많은 분이 운이 좋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한·미공조체제에서 우리 힘의 부분을 늘려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익과 대북인식에 차이가 있지만 결국은 한·미공조체제라는 통로를 통해서 대북정책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이익이 반영되지 않으면 상당히 불리합니다만 그동안 우리가 끌려 왔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피해가 있는 상황마다 미국과 조율해서 한·미공조체제에서 우리의 몫을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는 북한의 경제관료나 외교관료에게는 아주 못마땅한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북한의 온건파와 강경파의 견해차이가 심화되리라고 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지도층의 내분입니다. 북한이 붕괴되거나 약화되기 위해서는 집권세력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야 하는데 이러한 사건이 자주 발생하면 분열이 심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아직은 강경파가 우세한 것 같은데 온건파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응징보복을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자율적으로 보복을 하겠다는 것을 미국과 사전동의를 받아 놓고 미국 스스로 발표하게끔 하는 것이 북한에 대한 경고 메시지가 되지, 우리 혼자 얘기하면 북한이 알아들을 것 같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안보영수회담을 한다고 하는데 안보영수회담을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북한은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세련되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인덕 위원 :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시고 구종서 위원도 군부와 김정일간에 갈등이 있는 것 같다는 관점, 군부가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하는 관점

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자기 일을 하는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군대는 군대 나름대로의 일을 하고 개혁일꾼들도 나름대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 발각된 것 뿐입니다. 김정일 입장에서는 시킬 사람에게 자기 임무를 시킨 것이지 갈등이 있다거나 군부에게 끌려간다는 관점으로 보아서는 안되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김정일에게 엄청난 데미지를 주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11명을 사살한 것은 저는 처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무수행을 못 했기 때문에 처형지령이 내려왔든가 아니면 26명 가운데 당 대표가 있어서 회의를 통해서 책임을 몰아서 죽인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김정일에게 이번 사건이 치명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김정일의 명령없이 군부가 독자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차상필 위원 : 유완식 위원께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번에 무장공비가 침투한 이유가 춘천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에서 요인암살, 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침투한 것이 아닌지?

두번째는 현성일이 인터뷰한 기사가 있습니다. 내용은 북한이 경제난으로 인해서 붕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은 남침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현성일은 함경남도 위원장의 아들인데, 이 사람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것이 좋은지?

최근에 미그기를 몰고 귀순한 공군대위가 북한은 10월 14일날 전면남침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유완식 위원 : 전국체전에서 요인을 암살하려고 침투했다는 것을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지만 그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잠수함을 통해서 침투시켰는지는 의문입니다. 그 보다는 더 중요한 임무를 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통령을 암살해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정리하는 뜻이 아니고 제

의견을 얘기할까 합니다.

잠수함 문제는 북한의 실수입니다. 그 실수를 합리화시키는 것이 훈련중 표류가 되어서 우리지역에 나타난 승무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중에 표류했는데 우리가 학살했으니 피해자기 때문에 보복하겠다는 논리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맞는 논리입니다. 보복방법은 유완식 위원이 말씀하신 두가지가 한계입니다.

비서장급 접촉을 요청한 이유는 협박은 군인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교관이 북·미회담에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연구하는 것은 좋지만 결론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복하는데 미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뜻 속에 보복의 한계가 들어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말로써 천배 백배 보복하겠다는 것과 돌려주지 않으면 보복하겠다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고 보복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있다고 생각하고 대응은 해야 합니다.

군인이 보복을 하겠다고 한 이상 위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테러를 했다고 연락해야 보복이 되는데, 외교관을 납치하고도 안 했다고 하면 보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비행기, 군함 등 적은 범위의 보복이 있을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복이 왔을 때 보복을 실패시키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복을 하는데 보복을 당해 버리면 큰 일입니다.

그리고 승무원 송환문제는 잠수함은 노획품이기 때문에 돌려줄 수는 없지만 시체는 인도적인 의미에서 돌려주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 경우에도 사과를 하면 인도적인 견지에서 시체를 돌려줄 수는 있다고 봅니다. 이서항 위원의 말에 덧붙여서 사과를 하면 인도적인 견지에서 시신을 주겠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군사공동위를 꺼내면 초점이 흐려지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공동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면 군사문제가 대화문제가 엉켜서 이상해지리라고 봅니다.

국장 : 이번 사태 이후 앞으로의 대북정책 방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언론에서도 여러 가지로 추측해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내에서는 대북정책기조의 큰 틀은 가지고 가고 이렇게 증대한 도발사건이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정책기조를 다시 정리하기를 최우선은 전쟁재발방지, 두번째는 북한의 개혁·개방 유도, 그리고 4자회담은 기조상으로는 계속 추진하는 것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얘기한 것처럼 북한이 도발을 감행한 것을 없었던 것처럼 할 수는 없다는 것은 경험, 국제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부분 등은 북한이 보복하겠다고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기간 보류시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것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갈 수만은 없고 상황이 변화할 것인데 상황이 변화했을 때 융통성을 발휘할 수 없게 스스로 발을 묶는 정책적인 선언이나 발표는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중단, 동결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되었지만 AN-2기가 동해상에 10대와 서해상에 10대가 나타난 것이 이번 사태와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알기로는 AN-2기는 봄과 가을에 비행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공교로운지는 몰라도 안하던 것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웅산 테러사건은 엄청난 도발이었는데 북한이 그때는 준전시상태를 선포했지만 지금은 보복하겠다고 하면서도 준전시상태를 선포한다든지 하는 것이 일체 없다는 것입니다. 아웅산 사건때는 북한이 내부적으로 준전시상태를 선포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의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그러면서 3당국회담, 체육회담, 수재물자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와 그때가 다른 것이 그때는 우리가 보복을 했어야 한다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는 북한이 선수를 쳐서 보복을 하겠다고 나섰다는 것입니다.

어제 오후에 유엔측 군정위 비서장 명의로 북한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부대표 박임수 앞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서한내용은 잠수함을 통해서 상당한 무장력을 침입시켜서 도발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다. 설상가상으로 보복

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정전협정 15조 위반이니까 그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는 태도로 바꾸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제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언론에서 과당취재경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협조를 요구하는데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합의서 이행문제나 기본합의서 위반사항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제기하지 못했다는 것은 우리 내부에서도 그렇게 통감하고 있습니다. 기본합의서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기본합의서를 제기할 수 있는 찬스마다 기본합의서를 제기해서 축적시켜 놓는 것은 필요한데 못했다는 데 대해서 자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오면 실수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북한 내부에는 알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도 필요한 부분만 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0월 2일에 남포에 들어갔던 대우직원들이 나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나왔습니다.

최문현 위원 : 1. 21 사태와 울진·삼척지구 사태 때는 북한이 발뺌을 했기 때문에 시체는 안 돌려주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북한이 인정했기 때문에 사과하면 시체는 돌려 주겠다고 선수를 쳐서 대북공세를 취해야 합니다.

국장 : 북한이 송환을 요청했지만 송환받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면 사과를 안 합니다.

최문현 위원 :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과를 하면 보복을 하지 않고 시체를 돌려주겠다고 공세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송한호 위원 : 대북정책의 기본목표를 전쟁방지, 북한의 변화라고 말씀하는데 우리의 목표로는 맞습니다만 대외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말은 북한에 대한 극심한 자극입니다. 북한체제를 바꾸어서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없는 것인데, 언론과 당국에서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고 공언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볼 때는 상당한

도전입니다. 오히려 북한의 대남적대정책의 변화를 유도한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덕 위원 : 60년대식으로 휴전선에서 북한이 소총으로 공격한다면 우리가 탱크로 포탄을 날렸는데 북한에서 아무 짓도 못했습니다. 지금 이러한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차영구 위원 : 대규모 전쟁이 아닌 저강도의 도발이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대규모 전쟁으로 전면도발일 경우에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애매한 도발부분에 관해서 한·미간에 굉장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입장은 당연히 적합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국민정서에도 맞고, 미국 입장에서는 전면적으로 가는 위험성이 높은 것은 한대 맞고 참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상황의 설정과 설정된 상황이 나타났을 때의 행동의 자유는 앞으로 한·미가 많은 노력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강인덕 위원 : 그것은 한·미간의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것이고, 대통령의 심중을 누가 읽어서 포탄을 쏘고 나서 내가 했으면 군복을 벗겠다고 할 사람이 나와야 됩니다.

차영구 위원 : 한·미가 합의한 교전규칙이 있습니다. 교전규칙에 의해서 실무 작전부대장이 움직입니다. 교전규칙에 의하면 북한이 발사를 했을 때 대응사격을 합니다. 교전규칙에 따라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보복도 전방에서 북한이 사격을 했을 때 우리도 사격을 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우리가 평양을 폭격하겠다는 문제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기획부장 : 차기 모임은 10월 29일 개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5. 제 15 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향후 1년간 남북관계 예측 및 남북대화
전망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6. 10. 29(화) 12:00~15:45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향후 1년간 남북관계 예측 및 남북대화 전망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5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송한호, 최문현,
유완식, 이영호, 이서항, 차상필, 신봉식,
조덕송, 김동환, 이경숙, 구종서, 윤 우
- 당원 : 차관, 국장, 기획부장, 유인택 협력관, 관계관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남북대화유경험 제15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주간북한동향 TV를 시청하시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차관님께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차관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계시겠습니다.

통일원 차관 : 남북회담 대표를 역임하시고 대북전략 입안에 직접 참여하신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지니신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북정책에 대해서 좋은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있습니다만 전쟁이 있을 때 평화를 생각하는 것이 저희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이 그러한 준비를 가장 많이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카트만 부차관보가 떠납니다만 한·미간의 결속관계가 과거에는 국민들이 보기에 느슨하게 보이는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의 무장공비 사건을 계기로 해서 로드 차관보가 왔을 때 다시한번 한미간의 결속관계가 단단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전화위복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또한 무장공비 사건은 다른 의미에서 앞으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점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장공비 사건에 대한 시인·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고 뉴욕에서 이형철 미주국장과 민튼 과장이 1차 만났고 이번주에 다시한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국과 미국이 의견을 맞추어서 북한을 압박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결과가 어떻게 될지 확실치 않습니다만 이러한 계기를 남북관계를 진전시키고 원하는 방향으로 끌여가기 위해서 활용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향후 1년간 남북관계 예측 및 남북대화 전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앞으로 참석해서 실제로 이 분야에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배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책입안에 성실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더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기획부장 :오늘은 향후 1년간의 남북관계를 예측해 보고 그 토대위에서 남북대화를 전망하는 것을 주제로 잡았습니다. 세부적인 남북관계의 예측에 대해서 우리측 입장에 선 예측, 그리고 북한측의 입장에 선 예측을 설정해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사회를 맡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진 위원장 :오늘 주제는 FAX로 받아 보시고 각자 깊이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강인덕 위원과 최문현 위원의 발표를 듣고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강인덕 위원 :오늘 주제가 광범위하고 주변정세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년동안 우리의 주변정세 특히 주변국가의 동북아 전략을 보면 미국의 경우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클린턴이 떨어지고 돌이 되면 엄청난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의 형편에서는 돌이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클린턴의 승리가 예상되는 한 지금의 정책이 계속 유지되리라고 봅니다. 현재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특징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은 대중국 포용정책을 계속해서 펴나갈 것이고 그 속에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기본기조를 유지해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본은 이번 선거에서 특별히 지적될 수 있는 것은 일본정계의 보수화입니다. 일본정계의 보수화는 국익우선주의가 심화되는 현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북방영토와 독도 등 영토문제, 그리고 극동유사시 방침 문제, 교과서, 종군위안부 등 역사인식 문제, KEDO의 현안문제, 북한의 연착륙 문제 등 한반도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외교정책에 있어서 보수주의와

국익우선주의 정책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이중성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옐친의 건강이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내정의 불안정, 경제침체는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보다 동북아에 있어서 러시아의 발언권이 커지리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만 그러나 현재 러시아는 공산당 뿐만 아니라 민족주의 세력까지 포함해서 슬라브민족주의 경향이 대단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옐친 정부에게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북방영토에 대해 지금까지 옐친이 취했던 태도가 지난 1년간 대단히 경색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국가이익을 고려하게 되니까 관여발언을 거듭하리라고 봅니다.

중국은 9차 5개년계획의 추진을 위해서 연해안의 도시로부터 내륙의 18개성과 자치주로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연해안의 발전을 통해서 유입되는 자본과 기술을 내륙으로 밀고 들어가겠다는 것인데, 연해안 일대의 인건비가 대단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점점 내륙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달 25일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18개성과 자치주에 대한 투자유치 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동북아의 안정유지에 주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전보장상의 문제점은 미국과 일본에 대응전략을 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도 한반도에 관해서는 국가이익을 중심에 둔 이중성을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앞으로 주변 4강의 동북아 기본전략은 크게 변화하지는 않겠지만 국가이익을 위해서 이중적인 성격을 보이는 경향이 두드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북한 내부의 정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1년간 유훈통치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면 김정일의 공식지위 승계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고 현 지위에서 현재의 통치형태를 계속 유지할 것입니다.

따라서 군부중심의 정치체제는 계속될 것이고 경제의 정상화 보다는 체제

유지에 무게가 실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개혁 거부태도는 지속될 것이고 부분적인 개방과 ‘고난의 행군’, 고난의 행군은 극심한 경제적 내핍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고난의 행군 동시에 긴장조성 방식을 통해서 체제유지에 주력하리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패쇄성을 풀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남한정세는 내년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는 해입니다. 과거의 예에 따르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는 각양각색의 의견들이 표출되는데, 특히 이번에는 경제가 주제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햇볕론이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민회의의 주된 생각은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햇볕론적인 주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경상수지, 무역적자의 폭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 대한노충이 두 개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선명성 경쟁과 같은 노조활동이 격화될 것이고, 여기에 권력의 누수현상이 추가된다면 우리의 대북정책 수행능력은 대단히 감퇴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대통령의 강력한 대북자세가 계속되리라고 봅니다만 북한에서 볼 때 남한의 대북 대응능력이 약화되는 시기로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주변정세와 남북간의 내부정세의 변화를 관찰해 보면 대체로 남북간의 관계는 향후 1년간 획기적인 개선이나 그 반대로 엄청난 악화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의 대미 우선정책은 계속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 대한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개입정책이 지속되는 한 남북관계는 지금보다 나아지지도 않고 악화되지도 않는 상태가 지속될 것입니다.

한가지 걱정되는 것은 일본의 대북정책이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난 9월 13일부터 15일까지 나진·선봉에 갔던 일본 사람들의 리포트를 받아 보았습니다만 한결같이 투자조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한국으로서는 그렇게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가장 북한에서 문제가 되는 쌀문제에 대해서 일본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로 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년중에 일본은 적정 비축미의

2배의 보유식량인 300만톤을 보유하게 될 것입니다. 요미우리신문의 쌀관련 기사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95년도에 수입한 수입미 45만톤 가운데 10만톤 밖에 팔리지 않아서 재고가 30여만톤이 남았고, 금년에 수입해야 할 쌀이 51만톤이고, 작년에 국내에서 수매한 쌀중에 남아 있는 것이 52만톤이고 금년 수매해야 할 것이 150만톤입니다. 그러면 내년의 일본 비축미는 280-300만톤입니다. 300만톤이라는 것은 적정비축미 150만톤의 2배입니다.

문제는 보관비가 톤당 14,000엔이기 때문에 300만톤의 연간 보관비가 420억엔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정부로서는 420억의 창고비를 지급하는 것 보다도 일부를 북한에 지원함으로써 영향력을 증대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러한 상황을 북한이 알기 때문에 일본이 주겠다고 해서 받은 것이 지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정책 중에 내년도에는 쌀지원문제를 재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미, 대일공조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 작년과 같은 일이 발생하리라고 봅니다.

남북관계에서 두번째로 지적할 것은 잠수함 침투사건 이후 취한 대북접근책이 시인·사과와 재발방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 기조를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냉각기를 무한정 끌고 갈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의 틀을 유지하면서 냉각기를 짧게 잡는 문제는 지금부터 생각하고 여론을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이 돌발적인 정책을 취한다든가, 자기들의 국익을 위해서 기존의 정책을 밀고 나간다면 우리와 반드시 마찰이 생길 것이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의 폭이 지금과 같이 좁혀져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융통성의 폭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으로부터 어떻게 점진적으로 빠져 나가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빠져 나가기 대단히 어렵다고 보는데 적어도 내년 1-2월까지의 형성된 폭을 넓히는 조치를 여론을 통해서 조성하든지 외국인론을 통해서 조성하든지 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조체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조체제는 정부간에만 이야기

하지 말고 민간기구나 학자들간에도 많이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잘 듣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보면 냉가기를 짧게 잡고 내년 전반기까지 취할 수 있는 대북정책의 우선순위 첫번째는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하는 것이고 두번째는 남북거래를 확대하는 조치, 세번째는 9월달에 나진·선봉투자설명회에 21명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경제무역지구에 대한 투자조사를 해제하는 문제, 특히 KEDO협상에 대한 협력문제에 대한 우리의 준비를 해 놓아야 되고 그러면서 냉가기를 지났을 때 우리가 전개할 수 있는 폭을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기발한 대북제안을 정부가 내놓는다고 해도 앞으로 1년동안에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성사여부에 관계없이 4자회담을 기조로 잡고 기존의 틀 안에서 융통성의 폭을 넓히는 곳으로 기본정책 방향이 모아져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다음은 최문현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십시오.

최문현 위원 :저도 포괄적인 얘기로 끝낼 수밖에 없습니다. 강인덕 위원께서 국제적인 시야에서 정세전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남북한 중심으로만 발표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향후 1년간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타개해 줄 긍정적 정세변화 또는 계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첫째 북한의 형편에서 볼때는 지금의 어려운 사정이 좋아질 전망은 거의 없고 악화시키지 않느냐 하는데 대해서 북한 지도부가 전전공공하고 있습니다. 50년간 자라난 체제모순과 체제부실의 암세포가 자라나서 체제의 존재를 위협하고, 김정일 통치구조를 미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일은 죽은 김일성이 통치하는 이른바 유훈통치시대를 연장해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의 변화가 없습니다. 친북세력들은 정책의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일관성으로 얘기하는데 정책의 일관성 문제가 아니고 정책의 교조성과 경직성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변화에의 적응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고 싶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식량위기와 사회통제 기능의 이완 등으로 계속해서 대내 억압통치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내 억압통치를 하자면 결국 대남 긴장조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쟁불가피론, 대남보복론등의 위협적 언동은 남한에게 보복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군부의 대내 계엄통치용인 동시에 대남 긴장조성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은 대내억압, 대미유화, 대남적대의 3대기조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은 장성이고 남한은 쫓병이고 남쪽을 무시해서가 아니고 대화를 했다 하면 이제는 북한의 개방화, 정보화, 개인주의화 등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대화와 교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다.

둘째, 남한의 입장에서 볼 때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조성된 우리 국민의 충격과 안보정서, 정부의 강경한 대북정책 등이 완화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납득할 만한 조치와 일정한 냉각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북한이 사건에 대한 시인·사과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건을 내놓았기 때문에 조건을 거두어 들일 수가 없습니다. 냉각기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강위원은 말씀하시지만 냉각기가 조기에 끝날 수 없다는 것은 국내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예산국회가 끝나면 서서히 대선정국의 막이 열리게 되며 남북관계와 안보문제가 가장 예민한 문제이고 안보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논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정부는 대단히 조심스럽게 되면서 이인모사건, 대북 쌀지원문제, 북한 잠수함 침투사건 등으로 야기된 국민의 대북정책 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부담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는 장난치기 좋은 시기가 오는 것입니다. 북한이 남한정부와 대화를 해서 남한정부에게 점수를 따주는 일을 할 리가 없습니다. 안보논쟁이 전개되면 야당의 대정부 논쟁을 부채질하는 국론분열에 더 혈안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를 하기가 매우 어렵고 정책의 신뢰성회복과 국론통일에 더욱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한총련 간부 등 국내 친북 좌익세력의 의법조치와 척결의 부담을 안고 있는 정부로서는 남북대화보다는 국내의 반체제세력을 소탕하는데 오히려 힘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 총선거 기간중에 우리는 국내부담이 너무나 큼니다.

셋째, 대미관계, 대일관계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재선되면 미국은 앞으로 4년간 좀 느긋한 자세로 대북한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구사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공조에 금을 가게 하면서까지 조급하게 서두르는 자세는 시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은 시장으로서의 매력이 없고 영토로서의 야욕의 대상도 아니고 투자의 대상도 아니고, 또 북한은 미국이 원하는 만큼 개혁개방을 수용할 태세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한 수교를 서둘러 추진하지 않을 것입니다. 연락사무소 설치로 만족하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미국은 북한 잠수함사건으로 고조된 한국국민의 정서와 한국정부의 대화조건 제시를 고려해서 대북관계 개선보다는 한미공조를 더 중시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본도 남북관계의 경색, 미북관계의 교착에 영향을 받아서 강 위원은 일본이 북한과 빠른 교섭을 하지 않을까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저는 반대입니다. 일본도 결국은 북한이 상품시장으로서 매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투자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과 국교수립을 하게 되면 배상으로 일본의 목을 쥐려고 하지 일본에게 이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정치적인 쇼 수준의 수교협상은 하되 빨리 관계가 진척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정치불안이 계속되는 한 일본도 느긋한 자세로 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대통령 선거 전까지 향후 1년간 남북관계는 잠수함 사건과 같은 사건은 계속 되풀이 되겠지만 좋아지지도, 악화되지도 않는 사태가 지속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남북한 관계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에도 대비를 해야 합니다.

첫째,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지만 북한은 3년상이 끝나면 공식승계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7월 이후에 빠르면 9.9절, 10.10절 즈음에

김정일이 공식승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북한의 어려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길이 승계밖에 길이 없다고 할 때는 김정일의 승계를 가지고 잔치를 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김정일이 웃고 정치를 해야 되고 덕을 베푸는 정치를 해야 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웃는 얼굴을 표시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내억압, 대남적대, 대미유화의 3대정책기조의 뉘앙스를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컨대 4자회담 수락한다든지, 남북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겠다든지, 김정일이 공식승계를 한다고 하면 가능성은 적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둘째, 북한의 식량위기가 극심하고 올해 생산량이 350-380만톤밖에 안된 다니까 200만톤 이상의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작년보다도 더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내년 4월부터는 식량이 모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일 할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공장도 문을 닫게 되고 산업침체가 확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탈북자가 급증되고 인민들의 압박이 당중앙지도부에 압박이 가해져서 정치혼란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지도부가 오히려 남북관계의 안정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북한지도부가 정전협정 관리기구에의 복귀,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해서 제스처를 보인다든지, 대미·대일 수교회담을 북한이 조급하게 서둔다든지 하는 것에 대비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중국 등소평의 사망과 공산당 독점지배체제 붕괴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중국이 정치적 다당제 등 정치개혁을 시도할 때 북한에게 엄청난 충격이 있을 것입니다. 북한지도부는 국제적으로 고립되기 때문에 개혁·개방시도, 당, 경제기구, 폭력기구의 3두집정체제의 시대가 오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한 정상회담·남북한 각료급회담 등 합리적인 방향전환이 가능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은 1년내의 가능성은 없습니다만 그 이후에도 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대비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책방향입니다.

첫째, 현재 우리에게 급한 것은 남북대화가 아니라 우리의 안보허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약점을 보이면 잠수함 침투사건은 앞으로 계속됩니다. 예컨대 이인모사건, 쌀지원할 때 우리 정부의 어리숙한

태도, 한미간의 정책갈등, 한총련사건, 권병호사건 등이 우리의 안보약점들입니다.

우선 한총련 간부들에 대한 엄중한 의법처리가 필요합니다. 끝마무리를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좌경친북세력들이 앞으로 대선정국과 만일에 정권이 바뀌어서 현재보다도 더 약한 정권이 나온다면 북한이 더 장난을 칠 것이기 때문에 한총련과 친북세력을 철저히 차단하는 것이 급하고, 이것이 대북정책입니다. 이것을 따끔하게 보여줄 때 북한에게 자극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법치주의, 반폭력주의, 빈공산주의적 국민 메시지를 북한에게 보여주는 것이 북한에 대한 대화제의보다 더 중요한 제의입니다.

둘째, 통일문제는 멀리 내다보고 인내성, 일관성,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즉 정부가 인내성, 일관성, 원칙이 흔들리지 않고 한다는 것이 보일 때 국민들이 신뢰합니다. 잠수함 침투사건이 나도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으로서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의 대북정책 목표는 통일문제를 직접 다루는 것이 아니고 통일환경조성입니다. 즉 접촉을 통한 북한의 변화추구에 모든 역량이 집중되어야 합니다. 통일문제의 거품을 다 걷어내고 합리적, 이성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합리적 이성적 접근을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놓은 장치가 바로 남북기본합의서입니다.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기본합의서를 토대로 씨를 뿌려 나가야 됩니다. 물론 4자회담도 통일환경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우리의 기본설계이고 4자회담은 부속설계입니다. 4자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위한 수단입니다.

셋째, 우리의 당면정책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공조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이 가장 크게 노리는 것은 한미 이간책입니다. 지난 2~3년동안 북한은 한미 이간책을 성공을 거두었는데 앞으로 심하면 심했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KEDO 운영방식에서 경수로 비용을 부담하는 비율만큼 우리의 합당한 역할과 지위를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한미공조를 위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양보하는 듯 하다가 나중에 확보하려다가는 한

미공조가 깨집니다. 처음부터 메시지를 분명히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너무 만만하게 보지 않기 위해서는 네번째로 대북압력수단을 활용해야 합니다. 대북압력수단은 북한의 인권문제, 이산가족문제, 무장간첩 침투문제, 국제테러문제 등을 우리가 충분히 구사해서 회담도 하자고 하면서 이러한 카드도 적절히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두 분 위원께서 포괄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 변화가 없다고 보는 부분도 있고 최 위원께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변수를 3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김정일이 언제까지 국가를 정상화하지 않고 끌고 갈 수 있겠는지? 그리고 어려운 경제난 해결하지 않으면 이것도 또 하나의 체제 위협이 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는 정책으로 나올 가능성이 없느냐 하는 문제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시간은 1시간 정도 있습니다. 1시간 범위 안에서 위원님들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이서할 위원 :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북한도 국제기구로부터의 경제적인 지원도 감소되는 등 많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침투사건은 김정일에 대한 리트머트 시험지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 표출되지는 않더라도 김정일 절대권력에 대한 도전이랄까 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리트머트 시험지라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침투사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앞으로 북한의 방향은 2가지로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을 입었기 때문에 유혼통치가 연장될 수밖에 없지만 종교적인 색채를 띤 통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해 봅니다. 그러나 돌파구로써 공식승계를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악화된 경제 때문에 공식승계를 하더라도 종교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화되지 않느냐 하는 가정을 해 봅니다. 그리고 북한은 잠수함 침투사건 이전으로 되돌려 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국제적인 환경 또는 남한의 제한적인 경제지원 등도 잠수함 사건 이전으로 돌리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을 가상해 볼 때 앞으로 1년간 우리가 판권을 쥐었다고 해서 과언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의 대책은 북한이 혁명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또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상수로 두고서 포용정책을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포용정책은 기업인의 방북허용, 남북거래 확대 등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발표한 대로 잠수함 침투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잠수함 침투사건 이전의 대북정책을 그래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냉각기를 갖더라도 포용정책이 전체적인 기조가 된다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랜드연구소 소장이 말하기를 한국에서는 방어만을 강조하고 있는데 방어와 포용정책이 안보를 위한 서로 다른 배타적인 대응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대북정책이 방어도 중요하지만 계속적용 포용정책을 하는 것이 미래의 통일을 위해서 상호보완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포용정책은 과실은 없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결정적인 시기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변 강대국이 한반도의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북정책이 미국과의 협력을 오랫동안 지속하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냉각기를 짧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포용정책을 기반으로 한 과실은 효과는 빨리 나지 않지만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에는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중서 위원 : 잠수함 침투사건을 평가하는데 남한이 득이고 북한이 실이라는 것은 자명합니다. 북한은 테러적인 근성이 탄로가 되어서 미·일에 접근하는 힘이 빠지게 되었고 그 결과 북한이 당면한 심각한 위기 중에서 국제적인 고립이 쉽게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강경파가 너무 강하고 온건파가 너무 약하다는 것입니다만 이번 사건이 강경파의 힘을 약화시키지 않았나 봅니다. 세력균형이 역전되지는 않겠지만 북

한지도부의 세력관계를 변화시켜서 내분으로 갈 수 있는 계기중의 하나 정도는 될 수 있겠다고 봅니다. 국제적인 고립이 장기화됨으로써 국제원조의 단절이 지속되어서 북한은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반면에 우리측은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사회안정세력인 보수층이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한총련 사건에 이어서 잠수함 사건으로 인해서 사회안정 세력이 강화되었습니다. 또 그동안 북한문제를 두고 한미간에 마찰이 있었고 미국중심으로 우리는 따라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의 힘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안보리 의장성명에 서명한 것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중국의 위치를 남한쪽으로 조금은 끌어온 것도 우리의 득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북한에 대해서 견제와 공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미 공조체제에서 우리가 약간의 득을 얻었지만 아직까지는 미국의 힘을 견제할 수 있는 힘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력해야 할 것은 한미공조체제로 나가되 공조체제 내에서 힘의 균형 내지는 한국주도로 역전시켜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쉬운 것은 아니지만 클린턴이 재선되면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클린턴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가지고 외교적인 성과로 선거에 임하고 있는 선거가 끝나면 그러한 부담이 줄기 때문에 우리가 강하게 버티면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낼 수 있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외교역량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더욱 약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냉각기가 길어지면 질수록 북한은 더욱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냉각기를 빨리 끝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4자회담을 빨리 해야 한다는 필요성이나 이해가 아직 발견되지 않습니다. 북한과의 대화가 어떠한 도움이 되겠는가? 남북간의 힘의 균형으로 보나 북한의 멸망을 촉진시키는 방법으로써의 대화나 원조는 없는 것이 좋겠고, 따라서 냉각기는 길면 길수록 우리에게 유리하고 북한은 약해 집니다. 약해진 북한은 클린턴이 재선되어서 우리 편을 들어준다고 하면 미국은 북한을 관리하는데 상당히 수월할 것입니다. 미국이 강하게 대화를 요구하고 압력을 계속하면 남북대화는 열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화가 급진

전될 사태에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이 좋겠지만 대화자체에는 비중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저는 북한을 어려운 상태로 끌고 유지해 나가는 것이 남북 관계에서 우리가 우월한 입장을 유지하고 통일을 단축시키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봉쇄, 대북제재를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방침이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동환 위원 : 다가오는 한 해는 경색된 상황을 그대로 끌고 갈 때 북한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3년도 지났기 때문에 김정일이 공식승계를 해야 할 입장이고 잠수함 사건으로 남한이 의견이 단합되어 가는 모습을 보이고 국제적으로 북한에게 불리한 상황에 놓인 상황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야 하는 입장은 북한입니다.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또 풀어야 할 필요성 중의 하나가 남한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다행히 국론이 한 곳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은 북한으로 볼 때는 대단히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흘뜨려야 하는데 흘뜨리는 방법은 경색된 국면을 풀어 나가야 남한에서 국론에서 이것 저것 다시 나와서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벌어지기 때문에 경색된 국면을 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해결하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내년 한해동안에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북한이 부드러운 자세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 입장에서는 쉽게 북한의 변화에 대해서 호응하는 것 보다는 조금은 굳은 입장을 유지해 가면서 대응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혹시 우리 정부가 임기중에 어떠한 성과라도 거두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쉽게 북한의 유화정책을 타는 것을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버티고 나가면 국론이 하나로 뭉쳐지면서 북한은 더 큰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유화정책을 받아버리면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다가오는 1년은 우리입장에서 대선을 앞두고 있고 북한은 김정일의 공식등장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취하고 있는 자세를 끌고 나가서 다가오는 새 정부가 일하기 수

월하게 일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차상필 위원 : 남북한의 관계에서는 북한이 어떠한 제의를 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서 주로 많이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수동적이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전법을 바꾸어서 우리가 전략을 바꾸어서 북한이 따라오도록 하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제가 생각할 때 내년에도 우리가 획기적인 제의를 하지 않는 한 금년과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획기적인 안이라는 것은 북한의 식량사정이 어려우니까 과거처럼 100만톤을 달라고 하면 쾌히 주면 국면전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처럼 하는 상태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국면전환을 기대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우리의 희망사항입니다만 중국, 동구권이 개방과 개혁을 했고 소련까지 했지만 북한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과 개방을 하면 남북한의 긴장이 완화되어서 언젠가는 평화적인 통일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고, 또 북한은 개혁·개방을 하게 되면 정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정권이 넘어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 나진·선봉지구의 제한적인 개방입니다. 제한적인 개방으로는 투자보장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가 적십자회담부터 시작해서 많은 회담을 했고 기본합의서도 있습니다만 합의한 사항이 지켜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잠수함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적화통일하겠다는 것은 북한의 분명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취할 바는 무엇이나? 북한에게 개혁·개방을 얘기하고 거래, 투자를 해봤자 잘 안됩니다. 또 대화를 해도 안 되고 합의를 해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의 정책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소련이 붕괴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카터에서부터 레이건으로 이어져서 레이건이 군비를 강화해서 군비경쟁에서 소련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붕괴된 것입니다. 남한도 앞으로 3~4년동안 힘의 우위정책에서 북한을 압도할 때 비로소 북한이 손을 든다는 것입니다. 식량이 부족하다, 체제가 나빠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많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은 북한이 어렵지만 북한이 붕괴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힘의 우위에 의해서 북한이 붕괴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힘의 우위정책을 할 때 북한의 붕괴도 가능하고, 두번째 북한이 협상에도 임할 수 있고, 세번째 북한의 개방·개혁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지금 우선 해야 할 일은 선 남북대화가 아니고 우리의 힘을 키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년에는 대통령선거가 있기 때문에 보수세력을 여론화해서 국론을 통일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그리고 예비비를 써서라도 국방비를 많이 충당해야 하겠고, 그래서 북한이 오판하지 않을 때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은 정책을 한다면 똑같은 상태가 계속될 것이고 북한은 계속해서 미국과 접촉해서 평화조약을 맺겠다는 것만이 북한이 할 일이고 대일관계도 지속할 것입니다.

다시 요약하면 수세적인 남북협상에서 공세적으로 해야 됩니다. 소극적인 정책에서 적극적인 전략으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북한을 끌어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북한이 하자고 하면 하고 안하겠다면 안하는 정책은 전환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윤 우 위원 : 남북대화가 북한의 체면이 손상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우리가 주고 북한이 받는 형태가 유지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분위기가 계속되어 왔었는데, 겨우 유지되어 온 분위기마저도 잠수함 사건으로 해서 이그러진 형편이 현재의 남북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남북대화가 사실 벽찬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자칫하면 큰 손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객관적으로 북한이 남북대화에 임할만한 태세가 갖추어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적으로는 국가체제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남북한 격차가 너무도 뚜렷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 남북대화를 남한이 하자고 하면 오히려 끌려가는 형편의 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난 92년에 기본합의서를 채택한 후에도 합의서 이행을 위한 합의서 또 그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만들려고 한 것도 실천에 옮길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입으로 하는 과정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북한의 입장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잠수함 사건까지 일어났기 때문에 남북 전체를 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라는 것이 과거처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대화가 남북한의 입장에서 봐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적어도 당분간 북한의 김정일체제가 되기 전까지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의 입장에서도 잠수함 사건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비슷하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느냐 하면 우리가 싫든 좋든 연착륙문제를 기대하는 것이 감소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따라서 연착륙에 대해서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비용문제 등을 고려해서 연착륙문제를 도외시킬 수는 없는 것이지만 지금 변화되는 상황은 점점 더 연착륙이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로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연두회견시 북한이 반성을 하면 지원할 것이고 또 반성하는 사람은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보냄으로써 북한의 굽아지는 것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거기에서 고려할 점이 남북관계에서 충돌이 생기는 것은 회피해야 하기 때문에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서는 민간의 소규모 거래는 방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시기는 대체로 내년 봄까지로 생각해 봅니다.

신봉식 위원 : 저는 단순화시켜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조직체의 정신구조 내지 자세가 광신적인 종교집단이라고 가정한다면 광신적인 종교집단이 마지막 단계에 가서 비극적인 결론이 생겼습니다. 북한이 지금 여러 가지를 유화 제스처도 해 보고 외교적인 성과를 위해서 미국과 일본에

접근도 해 보았는데 생각처럼 쉽게 풀려나가지 않는 상태에서 대내적인 체제안정문제는 계속 위협을 받아서 임기응변적으로 지속하고 있는 것이 대외 협박, 전쟁위협론, 대내 전쟁분위기 고조로 유지해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본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잠수함을 계속 파견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겠다고 그러한 행동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것인데 북한은 계속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승전의 가능성이 확실히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이유는 선동선전용, 분위기 전환용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앞으로 내부적으로 갈 길이 없을 때 공갈용으로 들고 나올 수 있는 무기가 미사일과 생화학 무기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협박해올 가능성도 많습니다. 북한은 일관되게 6.25전쟁 후에는 남한내부에서 혼란이 일어나서 자체적으로 혁명역량이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왔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서 남북간에서 당한 것은 우리라는 느낌을 갖습니다. 대부분의 국민들도 느끼고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지를 많으 쓰느냐 하면 잠수함 사건도 자작극이라는 식으로 돌려서 한총련 대자보를 통새서 오도하려는 것만 봐도 남한 내의 분열과 대립이 격화되기를 바라는 전략은 4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상대로 정상적인 집단으로 돌아와서 정상적인 태도로 나오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제 북한은 그러한 집단이라는 전제에서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할 것인가? 밖으로 나가는 길이 막히면 안으로 볶을 것이고 안으로 들볶아 치면서 격화되면 무기가 있다고 하면서 협박하면서 나올 것이고 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전쟁분위기를 고조하면서 내부안정체제를 도모하는 술책으로 나오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난리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내부에서 난리를 치는 것은 체제안정을 위해서 난리를 치는 것이고 외부세계는 큰 영향을 받지 않고 돌아갑니다. 다만 여기에서 취약한 것이 우리 내부에서 이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북한의 책동에 놀아나는 것이 골치아픈 것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책동을 부

려도 우리내부가 동요가 없을 것 같으면 포기하는 상태까지 가줘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을 본다면 내부안보태세를 어떻게 강화하느냐? 환상을 버리고 북한의 자세를 국민이 보다 자세히 알 수 있게 하고 또 망상을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주기 않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세적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성명을 하나쯤 냈는가 하는데 북한은 5~6개 나왔습니다. 북한의 문제점이 너무나 많은데 왜 우리는 가만히 입을 막고 있어야 하는지? 우리의 대내적인 결속을 위해서도 북한의 문제점을 하나씩 들춰내서 성명전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느 부서가 되었든간에 국민들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고 내부결속을 할 수 있는 전술을 갖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걱정스러운 것은 국내의 안보태세가 엉망입니다. 이러한 것을 가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보안태세가 이러한 상황이라면 잠수함이 수백척이 와서 회를 먹고 놀다 가도 모를 것이고 재수없어서 암초에나 걸리면 야단법석했을 때 북한의 오판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의 1년은 북한이 발악을 해도 우리와 대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안은 없다고 전제하고 내부태세를 강화하고 그러기 위한 국민자세 정립을 위해서 우리도 공격적인 성명, 해설 또 자체안보를 위한 각성을 1년간 집중노력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송한호 위원 : 북한이 내년도 남북대화에 가지는 입장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인 면에서만 본다면 북한이 여전히 군부중심의 정치체제이기 때문에 남북대화에는 부정적일 것입니다. 또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를 한다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남북대화가 재개된다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여당이나 정부에게 유리하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남북대화에 부정적인 경향을 가지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남북대화에 대해서 호응해 나올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83년 버마사건 후에 비난과 국제적인 여론을 극복하기 위해서 84년도에 남북체육회담을 열어서 L.A 올림픽에 단일팀으로 나가자고 제의해 왔던 것처럼 잠수함 사건으로 인해서 받고 있는 비난과 고립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대화에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긴장되고 남한에서 안보분위기가 계속해서 확산되고 고조되는 상황 속에서는 내년에 치뤄질 대통령 선거에서 여당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물론 그때 여야의 후보들의 여러 가지 비교와 양상에 따라서 북한이 취할 입장도 달라지겠지만 어쨌든간에 여야가 어느정도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면 안보분위기는 여당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차단하고 오히려 야당후보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해야 된다는 정치적인 목적에서 남북대화에 호응해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화에 나오더라도 생산적인 대화가 될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대북 압박정책을 단기간내에 끝낼 것인가, 상당기간 지속할 것인가 하는 말씀들이 있으셨는데, 저는 상당기간 계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T/S훈련 재개, 기업인 방북이나 경제협력을 불허하는 문제, 잠수함 사건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요구, 국제기구의 대북지원 보류 등 대북 압력을 상당기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압력을 계속 구사할 때 국내적으로 국민들의 안보의식은 제고되고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대북압박을 중지하고 유화적인 태도로 나가면 국민들은 정부가 일관성이 없다고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계속해서 대북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북한으로 하여금 대화의 수요에 대해서 절실히 느끼게끔 하는 상황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나진·선봉에 투자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한국이 압박정책을 구사하는 한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는 한은 나진·선봉의 여러 가지 계획들은 진척이 잘 되지 않을 것이고 상당한 차질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식량난과

겹쳐서 대내적으로도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형식적이거나 남북 대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요구가 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화 유도 방법의 하나로 당분간 남북 압박정책은 계속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와같은 남북압박정책을 계속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한국측이 강경한 입장을 완화시켜 줄 것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때 우리로서는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완화방안으로서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남북 분과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위한 총리회담을 제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보다도 외부에서 남북정책에 대한 완화를 요구하는데 대한 우리의 요구로서 이러한 것을 요구하고 북한이 제의를 해 온다면 우리가 호응해가지고 남북간에 분과위원회를 재가동시켜서 남북간의 평화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대화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라는 것은 북한의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나온다면 생산적인 대화가 되지 않을 것이고 사실상 남북간에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는 하지 않지만 실질적인 대화는 단절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를 북한에게 분명하게 제시를 해서 북한이 호응하도록 촉구하는 것도, 또한 북한의 요구가 무엇이냐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것도 대화의 지속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대화에 집착해서 불필요하게 정부가 남북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다, 유화적이다 하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숙 위원 : 북한에서 볼 때 대내적인 것은 내부결속에 대한 것이 선결 문제니까 사상 강화를 한다든지, 내부억압정책을 강화한다든지, 경제난, 식량난 해결쪽으로 정책을 세우리라 생각됩니다.

대남정책은 남한의 현정부에는 도움을 안 주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외정책은 미국과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 쪽으로 갈 것이고,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해서 청구권 해결에 신경을 쓰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한국의 입장은 정부, 여당은 대선의 승리를 위한 준비하는 면이고, 야당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지 않으려고 방해하는 방향을 가리라고 봅니다. 경제는 전망이 어렵다고 보니까 어려운 상황을 회복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고, 사회적으로는 학생과 노조문제가 내년도에는 상당히 어려워질 것입니다. 제가 노개혁 위원으로 있는데 몇 개월동안 노총과 경영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평행선을 긋겠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한총련 관계는 우리의 선을 넘을만큼 깊숙히 들어가고 확대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요즘 국제 회의를 몇군데 가 보면 한총련 문제를 북한에서만 지원하는가 보다 생각했더니 북경에서 연관되는 것까지 확대해서 미국은 해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CIA는 중국이 미국의 영향력 견제를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와 연계해서 한총련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을 들으면서 국제화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인 안정문제가 한총련이나 노조관계로 해서 내년에 어렵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북한에서 생산성이나 실질적인 것이 없는 대화하지 않는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YS를 도와주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남북대화를 하면 점수를 따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문민정부 들어서고 나서는 유화분위기가 될 때는 정부나 여당이 불리했고, 오히려 경직되고 안보태세가 강화될 때는 유리해지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특히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유화 제스처가 나오면 야당이 유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지만 북한에서도 파악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없고 명분만 세우려는 남북대화 전략을 통해서 경직된 분위기를 희석시키는 제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4자회담을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듯이 남북한이 주고 미국과 중국이 들러리를 서는 것이 아니라 남북한 회담과 미·북한 회담을 동시에 하자는

제안이 나왔을 경우는 회담대표 구성에 있어서 회담대표성이나 진정한 의미의 회담은 미·북한이고 남북은 약화시켜서 동시에 제의를 했을 경우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미공조체제 이간을 위해서 카터를 활용해서 이면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애틀랜타 올림픽 때 한인사회에서 카터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수 북한에 호감을 표시하고 지원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도 대비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남북대화를 우리는 염원을 해 왔기 때문에 카터를 활용해서 클린턴 정부가 하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을 경우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고 하기도 힘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화하는 내용이 아니면서 한국의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모습으로 남북대화 형식을 갖추는 모습도 예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느냐? 무장공비 사건이후 여야가 처음으로 공조체제를 갖추면서 대북결의안이 나왔습니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북한에서 나오는 통일방안이 한가지일 때 통일방안을 가지고 내부분쟁을 하고 있는데 대북 통일방안에 대한 것도 국회결의안 같은 것으로 정리가 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대선 때 논의가 되어도 통일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논쟁하는 일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민정부 이후에 안보문제는 가장 정리하기는 좋은 분위기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담제의를 할 때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 어차피 되지 않을 회담이라면 정치색은 빼고 인도적인 회담, 예를 들면 적십자회담 등을 제의하고 대통령께서 이미 단호한 의지로 힘을 통해서 하겠다고 몇번씩 성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은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한 의지만은 끝까지 견지를 했으면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부분에서 회담을 제의하는 양면작전을 사용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유완식 위원 : 남북관계 개선에 촉구요인과 저해요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촉구요인으로서는 첫째 남북경제협력입니다. 경제협력은 남북이

모두 원하고 있고 특히 북한은 남북 경제협력없이 북한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진·선봉지역도 한국기업의 진출없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과거 5년간의 경험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두번째 촉구요인은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확대·개입전략입니다. 클린턴 정부가 재집권을 하면 이 정책을 지속시킬 것입니다. 세번째 촉구요인은 북한의 미·일수교정책입니다. 수교를 하려면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번째 촉구요인은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입니다. 중국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바라는 것이 사실이고 북한에게 영향력을 가장 크게 줄 수 있는 것이 중국이기 때문입니다.

저해요인의 첫째는 북한당국의 북한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입니다. 북한체제가 존속될 것인가 하는 위기의식을 김일성 신년사에서 일부 나왔습니다만 위기의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하다고 보여집니다. 위기의식이라는 것은 흡수통일에 대한 두려움, 개방의 거부로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번째 저해요인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대남침투전략입니다. 잠수함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만 이것은 북한이 버릴 수 없는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세번째 저해요인은 우리측에서 볼 때 우리정부의 대북정책이 포용이나 압살이냐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아서 일관성의 결여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고 포용으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해서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한다는 정책인데 북한에서는 남한정책을 압살정책, 흡수통일정책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촉구요인과 저해요인에 비추어서 향후 1년간 남북관계를 조명해 본다면 지금까지는 촉구요인과 저해요인의 비중이 팽팽했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조는 앞으로 1년간의 기본적으로 변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촉구요인이 역사적인 추세로 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계바늘은 촉구요인, 즉 개선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합의서만 하더라도 역사적인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한경제의 사활이 달린 나진·선봉지

구 개발문제가 남북경제협력에 달려 있고 또 미국의 대북 포용, 개입·확대전략과 북한의 대미관계정책이 맞물려서 역사적인 하나의 추세로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진통은 겪겠지만 개선의 방향으로 나가리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대통령 선거도 남북관계 개선에 하나의 변수가 될 것입니다. 북한은 연방제 통일방안과 협상할 수 있는 정권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현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크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볼 때 남북대화 전망은 북한이 92년 7월 북경 쌀회담에서 제의한 남북경제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경제협력과 쌀 추가지원을 얻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이번 잠수함 사건에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회담을 제의했는데 남북당국간의 경제회담을 북한이 받겠다고 나오면 경제회담을 할 수 없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경제회담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4자회담은 설명회까지는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동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설명회를 받아들일 움직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4자회담을 받기 위해서 설명회를 받는 것이 아니고 설명회를 통해서 3자회담을 역제의하기 위해서 받는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4자회담을 거부하는 이유는 4자회담은 북미간에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수립에 초점이 흐려지고 북한은 중국이 참여하는 국제회담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를 반대하는 입장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4자회담은 절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없고, 3자회담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3자회담을 하게 되면 북미간에 평화협정을 논의할 수 있고 남북간에는 기본합의서에 합의한 불가침선연합의 이행문제를 토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자회담을 통해서 대화를 이원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자회담을 우리가 이미 제의한 바가 있고 북한이 3자회담을 제의하면 거부하기 힘들 것입니다. 3자회담도 경제회담과 같이 잠수함 사건을 회색시킬 수 있는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아웅산 폭발테러 사건 이후에 체육회담

을 제의했고 쌀지원도 제의한 것을 보더라도 드라마틱한 제의를 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따라서 남북경제회담과 3자회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놓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덕송 위원 : 남북관계에 구멍을 뚫기 위해서 꼭 정면으로 대응을 해야 하는지? 비공개 루트를 활용할 필요성은 없는지? 7.4공동성명도 비밀리에 나왔고, 작년에 쌀을 지원한 것도 북경 비밀접촉에서 시작해서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북경의 쌍방 대사관이 적당하리라고 보면서 서기관급에서부터 해도 좋고 계속 접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49년 중국의 공산화 이후 닉슨 대통령이 72년에 상해에 가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관계개선을 할 때까지 바르샤바에서 20년 가까이 중국과 미국대사관이 회담을 가진 전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면거래도 전술적으로 해 볼만 하지만 비공개 루트도 개척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홍진 위원장 : 마이크를 기획부장에게 넘기겠습니다.

기획부장 : 회의를 마치기 전에 차관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원 차관 : 오늘 좋은 말씀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대미관계에 관해서는 외무부와 통일원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클린턴 정부가 들어와서 미국이 북한에게 유화적인 자세, 또 미국이 앞서고 우리가 끌려가는 형태를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핵문제의 경우는 우리도 잘못이 있지만 미국이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미국 내부에서도 이러한 형식은 좋지 않고 한국이 앞으로 나가고 제의를 할 것이 있으면 먼저 하고 미국은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는 것이 옳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시정연설에서 조건으로 내세운 시인·사과와 재발방지에 관해서도 굉장히 한미공조체제를 강화해 가면서 하고 있고, 북한에서도 어느 정도는 남한에 대해서 하기 어렵다는 1차적인 반응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현 국면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희들은 국민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이 필수불가결하고 과정을 잘 정리해야 나가야 하겠지만 그 후에 북한에 대해서 제의를 할 때 무엇이 주제가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하신 말씀들이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북한이 성명을 여러 가지 냈는데 북한의 일반주민들은 아직도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대남방송과 중앙통신을 통해서만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보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고 탈출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남성명서에서도 최초로 나온 언어보다 서서히 약화시켜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북한이 당황하고 있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냉각기간은 되도록 짧게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가 70년대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가지고 북한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중심을 잡으면서 하면 우리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커다란 공부가 되었고 앞으로 시간나는대로 참석해서 좋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부장 : 감사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차기회의 일자 11월 19일 화요일 오후 4시에 하려고 합니다.

6. 제 16 차 회의

—<목 차>—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미·북
관계 전망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6. 11. 19(화) 16:00~18:15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미·북관계 전망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5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송한호, 최문현,
유완식, 차영구, 이영호, 이서향, 차상필,
신봉식, 조덕송, 김동환, 이경숙, 구종서,
윤 우

○ 당국 : 국장, 기획부장, 유인택 협력관, 관계관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제16차 남북대화유경험 비상임자문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미·북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해 주십시오.

정홍진 위원장 : 오늘은 차영구 위원과 이서항 위원이 수고하셔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차위원장부터 발표해 주십시오

차영구 위원 : 클린턴 행정부가 아직 제2기에 돌입하지 않은 상태이고 현재 새로운 진용의 면모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제2기 클린턴 행정부가 우리나라, 대북관계에서 어떤 정책을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미지수인 부분은 놔두고 제가 최근 한·미 연례안보회의에 참석해서 미측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느낀 것들, 제 나름대로 예측할 수 있는 것들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2기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잠수함 사건이 앞으로 한·미의 대북정책에 관한 공조, 그리고 미국의 대북정책에 관한 것, 특히 그것이 클린턴 행정부의 제2기와 관련될 수밖에 없는데 그와 관련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사건이 갖는 의미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뒷부분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금번 사건이 적어도 미국의 대북정책, 우리의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미국주도의 대북정책에 결정적 제동을 걸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미국의 국무성의 대북 소프트 랜딩쪽을 밀고 있는 사람들의 입지가 이번 잠수함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흔들리거나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대북정책에서는 국무성과 국방성이 양측을 이루고 있는데 국방성쪽의 입장이 조금더 강화된 느낌을 갖습니다. SCM에서도 T/S훈련을 놓고 상당히 밀고 당기고 했는데 국무성이 결국은 양보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대북정책과

관련해서 미국내에 상당한 불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소극적이라든가, 인색하다든가. 우리의 지난날 대북정책에 어떤 하드 라인적인 요소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금년 후반기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미·북간의 대화채널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사일협상, 미군유해발굴협상 등 전체적으로 모두가 뼈격거리는 상황입니다, 나름대로는 미국과 북한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추진하려는 구상들이 잘 안돌아가는 상황입니다.

동시에 북한의 대미, 대서방, 대남정책 등 북한의 입장이 코너에 몰리면서 북에 대한 중·러의 비판적 시각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한의 무모성에 대해 우리와 같은 입장이며 중국도 직간접으로 북한을 편들던 세력들의 세가 약해졌습니다.

전체적으로 북한은 이번 잠수함 사건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엄청난 손해를 입게 되었고 우리 입장도 우리의 대북정책의 리서쉽이 상당히 부각되면서 그동안 놓쳤던 레버리지를 이번 계기에 입지가 강화되는 측면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제2기 클린턴 행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현재의 분위기를 완전히 역행하는 쪽으로 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SCM의 특징은 한반도 평화체제에서 한국의 주도를 명확히 확인했습니다. 한반도 평화문제는 남북한이 주도하며 미·북간에 개별적인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문서화한 것은 북한의 미·북 평화협정, 잠정협정 체결주장에 대해 공개적으로 못박은 것입니다. 잠수함 도발에 대해 ‘강력한’ ‘견고한’ 한·미 동맹을 통해서 확고하게 북한의 어떠한 재도발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잠수함사건 이후 미 국내에서 흘러나왔던 혼란을 어느 정도 정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작년까지의 한·미의 SCM 공동성명은 대북유화정책속에서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수준이었다면 금년 SCM은 북한에 대한 억제력 중심의 강경대응의지가 흘러나오도록 만들어졌고 그 정책의 방향은 우리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거의 받아들여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주도하는 형태를 미국이 추인해주는 그런 모습을 갖춰냈습니다. 이는 미국무성쪽에서

는 만족스럽지 못하겠지만 국방성도 우리와 거의 뜻을 같이 했고 미국을 끌어들이는 형태로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깔고 배경에서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과 미·북관계를 전망해볼 때 기본적으로 미국의 개입정책(Engagement Policy)이 변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분간 전술적 측면에 있어서 우리와 조화를 이루는 쪽으로 변화는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미국의 가정과 인식은, 구조적인 것이기 때문에 지속될 것입니다. 이 가정과 인식은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북한의 경제난, 식량난 때문에 북한의 대규모 남침전쟁 수행능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 북한의 비이성적 행동은 약자의 입지를 표출하는 것이다. 북한은 급격히 붕괴될 수도 있다. 남북한간에는 대규모 전쟁보다는 작고 다양한 군사충돌 위험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이 4가지 가정하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많은 부분 사실과 가깝기 때문에 이러한 가정에 근거를 둔 미국의 대북정책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KEDO를 포함한 핵동결 정책은 미국으로서는 절대적으로 긴요하기 때문에 파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4자회담도 계속 유효하며 성사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잠수함사건에 대한 사과, 재발방지 약속 부분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기술적으로는 우리의 주장을 수용하면서 어떤 타협점을 찾으려 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은 서 있습니다. 다만 몇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것은 남북간 대화 진전없이 북·미관계 진전을 당분간 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물론 접촉같은 것은 있겠습니다. 적어도 우리의 요구부분에 있어서 기술적 충족이 있어야 미·북이 계획했던 진전이 추구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달래기 차원에서 한국의 대북정책에 지지를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군사적으로 한·미 연합억제력, 연합연습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와 적극적으로 손발을 맞출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북·미관계 전망은 국방, 국무장관, 차관보급, 국가안보회의 등 실제 한반도정책을 꾸려나갈 팀이 상당 규모 바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떤 성향의 사람들이 오느냐가 중요할 것입니다.

적어도 잠수함 사건 이후 나타나고 있는 우리 대북정책의 기초를 미국이 존중하고 가급적 따라주는 구도로 갈 것입니다. 과거보다 갈등이 줄고 조화되는 부분이 많아질 것으로 봅니다.

이서항 위원 : 먼저 클린턴의 승리의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클린턴의 득표율 49%는 사실 연임에 성공한 역대 대통령중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특히 의회를 보면 아직도 의회는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클린턴 자신은 강력한 전미국적인 지지를 받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클린턴이 당선된 것을 보면 클린턴의 정책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볼 때 한반도문제가 세계 3대 주요현안(중동, 보스니아, 한반도)중의 하나입니다. 최근 레이크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발언도 북한문제가 가까운 시일내에 미국의 안보위협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으로서는 한반도문제에 큰 관심과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제1기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기조는 첫째 핵동결을 중시하는 제네바 합의문 이행, 둘째 남북당사자간 대화, 이에 의한 한반도 긴장 완화, 셋째 대북접촉 증대를 통한 연착륙 유도 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2기를 맞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최근 잠수함 사건이라는 돌발사태가 일어나 미국의 대북정책에 단기적으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남북, 미·북 교착상태가 조속타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경수로문제에서 한국이 상당히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잠수함 사건을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 상황으로 빨리 되돌려 놓아야 하는 것이 미국의 과제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경수로사업이 진전될 수 없고 제네바 기본합의문 이행이 영향받을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 미국은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한국의 강경정책을 지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연착륙의 기초를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을 구사하는 강경정책을 취할 것입니다.

잠수함사건 이전으로 돌아간다면 그동안의 연락사무소, 미군유해, 연락사무소 개설 추진은 계속되고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평화협정 주장은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의 대북 개입정책이 지속된다고 해도 북한 지도부가 그러한 연착륙에 부응하는 정책을 얼마나 취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내년도부터 이런 문제가 구체화될 경우 구체적인 급변사태 유형, 대응계획 등 새로운 팀 구성시점에 맞추어 북한이 급변사태에 대한 집중적 연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급변사태가 단순한 북한내 소요인지, 정권붕괴를 의미하는지, 국지전과 같은 무력사태가 수반되는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인 검토를 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러한 급변사태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대한 정책목표도 윤곽을 드러내리라고 예상됩니다.

우리가 북한 급변사태시 자동적으로 통일기회로 이용할 것을 희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미국의 Contingency Plan이 우리의 희망과 동떨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상가능한 정책목표가 단순히 소요사태, 정권붕괴 이전으로 돌리는 것인지, 새 정권 탄생으로 현상유지할 것인지, 우리가 바라는대로 정권붕괴, 무력도발을 포함한 돌발사태를 한반도 통일기회로 이용할 것인지 어느 것이 될 것인가가 불분명합니다. 미국의 이러한 대북정책 목표가 과도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급변사태시 미국과 논의할 제도적 채널을 구축하고 이러한 급변사태를 통일 계기로 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즉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불변이나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대응계획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준비를 좀더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유완식 위원 : 클린턴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노선은 북한을 붕괴시키지 않고 포용함으로써 결국 미국의 영향권내에 편입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선은 제2기에서도 불변일 것이며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당면한 대북정책과제는 '94. 10 제네바 합의에 따른 북한 핵개발 동결, 북한 미사일 제조금지, 실종미군 송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대미정책노선은 북한의 생존은 북·미관계여하에 달려있다고 보고 대미관계 개선을 대외정책의 우선과제로 올려놓고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한 등거리외교가 목표입니다. 이같은 북한의 대미정책은 미국의 대북 포용정책과 맞아떨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한·미공조문제가 중요할 것입니다. 미국의 한국중시정책과 북한의 군사도발에 대응하는 한·미안보관계의 강화를 추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의 한·미의 대북공주는 원칙적으로 유지될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포용정책과 한국의 대북정책 사이에는 조화되지 않는 점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첫째, 한국의 대북 포용정책의 폭이 미국보다 좁기 때문이고 둘째, 내면적으로는 대북봉쇄, 압살정책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미의 대북공조의 조정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잠수함사건문제입니다. 한국은 명시적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75년 판문점 도끼사건의 경우와 같은 유감으로 대신하거나 북한이 4자회담 또는 그밖의 형태의 남북대화에 동의하는 것으로 사과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둘째 KEDO문제입니다. 미국의 제네바 합의의 핵심이고 북한 핵개발 저지의 수단으로 되고 있는 KEDO에 의한 대북경수로 공급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이에 대한 한미간의 이견해소에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미국은 북한이 한국정부가 요구하는대로 잠수함침투사건에 대해 명시적 사과와 재발방지 보장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고 유감표시의 수준에서 잠수함사건을 수습해야 한다고 한국정부를 설득시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덕송 위원 : 2기 클린턴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기조는 1기때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4년의 임기기간에 수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연락사무소 개설과 경제제재 추가완화 등으로 북한의 핵동결 및 미사일 판매 영구중단을 핵심정책과제로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에

몇가지 변수요인이 작용할 것입니다.

첫째 변수는 4자회담,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등으로 남북 간 평화체제의 제도적 장치의 마련없이 미국이 대북정책은 난관에 봉착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변수는 당면해서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수함 무장간첩 납파에 대한 시인·사과, 재발방지 약속을 하지 않는한 경수로 제공을 비롯한 일체의 지원이 없을 것임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문제의 해결없이 순조로운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셋째 변수는 북한은 비공식적이기는 하나 미국이 경수로 부지조사단 파견, 경수로 착공 등을 하지 않음으로써 제네바 합의를 어기고 있다고 주장, 북한의 핵시설 가동을 재개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반명 11. 4 북한 외교부 대변인의 기자회견을 통한 발표내용과 비공식 위협과는 내용이 크게 대조적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처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으로서는 국회에서 두 번씩이나 여야 만장일치로 대북경고결의안을 채택한바 있음을 명심하고 모처럼 형성된 국론통일을 배경으로 천명한 대북정책을 관철토록 해야 합니다. 둘째 그 좋은 계기가 11월말 필리핀 APEC 정상회의에서 가질 한미정상회담이며 한국은 미국을 통한 간접적 방법으로 라도 북한으로부터 시인·사과를 받아내야 할 것입니다.

4자회담 실현을 위해서는 중국의 남북한 당사자 해결원칙론에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클린턴의 2기 집권중에는 미·중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보여 미국이 중국에 대한 4자회담 참여 유인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한국대로 중국의 4자회담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외교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은 근원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연내지 저지하려는 전략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이 한·미·일 공조체제에 언제까지 참여할 것인가가 불투명합니다. 남북한 관계개선 이전에 일본이 북한과 국교를 틀 가능성도 없지 않을 것이라는 경우까지 예견하면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송한호 위원 : 시인·사과, 재발방지 요구가 북한에 의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1월, 2월에 가서 팀 스피리트 훈련 추진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차영구 위원 : 공은 우리에게 와 있습니다. 국민이, 정부가 흔들리면 방향이 다른데로 흘러간다면 무산될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미국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팀 스피리트 훈련 재개문제와 관련해서 미국측의 입장은 T/S라는 말 자체를 끄집어내지 못하게 하는게 미국무성측의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틀」이 결정적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T/S가 일종의 정치적 카드로 된 상황에서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므로 그럴수록 우리가 카드로서는 좋은 것입니다. 하여튼 잠수함사건이 우리를 백업해 주고 있으며 대미 협상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았다고 봅니다.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어떤 기초, 원칙을 정해 나가는데 적어도 우리가 지도(Lead)해 나갈 수 있는 상당한 부분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영호 위원 : 미국은 KEDO가 깨지는 것을 절대 불가하다고 할 경우 미국이 KEDO를 살리기 위해서 압력을 가해올 때 우리가 견뎌낼 수 있겠는지 의문입니다.

차영구 위원 : 현재는 3자 살바싸움과 같습니다. 특히 남북한간에 얼마나 버티느냐가 중요한 시점(Momentum)에 있다고 봅니다.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 미국이 뒤틀지는 못할 상황이라고 봅니다. '68년 푸에블로호사건시 미국이 북한에 써준 정도의 서한(Letter) 정도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인덕 위원 : 저는 작년 홀 준위 사건때 정도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의 중앙방송을 보면 시인·사과, 재발방지를 약속했고 동시에 클린턴 대통령 의 사의표명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이런 정도는 받아야 할 것이나 문제는 북한이 우리에게 할 것 같지 않습니다. 유엔사령관 앞으로 할 텐데 미국이 얼마나 밀고 나가겠는가? 2기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하는 2월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겠지만 그 이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로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경숙 위원 : 지난주 한·미우호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릴리 전주한미대사, 변 공화당 의원 등 주제발표를 보면 미 공화당쪽 얘기긴 하지만 북한이 저렇게 할 때 오히려 보복까지 얘기해야 억지력을 갖는다는 등 더욱 강경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정부와 국민이라는 얘기입니다. 미국정부가 좀 강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면 그만 됐다고 하면서 유화책으로 와서 정신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죠.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일치해서 똑같은 입장을 취하면 미국이 우리를 넘어서 무리한 수를 쓸 수는 없을 것입니다.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 뿐 아니라 우리의 대북정책이 문제입니다.

조덕송 위원 : 국회가 두번씩이나 대북경고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국민의 합의형성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과 국회, 행정부가 따로따로 구분되어 통합되지 않을 때 결국 한국 언론이 국익을 대표해서 활동, 활약해 주어야 합니다. 벌써 미국 언론에서는 한미정상회담이전에 11. 10 월스트리트 저널과 11. 14 뉴욕타임즈지에서 현 한국 대통령이 레임 덕을 두려워해서 대북 강경 입장을 취해서 미국을 난처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스는 대개 관변측인 것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매스 미디어를 관리한다거나 이들이 스스로 자각한다거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잠수함사건 관련 우리의 조치가 이제까지의 대북정책치고는 최고 한계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릴 판인데 우리의 신문논조를 보면 국익을 위한 강력한 뒷받침을 하는 것인지 애매모호합니다. 국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미국 경우 클린턴 행정부를 커버해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이를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한호 위원 : 신문 보도를 보면 정부가 사과·재발방지를 북측에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미간 입장차이가 있는 것 같고 미국 언론에서는 한국정부가 골칫거리다, APEC에서 클린턴 대통령이 유연입장을 취하도록 압력을 가

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우리도 신문 언론을 통해 우리 정부의 사과·재발방지 요구의 합당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의 군사도발, 전쟁 위험성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국민적 결의를 강조하는 언론의 역할이 있어야 합니다. 정부가 좀더 언론에 대해 협조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할 경우 북한위협에 대해 대중적 집회 등 민간차원에서 정부입장을 뒷받침하는 움직임도 필요합니다.

강인덕 위원 : 2기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에 대해 북한의 입장에서는 별 위협으로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인질화가 확고하고 이를 미끼로 해서 밀어부치면 클린턴의 포용정책과 연결되어 대북태도가 시간이 가면 완화되지 않을 수 없다고 낙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클린턴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어떻게 하면 운신의 폭을 넓힐 것인가 하는 사전준비, 지금부터 이를 확보해줘야 할 것입니다. 냉전이 끝났지만 한반도를 위요한 동북아정책은 세력정치(Power Politics)적인 방향으로 갈 것이 아니겠습니까. 북쪽 입장에서는 2기 클린턴의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되든 간에 우리를 굴복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자심감을 가지고 임해 오리라고 봅니다. 이 경우 우리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대통령으로서 운신의 폭이 넓어야 하는데 지금 운신의 폭이 없이 배수진은 치고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대북정책에서 배수의 진갈이 나쁜 정책은 없다고 봅니다. 이는 정부가 심각히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2기 한반도 정책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교분야에서도 한·미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지속적인 워크샵을 개최하여 말을 맞추고 관점을 맞추는 것을 제도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부터 더욱 필요합니다.

내년도 「대선」관련 틀림없이 통일문제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간에 협의가 잘되어야지 뉴욕 타임스 기사와 같은 것이 나와서야 되겠습니까. 국방성 뿐만 아니라 국무성,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의 관계도 잘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지금까지 남북대화에서 최고책임자가 사과하라는 적이 한번도 원칙이 불면입니다. 북한의 대남적화전략이 불변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쪽 추진해왔습니다. 내년 선거가 있던 말던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후퇴할 수 없습니다. 시인·사과하지 않는 한 모든 접촉·대화를 추진하지 않는다고 까지 내놓은 이 노선을, 이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홀 준위와 같은 북한의 조치, 대남적화전략을 앞췌겠다는 공언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정권이 처음에는 상당히 진보적이었다가 이제 제자리에 돌아왔으니 정부가 이 원칙을 그대로 지켜나가면 언론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북한이 대남전략을 포기한다는 공식선언이 없는 한 대화 안한다는 것이 정부의 태도인데 만일 북한이 기본합의서를 들고나와 대화한다고 할 때 사과 없이는 대화 앞췌겠다고 하면 큰 모험일 것이나 흔들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70년대에는 북한을 달라고 속는 줄 알면서도 회담을 해야 되췌다. 시간을 번다. 회담하는 동안은 주먹을 안췌 것이다. 이런 전제로 회담을 해온 역사가 있는데 이제 시인사과=대남적화전략 포기 주장을 하라고 한 이상 우리가 이런 원칙을 어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우리 논리를 거뒀들일 수 없고 정부가 계속 밀고 나가야 합니다. 언론문제는 너무 염려않아도 될 것입니다.

KEDO문제는 미국은 NPT체제 유지문제이지 우리는 관계가 없는 문제입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까지 선언한 이상 정부는 밀어부쳐야지 양보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과거처럼 남북대화하면 무조건 점수따는 것이었다고 하면 큰 오산입니다.

조덕송 위원 : 「대선」, 「배수진」 얘기도 나왔지만 정부하기에 따라 달려있다고 하지만 정부가 정직하게 언론사 사주, 편집국장, 주필들에게 사실대로 브리핑하고 국익차원에서 협조를 구하면 소설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비밀이 많습니다. 클린턴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달라지췌지만 우선 당장이 문제입니다.

이경숙 위원 : 정부가 기초를 유지해야 합니다. 북한이 초강경으로 핵동결

해제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북대화에 응하면서 제스처나 취하면서 시인·사과 없이 하자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북한은 막바지까지 밀어부치다가 마지막에 양보합니다. 북한이 세계 나오면 걱정이 없지만 약하게 나오면 국론분열 등 위험해 집니다. 사과-유감 등 언어수준은 외무부, 통일원에서 검토할 사항이지만 유감표시가 되면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강인덕 위원 : 북한이 4자회담을 제의를 수락하지는 않겠지만 미국을 상대로 유감표시, 판문점에서 유감표시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최문현 위원 : 제일 어려운 것은 북한이 협박만하지 않고 대남 편지공세, 남한이 폐쇄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정치공세를 할 경우 다루기 힘듭니다. 여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구과제는 이에 대해서 도상연습(CPX)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정부의 남북폐쇄정책을 비난하면서 내년도 2월 또는 대선정국과 관련해 적당한 시기에 북한은 반드시 달콤한 소리를 하고 나올 것입니다. 적어도 앞으로 1년 동안은 잠수함 사건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살려야 합니다. 북한이 군정위 채널을 통해 유엔사령관에게 유감을 표명했을 때 우리 국내적으로 야당, 재야 등에서 받아들이라는 여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미국에 유감표명을 할 경우 미국 여론을 뒤흔들 수 있습니다. 또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4자회담을 수락함으로써 제스처를 보였다고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침범 자체는 시인하면서 송환협상을 요구했을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 정부를 궁지에 모는 국제적 압력도 나올 수 있습니다.

송한호 위원 : 국민적 결의, 정부입장에 대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는 방법의 하나로 과거처럼 관계장관회의에 공보처장관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내외적 홍보를 위해서 정부입장을 보다 더 광범하게 결

집시키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김동환 위원 : 북한이 사과한다고 할 경우 북한의 누가 사과해야 할 것인가. 판문점에서 사과한다고 하면 군사행동을 사과하는 것이 되는데 군에서 결정한 일인가. 북측에서 군부의 누가 아니라 김정일이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어정쩡하게 사과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북한이 어떻게 나오든 우리가 생각하는대로 나간다고 해야 합니다. 상식적으로 편법을 쓰지 말고 최고사령관이어야 한다는 것, 홀 준위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대로 밀어부치면 될 것입니다. 미류나무 사건때 김일성이 유감표시한 적이 있는데 사과라는 말이 없다해서 이를 유감표시다 아니다 하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7. 제 17 차 회의

< 목 차 >

1. 일반사항

2. 회 의 록

* 주제 : '96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97년도 남북대화
추진방향

1. 일반사항

가. 일 시 : 1996. 12. 10(화) 15:00 ~ 17:20

나. 장 소 : 남북회담사무국 삼청회담장 3층회의실

다. 주 제 : '96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97년도 남북대화 추진방향

라. 참석자

○ 비상임자문위원(15명) : 정홍진, 강인덕, 이병호, 송한호, 최문현,
유완식, 이영호, 이서향, 차상필, 신봉식,
조덕송, 김동환, 이경숙, 구종서, 윤 우

○ 당원 : 기획부장, 유인택 협력관, 분석과장, 관계관

2. 회의록

기획부장 : 지금부터 남북대화유경험 제17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주간북한동향 TV를 시청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96년도 남북관계 평가 및 97년도 남북대화 전망입니다.

정홍진 위원장 : 구종서 위원과 윤우 위원께서 먼저 발표해 주십시오.

구종서 위원 : 금년도 남북관계를 되돌아 보면 대남비방과 긴장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관계발전은 없고 후퇴한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미북관계는 지속되었고 대화채널은 계속 가동되어 왔습니다. 4자회담을 제의하는 등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남북대화 또는 다자적 대화로 끌어내려는 노력은 있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으므로써 실질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잠수함 사건 발생은 한국으로서는 외교의 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이고, 또한 잠수함을 포착한 것은 남북간의 게임, 미북간의 외교 게임상 잘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테크니컬한 면에서 미숙했고 외교적인 면에서 이 기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대미외교에 있어서는 북한에 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남북관계의 외교적 환경, 국제적 환경을 유리하게 조성해야 할 외무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미국을 상대로 남과 북이 외교경쟁을 벌일 때 우리가 밀린다는 것은 우리의 패배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미국의 세력전략이 바뀌고 파워게임에서 선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한국에는 친미적인 세력이 많고 미국내에도 보수세력이 강한데, 우리가 친미인사들의 동원이라든지 미국의 보수적 여론에 효율적으로 호소하지 못한 것은 반성해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97년 남북관계는 대화가 열리거나 협력이 넓어지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려

을 것입니다. 남한에서는 정부교체를 앞두고 있고, 북한의 대남대화 자세가 아직까지도 되어 있지 않고, 미국과의 대화에만 전념하는 등 모든 것이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 관계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북한은 현재의 체제로는 정상회담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이고, 김정일은 북한을 대표해서 남북정상회담에 나올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정상회담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를 생각할 때, 선택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이 무엇인지는 저희들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진심으로 대화하는 방향에서 유화적인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인지, 그 반대인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확실히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두가지를 다 상정할 때 북한에 대해서 협조적이고 온건한 정책이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자체도 완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북한을 고립, 봉쇄, 강경 정책을 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어렵고 완전하고 최선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양면에 모두 대처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현재 북한이 대남비방을 계속하고 있고 남한을 배제하는 상황에서 우리도 강경하고 분명한 입장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에게 달라고 유도할 것이 아니라 모욕적인 행동을 취해서 분명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즉 북한은 경제정책의 실패로 대외적으로 식량을 구걸하고 실정입니다. 미국에 대해서도 굴욕적인 자세로 대화를 구걸하고 있는 입장이고 체제붕괴가 두려워서 과감한 개혁·개방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북 선전공세를 강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신문과 방송이 동원되어야 하지만 요즘은 신문보다는 방송이 힘이 크기 때문에 방송을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방송을 통해서 북한의 어려운 사정을 폭로하고, 붕괴임박설을 강조하고, 북한동포들의 불만을 보도하는 등 북한에 대한 강공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특히 북한의 집권세력과 동포들을 분리해서 북한동포들을 기아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식량과 물자를 대량지원할 태세가 되어 있음

을 분명히 보여주고 다만 거기에는 조건을 다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조건이라는 것은 북한이 들어줄 수가 없는 조건이 되겠습니다만 가령 식량지원과 생필품을 지원할 태세가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북한동포들에게 확실히 지원된다는 것을 보장해야 된다든지 또는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남한에서 식량과 생필품이 지원된다는 사실과 배급계획을 북한이 신문과 방송을 통해서 분명하게 북한동포들이 알게 한다든지, 또는 배급여부를 남북적십자나 국제적십자 요원이 입회해서 확인한다든지 하는 조건을 달고 북한에 대해서 원조할 태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연일 선전하면 북한동포들에게 새로운 행동을 취하고 또 북한정부와 인민을 분리시키는 효과도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러한 조건들이 수락되면 우리는 대량지원을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동포의 어려운 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남한가족이 북한가족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고 북한에 요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북한이 여기에 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선전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북한이 응한다면 개방과 남북 왕래에 의한 북한사회가 동요가 촉진될 것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대화, 교류, 관계개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또 그럴 필요도 없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4자회담을 제의한 것으로 충분하지 실제로 성사되거나 북한이 나오도록 요구하고 유도할 노력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는 것을 굴욕적으로 생각하도록 우리가 선전을 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북한을 고립, 봉쇄시켜서 강공정책을 쓰면 북한이 개혁·개방을 못한 채 내부혼란을 겪으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대화나 교류가 재개된다면 북한동포가 김정일정권에 대해서 희망을 걸게 됩니다. 반대로 남북관계가 회복될 기미가 없고 또 북한의 내부사정이 개선될 리가 없으면 북한주민의 동요가 심해지고 탈출을 시도하는 움직임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금년 들어서 탈북현상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을 여러모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최근에 우리가 강경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악화되어서 북한주민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

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더 가속화시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17명의 탈출은 더 이상 참아야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기 때문에 탈북했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싶습니다.

윤 우 위원 : 금년도의 남북관계를 돌이켜보면 첫째로 긴장이 첨예화되었던 한해였습니다.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4월 4일에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DMZ와 해상에서 군사적 무력시위를 감행했고, 잠수함 침투사건까지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53년 휴전 이후 96년은 긴장과 대립이 첨예화되었던 시기라고도 보여줍니다.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전협정의 핵심부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잠수함을 동원한 침투는 전쟁을 각오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는 담화에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지위에 관한 임무를 일방적으로 포기한다고 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면서도 정전협정은 지키겠다는 단서를 붙여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판문점 군사정전위 북한측 대표단을 철수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민군대표부라는 이름으로 이중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는 두가지 점에서 이중적인 꾀를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령 잠수함 사건과 관련해서 북한이 군사정전위에서 철수한다는 점 때문에 군사정전위에 정식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상황을 비서장급 등의 채널을 통해서 대화를 계속 하는 2중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96년에는 남북대화가 없었습니다. 4자회담을 제의했지만 북한이 수용하지 않았고, 또 대한적십자사가 총재 또는 부총재급 회담을 제의했으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남북종교인회회가 북경에서 2월 하순에 열렸고, 북경접촉 북측단장이 4차접촉을 갖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측에서 인정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편 북한은 종래에 주장하던 평화협정에 앞서서 미국과 잠정협정을 체결하자고 2월달에 제기한 바가 있고 판문점 북미장성급회담을 위한 실무회의를 개최하자고 제의했습니다. 나진·선봉 국제투

자포럼에 우리측 참가대상을 제한함으로써 불참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조국전선이 잠수함 사건과 관련한 우리측의 태도를 비난하면서 남북폐쇄정책을 규정해서 우리를 공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와 연결선상에서 북한이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폐쇄했습니다. 그리고 남북간의 교류협력은 부진했고 잠수함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측의 지원이 동결된 상태입니다.

한편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탈북·귀순현상이 증가했고 양상이 변화되었습니다. 수적인 면에서는 80년대까지는 수평선이었는데 90년대 이후에는 170여명 되고 금년에는 51명입니다. 탈출동기도 가난, 배고픔이 뚜렷하게 추가됐고, 또 체제에 대한 회의, 좌절감 등입니다. 경로는 휴전선, 해상, 공중이었지만 90년대에는 국경, 해외 출장지 이탈, 근무지 이탈 현상이 늘었습니다. 또한 핵심계층이 포함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래에는 가족단위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한의 금년도 정세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전반적으로 암울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대미관계에서 유해협상이나 경수로문제에서는 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북한이 기대했던 만큼 이루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97년의 남북대화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세전망을 할 때 북한은 정치적으로 체제를 일부 정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령 당총비서나 국가주석을 내년 하반기에 당창건기념일을 전후해서 선출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최고인민회의는 작년 4월에 이미 법적인 임기가 만료되었습니다만 그 선거는 다시 연장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정치상황은 불안이 심화될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의 불안이 증폭되리라고 봅니다. 그 원인은 강경노선 속에서 실용파의 불만과 좌절 또 군부의 권력비대화에 따른 당료의 불만, 주민 특히 간부들이 체제에 대한 회의를 갖게 되고 불만과 좌절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북한은 96년 초부터 농업 부문에 개혁을 시도했습니다만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7~8세대를 하나의 분조제로 해서 일종의 독립채산제 성격을 띠게 개혁을 일부 했습니다. 그러나 분조제로 기울어진 농업생산을 향상시키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또 외부로부터의 식량원조도 한계가 있고, 연료나 원료부족도 타개하기 힘들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크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일본과의 수교협상을 통해서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일이지만 97년도에는 기대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미국이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철폐할 가능성이 있지만 그 파급효과가 97년중에 나타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노동자들의 영양실조, 태업 등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요인도 경제회복이 어려운 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일탈현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남한의 경우는 12월 대선을 계기로 남북문제에 관한 논란이 가열될 소지가 있고 경제성장을 둔화, 불경기가 지속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공조체제에 이견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북한 끌어안기 정책을 강행할 가능성 때문입니다. 또 한국과 일본간에는 배타적 경제수역(EEZ)문제를 위요하고 내부적인 갈등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잠수함 사건으로 경색된 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 우리측에 직접 사과하는 것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측에 직접 사과하는 것은 김정일의 권위 실추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고 군부 등 강경세력의 반대가 있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 사과하기는 어렵고 회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과가 없는 한 내년 중에도 화해는 불가능한 상태로 이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색국면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한편 북한은 사과문제를 구실로 해서 미·북간에 장성급회담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자회담에도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설명회만을 이용해서 간접사과의 마당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역시도 희박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대화가 열릴 가능성은 희박하고, 북한이 민간단체간의 회담을 유도하더라도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97년에도 남북간의 상황은 원만하지 않고, 대화도 활성화 되지

못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남북대화 추진 기본방향은 대화를 갖고자 하는데 연연해 하는 듯한 인상을 불식시켜야 합니다. 대화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북한의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만 그 연착륙이 우리가 바라는대로 되겠느냐 하는 면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잠수함 사건에 관한 사과를 받는 문제를 이제는 관철시킬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조성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북한이 어떤 마당이 제공되면 사과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분명했을 경우에는 대화를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대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북한이 사과를 한다든지 또는 사과의사를 밝혀서 확인되었을 때는 남북당국간의 대화 또는 적십자간의 대화에 호응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측이 적십자회담을 먼저 제의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잠수함 사건과 맞물려 있고 또한 KEDO문제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북한의 방향에 달려 있는데, 북한이 융통성이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서항 위원 : 올해 남북관계는 긴장이 지속되었고 잠수함 사건 때문에 고조된 한해였다고 봅니다. 잠수함 사건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에 유일한 통로로 여겨졌던 KEDO사업마저 지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교류가 없는 상황을 맞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KEDO사업의 경우는 우리 기술자가 왕래하는 등 인적교류가 많았습니다만 잠수함 사건 이후로 이러한 통로마저 막아버렸습니다. 잠수함 사건 때문에 올해의 남북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내년의 남북상황까지 경색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저는 범위를 넓혀서 최근의 남북문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문제가 지난 1년간 크게 두가지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남북문제 자체의 성격변화가 있었습니다. 과거의 남북간에는 이념적·군사적

대립만이 남북문제의 전부라고 생각했었습니다만 이제는 북한의 경제난관에 따른 붕괴가능성 때문에 이념적·군사적 대립뿐만 아니라 붕괴가능성 또는 붕괴에 따른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까지 생각해야 되는, 즉 과거의 남북문제는 상당히 단순했습니다만 이제는 다양한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남북문제가 완전히 성격이 변화했다는 것을 먼저 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변화는 한반도문제가 남북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화, 다자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네바합의, 식량난에 의한 국제적 지원을 볼 때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 다자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가 국제화, 다자화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책임과 한국이 해야 할 선택의 범위가 막중해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 1-2년간 시작된 가장 중대한 한반도 문제의 성격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격변화가 있으면서 북한의 남한에 대한 위협도 여러 가지로 다양해졌습니다. 첫째 지속적인 군사적 위협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1994년 제네바합의 이후 진행된 한·미 및 한국과 다른 동맹국간의 이간정책 추진 때문에 한국과 동맹국간의 정책이견과 서로 다른 대북정책 추구가 우리 대외정책의 위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세번째는 경제적 난관에 따른 불안정한 북한체제가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가 곤란하기 때문에 급작스럽게 붕괴할 경우에 우리의 부담이 늘어나고 난민의 발생 때문에 새로운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본외무성 정보국 심의관이 외교안보연구원에서 한 회의에서 밝혔습니다만 북한 내부에서 식량구득을 위한 여행규제가 상당히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식량구득을 위한 여행규제 완화가 정보의 교환과 흐름을 촉진하고 북한사회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불안정한 북한체제 자체의 위협과 관련해서 앞으로 크게 남북문제 또는 북한체제 자체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위협들이 새롭게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북정책을 추진하고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하느냐가 문제라고 생각

됩니다.

97년내지 그 이후의 남북문제 핵심은 김정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의 현 지도부는 개방·개혁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개방·개혁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없는 북한을 어떻게 남북대화의 장, 최소한 동북아 질서의 장으로 편입시키느냐 하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만 이러한 환경을 어떻게 조성해 주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남북대화를 추진해야 할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의 대북한 정책, 남북대화 정책은 원칙적인 얘기입니다만 세가지의 원칙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97년에도 북한의 공세적인 측면은 강화될 것입니다. 특히 개방·개혁의 의지가 없고 경제적 난관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남관계는 공세적이고 위협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방위태세의 강화가 첫번째 강조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년도에는 김정일이 공식으로 승계할 가능성도 많고, 또 우리는 대통령의 집권말기가 되기 때문에 대남공작이 강화되리라고 예상됩니다. 그리고 잠수함 사건 사과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고 대미접촉을 늘리기 위해서 오히려 국지적인 군사적 긴장은 고조시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대북정책에서 제일 강조해야 될 것은 군사적 위협에 대비한 튼튼한 방위태세가 첫번째 강조되어야 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첫번째 상황과 모순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봐서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남북문제가 군사적 이념적인 대립뿐만 아니라 북한 경제의 붕괴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이념적·군사적 대립 이외에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당국간의 대화가 없더라도 한반도 안정을 위한 민간인 차원의 교류접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정권과 주민문제를 분리해서 교류접촉 또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은 확대 내지는 잠수함 사건 이전의 상태까지 복원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 붕괴가능성이 증가되고 붕괴가 임박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통일방법은 북한주민 스스로가 북한을 구할 수 있는 국가는 한국밖에 없는 생각이 확산되는 것이 평화적으로 통일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동독이 총리까지 포함해서 경제파탄에 빠진 동독을 구할 수 있는 나라는 서독밖에 없다고 함으로써 지도부까지 포함해서 항복을 했습니다. 우리의 경우도 핵심 정치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더라도 북한주민이 북한을 구할 수 있는 나라는 남한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북한정권, 군부에 대해서 튼튼한 방위태세를 갖추어야 되겠지만 그와 아울러 이러한 생각을 갖도록 교류접촉의 확대가 강조되어야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세번째는 주변국가 특히 미국과 일본과의 국제협력 및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강조되는 이유는 현재 북한이 계속 남한을 배제하고 미국과 접촉을 하려는 것은 이러한 틈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또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남북대화의 필요성과 긴장완화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한미공조, 한일공조, 한·미·일간의 공조가 내년도에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정책의 기본방향을 요약하면 첫째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방위태세의 확립, 둘째 북한의 불확실한 장래 대비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한 교류접촉의 확대, 셋째 주변국 특히 미국과의 공조체제 확립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두번째 제시한 원칙인 북한의 불확실한 장래 대비 및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교류접촉을 확대하고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의견도 있습니다. 반대의견에 우리가 비판해야 될 것은 한국정부라든지 많은 사람들은 북한에 대해서 경제지원을 하면 북한이 태도변화를 한다는 낙관을 갖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지원은 먼 장래를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부언하고 싶습니다.

송한호 위원 : '96년도는 남북관계에서 긴장과 적대의 골이 더욱 깊어진 한 해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비무장지대의 불인정 성명에 이어 연 3일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내에 수백명의 무장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고의적인 긴장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이 제의한 4자회담을 수용하지 않는 가운데 잠수함 침투사건을 자행함으로써 그들의 대남 폭력혁명노선이 불변임을 실증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와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원색적 비방과 중상을 더욱 격화하고, 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 설치, 운영되어온 판문점 북측 연락사무소를 폐쇄함으로써 불신을 가중시켰습니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은 명백한 우리 주권의 침해행위로 규정, 북한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고 그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 4자회담과 대북경수로 지원이 추진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천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경수로 부지 및 서비스 의정서」에 대한 서명을 유보하고 부지조사단 파견을 연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일부 민간기업에서 추진해온 대북 경제협력사업도 사실상 중단됨으로써 남북당국간 대화와 접촉은 물론 민간차원에서의 협력사업도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북한의 잠수함 침투사건은 대내적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시키고 이 땅의 평화는 힘의 우위를 확보했을 때 유지될 수 있다는 국가안보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자각을 높였으며 김영삼 대통령의 북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요구 등 단호한 대북조치는 국민의 폭넓은 지지를 획득하고 대북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반면 잠수함 침투사건은 그 사건의 처리문제를 위요하고 한·미간의 마찰소지를 안겨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잠수함 침투사건이 한국에 대한 도발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북한 핵동결을 우선시하는 입장에 따라 잠수함 침투사건에 구애됨이 없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되고 경수로 지원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한국 정부의 보다 유연한 대북정책 추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미국의 입장은 우리 정부의 효과적인 대북정책 추진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제공할 것이며 이의 극복이야말로 우선적인 당면과제라 하겠습니까.

'97년도 남북대화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대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남북 대화와 관련한 북한의 입장과 수용가능성 여부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한국정부를 배제한 가운데 미국과 직접 협상을 통해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고 미·북한 수교와 대북한 경제지원을 획득하려는 전략을 추구해 왔습니다.

이같은 전략과 정책은 내년에도 변하지 않으리라 전망됩니다. 북한이 지금까지 4자회담의 수용을 거부하고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사과를 거부하면서 도리어 한국 정부에 대한 비난과 한국의 사회단체 및 개인 인사에 대한 서신 공세 등 통일전선전술을 강화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북한이 내년에도 한국정부 배제정책을 고수하면서 미국과의 직접협상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화란 서로가 그 필요성을 인정하고 접합점을 발견할 때 성사되며 또한 그럴 때 생산적인 대화가 가능합니다.

김정일 정권은 정권이 안정적 보존,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이를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실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 대화는 그들의 우선순위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으며 더욱이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는 김정일은 개방이 수반될 남북대화를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김정일은 남북대화가 재개되는 경우 한국이 북한의 대미, 대일 관계개선을 지원하기 보다는 제동, 방해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남북 대화에 호응해올 가능성은 적으며 설사 대화의 마당에 나오더라도 성과있는 대화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4자회담의 경우도 북한이 그동안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한 잠정협정 체결을 주장해 온 점으로 미루어 보아 수용할 가능성은 적다고 하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4자회담 제의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구축문제는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협의, 해결한다고 합의하였는 바 이것은 미·북한 회담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 북한의 전략과는 상치되는 만큼 북한이 4자회담

을 선뜻 수용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군 철수문제가 협의되지 않는한 4자회담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도 북한이 내년 4자회담에 긍정적으로 호응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협상을 통해서 당면하게는 미군 유해송환문제, 미국의 대북 경제규제 완화와 미국 곡물의 대북 수출문제, 잠정협정 체결문제 등을 협의, 해결하려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정부가 가만히 있을 수많은 없습니다. 북한이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우리의 대화의지를 과시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4자회담 수용을 계속 추구하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이 4자회담을 비롯한 남북대화에 응할 수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나 유화정책으로는 부족하며 북한이 현재와 같은 한국정부 배제정책과 남북당국간 회담 거부 입장에 변화가 없는 한 대북 경제지원을 유보하는 등의 {연계·대응}정책을 견지하는 한편 대북 경수로 지원은 잠수함 침투사건에 대한 북한의 사과가 선행되어야 추진될 수 있다는 확고한 입장등 대북압박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대북압박 정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바 정부는 미국이 남북대화의 진전과 병행하여 대북정책을 조절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대미외교를 전개하는 한편, 정부의 확고한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뒷받침을 바탕으로 대미협사력을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영호 위원 : 96년도 남북관계는 북한이 대남 긴장 또는 폐쇄유지와 대미 접근을 지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대남 간접접근을 계속 시도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남북관계가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KEDO사업, 나진·선봉 투자설명회의 남한기업 초청, 대우의 남포진출과 96년 이전에는 우리기업체의 직원들이 북한에 상주한 일은 없었기 때문에 남북간에 경제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변화가 금년도를 시점으

로 해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이 남북간에 정치, 군사적인 영향을 받아서 중단이 되고 있지만 북한도 남한에 대해서 매우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한국의 지원을 획득하기 위한 조치들을 그들 나름대로는 상당히 하려고 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자기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긴장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체제가 불안하고 결속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외적인 긴장을 대내결속에 이용하려는 전형적인 사회주의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제난, 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되는 한 대남 긴장조성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계속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는 내년도에도 어느 정도 지속될 것입니다. 물론 김정일 정권이 안정화된다면 조금 완화될지 모르겠지만 경제가 어려운 국면에서 주민들이 동요되는 상태에서는 긴장조성이 필요할 것입니다. 특별히 금년도에 나타난 것은 김광진이 군사분계선이 북침을 위한 공격출발선이 되었다는 식으로 북침위협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나오기 시작한 것들입니다.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지만 남북관계에서는 경제적 분야에서의 변화와 군사적 분야에서의 북침위협설 등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내년을 전망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시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이러한 와중에서 대북정책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었다고 봅니다. 표출된 것을 보면 우리는 북한의 미북평화협정 기도를 봉쇄해서 4자회담으로 유도하는 정책, 북한의 통일전선 기도를 봉쇄하고 남북당국자간의 대화로 유도하려는 목표를 갖고 했습니다. 그러나 4자회담의 목표가 무엇이나? 또는 남북당국자간에 하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나는 뚜렷한 정책목표는 사실상 없었던 것 같은 느낌입니다. 구종성 위원 말씀처럼 양면성을 가진 정책을 추진했던 것이 아닌지. 그러다 보니까 북한으로 하여금 4자회담에 참여토록 하는데만 신경을 썼지 4자회담에 무엇을 할 것이냐에 대한 우리의 정책대안들이 발전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남북관계가 96년도에는 남북긴장은 북한도 대내결속에 이용했지만 우리는 총선에서 보수여당이 활용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간의

긴장은 남북의 국내정치 목적에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남북간의 대화보다는 긴장이 지속되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입장에서는 대남긴장 유지의 필요성은 있지만 경제적 소요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든간에 접근은 필요하고 또한 대남혁명노선상의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간접대화는 계속 북한이 요구할 것이라는 것이 내년도 전망에 들어갈 금년도 평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년도 우리의 정책에서 고려할 사항중 중요한 것은 북한이 대외정책에 있어서 자신들의 명분과 실리를 따짐에 있어서 실리보다는 체면을 전통적으로 중시해 왔기 때문에 북한의 체면을 깎는 요구를 할 경우에는 북한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대북관계에 있어서 신경써야할 측면입니다. 어떤 것과 연결시켜서 봐야 되느냐면 우리가 연계전략을 쓸 때 상당히 신경써야 될 부분입니다. 4자회담을 쌀지원과 연계했고, 잠수함 사건을 4자회담과 KEDO문제와 연계시켰습니다. 북한으로 하여금 쌀을 구걸하기 위해서 4자회담에 참석하라고 해서 북한의 체면을 깎아 버리게 되면 북한이 4자회담에 나오기 싫어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수함 사건 사과도 KEDO와 연계된다면 KEDO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과하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북한이 나오기가 곤란합니다. 따라서 연계전략은 공개적으로 연계전략을 쓰는 것 보다는 북한이 하는 식으로, 북한은 폐연료봉 작업하는 인원을 철수시키면서 말하기를 저들이 휴가가 필요해서 휴가보낸다고 하면서 KEDO를 지원하지 않으면 재개할 수 있다는 식으로 간접적으로 떠드는 것은 연계전략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고통치자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빼도 박지도 못하게 되어 버렸고, 또 북한도 받자니 체면 때문에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내년도에는 남북대화가 어렵지 않느냐 하는 느낌까지 갖도록 하는 국면이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연계전략을 구사할 때는 테크니컬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잠수함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남북간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개선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는 한 대남혁명의 꿈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신부에게 하나님을 버리라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됩니다. 북한이 대남혁명을 위한 노력은 남북관계가 보다 발전된다고 하더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97년 전망을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만 4자회담은 체면문제나 북한의 전략적인 입장이 3자회담이나 미북평화협정문제 등으로 인해서 수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다만 시간을 끌어서 미국의 체면을 살려주는 설명회 정도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사건 사과문제는 명백하고 직접적인 사과는 북한이 죽었다 깨어나도 못할 것입니다. 다만 4자회담 설명회에 참여해서 애매모호하게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 유감 정도의 표현은 가능할는지 모릅니다.

새로운 평화보장체제에 관한 북한의 공제는 97년도에 집요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미북간에 실시되고 있는 MIA, MTCR, 연락사무소 설치, 정전위 비서장회의 등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계속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미·북연락사무소 설치에 의하면 기술적인 실무협의를 타결된 것으로 보이지만, KEDO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아 제네바합의의 이행이 지연되게 되면 연락사무소 설치도 상당히 지연되리라는 느낌입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미북관계도 잠수함 사건과 관련해서 안개가 끼어 있다고 봅니다.

남북정상회담 문제는 더 이상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남북경협문제도 잠수함 사건 사과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는데, 북한의 유감표명이 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풀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내년도에 공식적인 당국간 회담 제안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남북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남북간에 합의한 사항을 비준할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변형된 형태의 남북회담 제안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97년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북한의 대남 초병선(Cordon Sanitare)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서 극심한 경제난과 관료사회의 부정부패, 전반적인 사회

기강의 해이, 사회통제 기능의 약화 등으로 인해 탈북자는 점차적으로 증대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북대화애 신경쓰기 보다는 인도적 지원문제와 탈북자 수용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 통일원에서 인도지원사무국을 설치하기로 했는데 잘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수용문제, 앞으로 닥칠 문제들을 전반적으로 다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 추가한다면 금년에 아쉬웠던 점이 북한에서 우리쪽으로 군인과 민간인이 표류해서 넘어왔고 뒤돌려 주는 과정에서 군사정전위를 통해서 보내려고만 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군정위에 의존하려는 의타심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기본합의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만도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의 절차에 따라서 보내준다고 또는 군사공동위를 통해서 하자는 식으로 누적시켜 놓아야만 역사적으로 명분이 축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명분축적 과정을 소홀히 하는 점이 있는데, 이러한 점을 당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원식 위원 : 96년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악의 상태 배경은 첫째 북한의 대미관계 우선전략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생존전략입니다. 그래서 미북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보장체계라는 것을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이란 견해가 있는데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주한미군철수가 하나의 목적은 될 수 있지만 전부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북한의 생존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겠다고 하는 것이 북한의 전략입니다.

두번째 배경은 한국의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경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셋째 배경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이 포기되지 않고 있고 잠수함 사건으로 다시 증명이 되었습니다.

96년 남북관계 평가에 있어서 북한의 한국배제 전략을 견제하는 한미공조가 효과를 보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공조에서의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포용(Engagement)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데 한국이 포용(Engagement)과 봉쇄(Containment)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96년도 남북관계에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첫째로 한미공조관계 여하에 의해서 남북관계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생존을 미국으로부터 보장받겠다는 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한미공조 여하에 따라서 북한의 한국과의 관계도 결정됩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관계 개선없이 북미관계 개선이 없다는 미국의 정책이 확고하다면 남북관계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지만, 과연 미국이 그렇게 나가고 있는나 하는 것은 다시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미국의 대북정책 노선이 포용정책이 확고한 만큼 한국이 미국에 끌려 다니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한국의 대북접촉의 신축성을 발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경직된 태도는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바꾸어 말하면 한국도 포용이 대북정책의 대원칙이라는 것을 재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도 북한을 포용하자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7년도 남북대화 추진방향은 기본방침은 두가지로 보았습니다.

첫째는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포용정책이 확고하고 여러 가지 점으로 봐서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는 한미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한미간에 갈등이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97년도의 구체적인 남북대화 추진방향입니다. 잠수함 사건이 걸림돌로 되고 있는데, 11월 24일 마닐라 한미정상의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정상의 합의의 초점은 잠수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KEDO의 대북 경수로 공급사업을 비롯해서 제네바합의를 이행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에서 문제를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국이 요구하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수락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전제로 대책

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달게 되면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전략은 진전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유감을 표명하거나 유감이 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유감 제스처를 보인다면 된다는 입장임을 감안해서 우리 정부도 신축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자회담 대책입니다. 북한이 4자회담에 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전제에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공동설명회에 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에 응하는 것은 4자회담을 수락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4자 회담을 거부하는 그들의 입장을 정중하게 미국에 전달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은 4자회담보다는 3자회담 또는 북·미, 남·북 각 2자회담을 역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4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확답이 있기 전에는 우리측의 대화제의를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북당국간에 대화가 없더라도 나진·선봉지역에 한국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대북 포용정책의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문현 위원 : 96년도 남북관계 평가에 대해서 몇가지 부언하겠습니다.

첫째 북한체제가 불안하는 것에 정비례해서 한반도 불안이 증대된다는 사실은 올해 다시한번 확인했습니다.

둘째, 우리는 남북대화과 미북관계 진전을 연계시키려고 했고, 미국은 제네바합의의 실천을 조급하게 서둘다가 갈등이 생겼는데, 이것이 잠수함 사건으로 일단 진전국면에 돌입했습니다.

셋째는 북한이 미국과만 상대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한미간의 이간을 조성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했는데, 이것도 잠수함 사건으로 미국의 강력한 견제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한미공조가 더 중요해졌고, 남북한 문제의 당사자해결 원칙이 내외적으로 부각되었다는 것이 제가 보는 96년도의 총평가입니다.

97년도의 전망도 몇가지만 부언하겠습니다.

북한의 딜레마는 체제생존에 불가결한 외부원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남북관계 경색을 풀어야 되겠다는 것은 북한이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리고 잠수함 사건을 종결시킬 필요성도 북한이 절실하게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현 군부의 비상통치체제의 고삐를 더욱 조여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긴장이 계속 필요하다는 것이 북한의 딜레마입니다.

남북한이 경색을 북한이 풀 수가 없습니다. 쌀을 백만톤을 주어서 당국간에 회담하자,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 사과는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남북경색을 푸는 것은 우리측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대원칙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의 잠수함 사건 사과문제와 경수로, 4자회담, 남북대화, 대북경협외 상호관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재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입장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나 통일원장관, 외무부장관이 말하는 것은 상당히 경직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칙이 흔들리고 있고 흔들리면 신뢰성을 잃고 또 논리가 경직되어 있으면 우리 주도하에 남북간의 경색을 풀어야 되는데, 자승자박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사과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사과로 간주할 수 있는 여지를 충분히 넓게 열어 놓고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북한처럼 경직된 자세로 나가지 말고 북한이 우리에게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사과는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원칙, 그리고 북한의 변화와 개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노력을 멈출 수가 없다는 원칙, 북한체제가 불안할수록 한미공조는 더욱 중요해진다는 원칙 등 3가지 원칙을 가지고 우리 입장을 융통성있게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유해송환을 위해서 남한당국과 유해송환문제를 위한 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지? 또 적십자회담을 열어서 유해송환문제를 협의하자고 나오더라도 사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지? 우리가 주도할 수 있고, 자승자박되지 않는 길을 열어

놓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사과를 받아야겠다고 대통령이 언급하는 것은 지양하고 정부의 입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병호 위원 : 96년은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무시하면서 대미접근에 전력을 경주했습니다. 미국은 클린턴의 대선과 관련해서 북한달래기에만 전념했습니다. 이 결과로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고, 이 과정에서 한미관계의 균열도 발생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전략이 어느 정도 성공한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96년을 평가한다면 거꾸로 대내문제에 있어서 의의를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혼란을 거듭하는 인상을 주었던 국내정국이 잠수함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들의 결속을 주었다는데 의의를 두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97년 전망은 권력승계 등의 내부사정과 대선정국을 맞는 남한정세면에서 볼 때 내년도에도 북한의 대남전략은 변화가 없을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취할 자세는 첫째, 대내적인 면에서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국민을 결속시켜 나가야 합니다. 두번째는 대미공조체제의 유지입니다. 외무부는 외무부대로,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학자는 학자대로의 다각적인 대미공조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북관계에서는 당근과 채찍입니다. 채찍은 일관되게 우리의 국방력을 강화해 나가면 되지만, 문제는 당근입니다. 북한과 비교할 때 우리가 절대적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력입니다. 우리가 대북관계의 돌파구를 찾는 길은 경제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지만 잠수함 사건 사과와 맞물려서 동결된 상황입니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십자회담이라도 제안해서 북한이 받아들인다면 적십자회담을 루트로 해서 돌파구를 열 수 있지만 이 방법도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각론중에 각론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만 북한과의 경제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 북한의 체면을 세우고 도울 수 있는 방법중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와 중국이 내막적으로 합작하는 형태의 중국상사를 만들어서 그 상사를

통해서 북한에게 물건도 팔고 물건도 팔아주는 형태를 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류품 등은 재고가 많은데 처리가 세무문제와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중국상사를 통해서 거의 헐값으로 북한에 주고, 북한에서 팔고 싶은 물건은 제값으로 우리가 구입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여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강인덕 위원 : 96년도 남북관계에 대한 평가는 최악의 상태였다고 생각합니다. 잠수함 사건이 남북관계를 그대로 상징한다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잠수함 사건의 여파가 이어질 것입니다.

금년도에 우리의 대북정책이 크게 잘못되었다고 보는 것이 융통성과 유연성을 상실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20여년간의 남북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교훈은 융통성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정책이 어떻게 나올것인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내놓으면 어떻게해서든지 방해하려는, 특히 한미공조체제를 방해하려는 정책으로 임할 것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북한이 어떠한 정책으로 대응해 와도 대비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융통성을 금년에 완전히 잃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의 대북 정책성명이 여러차례 나온 것 때문에 더욱 융통성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북대화도 풀어갈 길이 없습니다. 연계전략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것이 남북관계를 경직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엄청난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으로서는 군부일변도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강해지다 보니까 나진·선봉자유지대의 행정위원회가 없어지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나진·선봉 행정위원회가 재정이 없어서 제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확실하다고 보는데 96년안에 함경북도에 이관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나진·선봉지역과 협약체결이 전부 무효화될 것입니다. 나진·선봉 행정위원회와 체결했던 계약들은 무효다 하는 것을 일부 상사들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금년 9월 13일부터 15일동안에 2억8천만달러 정도 계약했다고 하는데 올스톱입니다. 잠수함 사건이 북한에도 이만큼 치명타를 주었기 때문에 이것

을 북한에서 풀려는데 전력을 내년도에 집중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과를 받지 않고 제스처를 써도 일방적으로 동의하자는 최문현 위원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방법밖에는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년도에 대선이 있습니다. 대선 때문에 긴장이 되어야 표가 나온다고 여당이 생각하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내년도의 남북대화를 가늠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탈출자의 수가 늘어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냉각기간을 최소한 앞으로 2개월내에는 끝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이 취임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냉각기간을 더 이상 연장시키지 말고 그 전에 우리가 조치를 해야 하는데, 4가지 정도의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문제, 기업인의 방북문제, KEDO 문제, 무역거래문제 등 우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내년 2-3월까지 푸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한반도문제가 국제화 되는 것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런 때일수록 남북 당사사 원칙을 재확인하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강경한 태도는 곧 우리의 행동의 폭을 좁혀서 자승자박식의 유연성을 상실하는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됩니다. 강경한 정책을 내놓되 유연성을 유지할 수 있는 한계내에서 내놓아야 되고, 이것의 구분이 없어지는 정책을 내년도에는 내놓아서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차상필 위원 : 금년도 남북관계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의문점이 있습니다.

남북관계에서 북한의 바람직한 상이 무엇인가? 군사적으로는 대등한 관계, 경제적으로는 우월한 관계,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경제적으로 우리만큼 되었을 때 투코리아 정책인지, 아니면 남한에 대한 적화통일의 야욕은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경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를 침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현재 북한이 붕괴될 것이라는 정책이나, 아니면 단단한 나라를 만들어서 투코리아 정책으로 하느냐 하는 문제를 연구해야 남북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이해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이런 기회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년도의 남북관계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쌀 15만톤을 지원한 후에 국내여론이 악화되었고, 두번째는 클린턴이 제주도에서 4자회담을 제의했습니다. 4자회담을 제의하니까 북한이 수락한다, 안한다는 것을 가지고 금년을 다 보냈습니다. 우리는 한총련사태가 북한과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것과 잠수함 사건으로 인해서 남북관계는 경색된 한해이다 보니 그 외에는 다른 것이 할 것이 없었습니다. 했다면 KEDO 사업의 진전뿐입니다.

내년도 전망은 전적으로 내년도에도 북한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망은 밝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 경제난, 에너지난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대화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수해로 인한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대화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남북관계에 있어서의 경제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김정일체제를 몇 년 끌어 왔지만 김정일체제도 새로운 것이 없었습니다. 김정일이 실권을 쥐었다 하지만 유훈체제외에 새로운 제의를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김정일체제하에서는 새로운 제의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은 미국과의 관계진전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자회담은 수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군철수를 논의하지 않고 4자회담은 무의미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입장에서는 내년도 남북관계에서 새로운 진전이 있을 해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내년의 선거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의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넘기는 것이 국내정치, 경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새로운 이슈를 제의하지 않는 것이, 특히 대통령 입후보간에 통일문제에 있어서 견해차이가 있다는 것은 국론통일이 안되기 때문에 이슈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쪽에서

도 새로운 진전을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한다면 KEDO사업이 그대로 진전되고, 4자회담을 그대로 얘기할 뿐이지 새로운 것은 우리도 필요없지 않느냐고 봅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금년과 마찬가지로 진전이 없는 한해가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신봉식 위원 : 한해가 봉쇄와 포용정책의 혼재 속에서 끝에 가서는 강경정책으로 돌아서 버렸다는 것이 우리의 태도라고 봅니다. 국민여론은 쌀 15만톤 제공시에는 어떻게 하고 보고 있던 것이 그 뒤에 진전되는 상황을 통해서 완전히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통일문제가 선거이슈도 될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통일문제를 선거이슈로 들고 나오는 정당은 불리할 것이기 때문에 통일문제나 남북문제를 선거이슈로 제기하는 것은 국내사정상 아무도 제기하지 않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최근에 북한과 미국과의 접근이 계속 추진되고 미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이 커지니까 중국이 불안해져서, 중국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미국을 견제하자는 움직임이 표면화 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남북대화에 대한 외부여건은 더욱 복잡해지리라고 봅니다. 우리는 복잡해진다고 해서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했으면 어떠한 생각이 듭니다.

대미공조만이 유일한 탈출구인지, 우리도 중국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공조는 국가간의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항상 손발이 맞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쪽을 하나의 지렛대로 활용하는 전략을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조금도 없다고 봅니다. 지난 한해도 원조되는 중유 50만톤이 전력증강에 쓰이지 않았는지. 심지어 쌀 15만톤과 분유도 구경을 못했다고 하는 탈북주민도 있습니다. 북한은 내부단속을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군부를 중심으로 체제는 강경해지고 고착화되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과의 유리문제가 표면화되리라고 봅니다. 주민과의 유리문제는 결국 탈북자문제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반적인 흐름으로 북한체제는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봤을 때 한꺼번에 몰아부치면 안되니까 돌아서서 몰지 않을 만큼만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어느정도 지원을 하기는 해야겠는데, 우리의 잉여물자를 통한 지원방식도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헐값에 팔리고 기업은 세금 때문에 골치가 아프니까 회수해 준다면 기업도 잉여물자에 대해서 방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비증강에 쓰이지 않고 주민만 쓸 수 있는 물자를 선택해서 북한내부의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고 남한에 대한 동경심을 주민들이 가질 수 있는 계기를 개척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조덕송 위원 : 96년도의 남북관계는 남한의 위상이 그 어느해보다도 고심에 차 있었습니다. 교육지책이지만 KEDO 사업을 진척시키면서 서서히 경제교류의 문을 열어가는 방향, 선거에 있어서는 여당에서 내놓는 통일정책은 북한에서 강공으로 반대하면서 남한의 야권대통령이 출현하도록 혈안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미국과는 금년에 대화가 별로 없었다고 보고 역설적으로 얘기해서 리처드슨이 북한에 가서 고위관료들과 밀도깊은 대화를 나누었고, 이형철 미주국장이 현재 미국에 가 있고, 미북연락사무소 미국측 소장이 결정되어 있고, 11월 24일 마닐라 회담 3개항에 첫째가 제네바합의 재확인, 둘째 4자회담 재확인, 세번째 잠수함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국제문제화라는 개념을 넓혀서 볼 때 우리의 염원은 통일인 반면에 미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남한과 북한과의 현상유지를 공고히 하려는 방향으로 의도적이건 아니건 개입·확대와 유도·편입정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분할지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눈치가 조금만 달라지면 미국보다도 앞서서 북한에 대해서 국교문제와 더불어 경제지원을 대량으로 할 수 있는 태세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반도의 통일을 바라는 나라는 주변에 한 나라도 없습니다. 이럴 때에 공조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역설적으로 금년에는 미북대화는

있었어도 한미공조는 없었던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신중성이 없다, 융통성이 없다는 등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지만 이러한 사고방식의 발상이 메말라 버리는데서 왔습니다. 먼 장래를 내다보고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하고 국제공조도 신중히 검토하면서 해야지, 말을 함부로 해서는 국내의 민심도 제대로 살리지도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김동환 위원 : 북한과의 관계에서 통일방안은 먼 길이지만 가는 길은 경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꼭 내년도의 과업이 아니라도 제2의 KEDO구상을 해 봤으면 합니다. 현재 핵을 중심으로 한 KEDO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할 수 있으면서도 KEDO형식을 빌릴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북한과 직접 교섭하는 방식을 구상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라고 했는데 어떤 사과를 하라고 하는 것인지 개념이 막막합니다. 북한에 의한 분쟁이나 혼란이 발생해서 남한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은데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쌍방의 군인들이 희생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수준으로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 사과해야 한다고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경숙 위원 : 96년도의 남북관계는 한국이라는 행위자는 한 것이 없고, 처음부터 북한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불안해지고 하다가 잠수함 사건이 발생해서 우리가 기선을 잡을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분위기를 다시한번 정리할 수 있는 호기를 맞았었고, 남북관계는 긴장되고 어려웠지만 한미관계를 도와주는 것도 북한이 해 주었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목표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통일이라면 소프트 랜딩에 동조를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 자체도 한번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정황을 보면 북한이 개방·개혁할 가능성도 없고, 대남전략의 근본변화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년 전망으로는 변화가 올 수가 없다는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기관리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처음부터 남북한 문제를 연계를 갖지 않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미 해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최고통치자가 한번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시기마다 해 버렸습니다. 만약 여기에 대해서 변화를 시킨다면 지도자에 대한 신뢰와 리더쉽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가 유발되고 국내문제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실은 현실대로 감안하면서 처리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미공조를 끌어가는데 있어서 한국이 발언권의 순위를 갖기 위해서 사과문제는 그대로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과만 주장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평화공세를 하는 것입니다. 평화공세라는 것을 남북기본합의서 쪽으로 끌고 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우리 적십자가 국제적십자사에서 인도적인 입장에서 지원하라고 했을 때 사과없이 동조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었는데, 왜 적십자사가 그랬는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십자사만이라도 창구를 열어놓고 창구를 마음대로 쓰게 하고 정치와는 관계없이 인도주의적으로 활용을 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적십자사 차원에서 대범하게 열어놓고 당국에서는 사과를 고집하면서 남북합의서 방향으로 평화공세가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내년에 국내정세로도 가장 혼란을 겪을 수 있고, 북한이 활용할 수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노사분규입니다. 노동법 개정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대학가에서도 민노총과 연결해서 대자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선과 맞물려서 정치적으로도 이용되고 북한에서도 이용하고 해서 상당히 복잡해질 수 있는 변수도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무장관이 울브라이트가 된 것도 눈여겨 봤으면 합니다. 유엔대사를 하면서 매파쪽에 속해 있었는데, 어느 면에서는 국방장관도 공화당이고 국무장관도 매파이고 레이크 보좌관도 마찬가지로 해서 과거에 비해서 북한에게 만만하지는 않을 것 같은 인상이지만, 한편으로는 울브라이트의 행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국 중심적인 사고입니다. 여자들이 일편단심으로 밀어부치는 추진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홍진 위원장 : 금년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금년에 17차 회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통찰력과 경륜을 합쳐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위원님의 건강을 빌면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획부장 : 올해 남북관계에 여러 가지 일이 많았습니다만 17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정책입안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고, 부총리님께서도 좋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알찬 모임체가 되고, 남북관계가 전망이 어둡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지혜를 모아서 정책수립하는데 기여가 되었으면 합니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